



서교연 2023-45
2023 위탁연구 보고서

서울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서교연 2023-45

2023 위탁연구 보고서

서울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금규(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박다솜(서울인왕초병설유치원 교사)

연구협력관 : 백정희(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과장)
오미향(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팀장)
장호중(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주무관)
김창원(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주무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연구지원비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팀의 견해임을 밝혀드립니다.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유아교육비 정책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책이며, 이중 학부모 부담 경감 정책은 유아교육 공공성 정책의 핵심임.
- 정부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정책을 추진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기관의 교육, 돌봄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이 정책 추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예상 문제점, 보완 필요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국·내외 유아교육 관련 정책 사례(현황, 추진 방법, 한계 등) 등을 조사하고, 실태를 분석함.
- 각종 관련 문헌(연구 논문, 이슈페이퍼 등)을 수집하여, 현재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 정책과 관련한 관계자(학부모, 공·사립유치원, 전문가 등) 면담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을 검토함.

3.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유아교육 관련 정책연구 논문, 이슈페이퍼 등의 자료들을 중심을 정책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였음.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 유아교육 혁신방안 등 유아교육 중장기 기본계획안에서 제안된 정책제안, 영어학원 실태, 사교육 현황, 바우처, 공영형유치원 및 법인화 정책, 공공성 강화 정책 등을 정리하여 시사점을 제시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현황을 알기 위해 통계 및 정책 현황을 정리하였음.

○ 사례 및 실태분석

- 국내·외 관련 정책 사례 조사 및 실태를 분석함.
- 공영형 유치원, 유아교육 공공성 정책 등 국내외 관련 사례(우수 또는 실패)들을 분석 등 현재 유아교육 공공성 실태 분석, 사교육시장 실태 등을 검토함.

○ 전문가 면담 및 전문가 의견 분석

- 정책 관련자들의(학부모, 공·사립유치원, 전문가 등) 면담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 유아교육 및 재정 전문가, 학부모 대상으로 본 연구의 주요 정책 제언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함.

○ 정책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서울 유아교육비와 관련 정책들에 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유형별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실시함.

4. 연구 결과

-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상 유아교육비의 흐름, 누리과정 지원, 만 5세 무상교육 실행 사례(인천, 충남, 경남), 표준유아교육비 관련 연구, 교육비 바우처 제도, 바우처에 대한 선행연구,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유아 사교육 및 사교육비 실태 분석, 유아사교육비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학부모 직접 지원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임.

- 서울 유치원 및 유아교육비 관련 통계 현황(유치원 수, 편성 학급 수 및 유아 수, 교원 및 기관 근속연수, 기관 운영, 서울시 유치원 급식 운영 등), 서울시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음. 서울시 유치원 중 표준유아교육비를 상회하는 유치원들이 절반 이상임.

- 국가재정지원에 대한 학부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 설립유형에 따라 기관장, 교사, 학부모의 의견에 이견이 있었음.

- 누리과정비 지원, 학부모 부담 경감 체감 정도, 누리과정 인상 및 적절 인상 범위, 우선 개선 분야, 사교육비 투자 가능성, 투명성 확보 필요,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 우려, 교부금 안정화에 대한 항목들을 질문하였음.

- 유아교육비 및 교부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전문가는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었으며,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하여 대부분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함.
-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증가 유치원의 경우 학급운영비 차등지원과 공공재정 부정 청구 유치원 재정지원 중지 및 환수에 대하여 대부분 중요하다고 보았음.
- 학부모 323명을 대상으로 서울 유아교육비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부담 경감이 실질적으로 경감된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 여전히 학부모부담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누리과정비의 적정인상 범위는 5-10만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하여 대부분 우려하였음. 이에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였음.

5. 정책 방안 도출

가. 정책 방향

- 유아교육비가 인상되어도 학부모가 체감하는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무조건적인 학부모 직접 지원보다는 기관 지원을 위해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정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표준유아교육비보다 원비가 이미 높은 유치원들이 절반 이상이므로 무상교육 정책을 바로 실시하기 어렵고, 이미 원비가 높은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원비를 낮추도록 권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하게 제시된 후 서울 유아교육비 정책과 관련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정책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기임.
- 서울은 기관별 편차도 심하고 원비 자체가 높은 곳이 많아 실효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므로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교육과정, 시설환경 등 전반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시도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함.
- 공교육 내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사교육에 대한 욕구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기관 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사교육(비)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기관 내에서 운영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발달과 흥미에 적절한지도 논의되어야 함.

- 재정 지원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립 기관장을 제외하고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지점이므로 재정 지원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함,
 - 모든 지원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기에 법인 전환, 회계 투명성 정책 방안 마련, 감사제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규제 감독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 본 연구 외에 후속 연구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기관의 적정 규모화 방안을 연구해야 함.
 - 국가 차원의 기관 적정 규모화 방안을 연구하고, 시도교육청에 모든 재정 부담을 떠맡기지 않을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법인화 기관일수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립유치원의 경우 법인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법인 유치원에 초중등과 마찬가지로 최소 교원 인건비 수준의 재정지원을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불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법제화하여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교육 재원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특히 유아의 정서지원,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함.
- 누리과정비 제도는 특히 개선이 필요해 보임.
 - 공사립 기관의 차이에 상관없이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유아무상교육비 제도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및 연구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유보통합을 앞두고 논란이 되는 바우처 부모 직접지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요구 또는 일부 교육청 등의 요구 등에 대해서도 ‘기관지원+바우처 간접지원’의 혼합설계 형식으로 완전 무상에 근접하도록 재구조화가 필요해 보임.

나. 정책 과제 제안

- [정부과제] 누리과정비 30만원 수준 인상 약속 이행 및 지자체 지원금 매칭 마련
- [정부과제] 학부모 부담금 경감을 위한 5만원 지원에 대한 국고중액 필요
- [정부과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화 정책 제도화
- [정부과제] 수익자부담금 적정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정부과제] 무상교육비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 [정부과제] 원비 산정 방식 변경 및 법률 개정이 필요
- [중장기과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유보통합, 서울 여건,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고려한 무상교육제도 모형 구상 필요
- [단기과제] 타 시도 및 지자체 유치원 지원비를 고려한 추가 재정지원비 고려
- [중장기과제] 공영형 유치원 재약정 유지 및 법인 유치원 우선 지원(사립교직원 인

건비 지원 등)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

- [단기과제] 공공성 강화 조건 충족 유치원 대상 재정 지원 정책 유지
- [단기/중장기과제]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 및 사교육 단속을 강화
- [단기/중장기과제] 지자체 유치원 지원비를 고려한 추가 재정지원비 고려
- [단기/중장기과제]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 단속 강화
- [중장기과제] 인구정책 및 교육 공공성 기반, 공립유치원 활성화 및 단계적 통폐합을 위한 중장기방안 설계 필요(향후 5년, 10년 계획 마련 필요)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4
4. 유아교육비 관련 문헌분석	8
II. 연구의 배경 및 정책 현황	33
1. 서울 유치원 및 유아교육비 관련 통계 현황	33
2. 서울시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현황 분석	42
III. 서울 유아교육 재정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에 대한 현장 의견 분석	52
1. 면담 분석 결과	52
2.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90
3.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107
IV. 서울 유아교육비 부담경감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115
1. 정책 방향	115
2. 정책 과제	121
참고문헌	127

부록	131
[부록 1] 면담 질문지	131
[부록 2] 전문가 의견 조사 참여 전문가 명단	132
[부록 3] 전문가 의견조사지	133
[부록 4] 학부모 의견조사지	138
[부록 5] 학부모 의견조사 기타의견	141

표 차 례

<표 I -1> 전문가 의견조사 문항 구성	5
<표 I -2> 학부모 설문조사 문항 구성	6
<표 I -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의 흐름 및 유아학비 관련과제와 핵심과제 ...	10
<표 I -4> 누리과정 지원단가 연도별 변화 추이	11
<표 I -5> 인천 및 충남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계획 비교	14
<표 I -6>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16
<표 I -7> 표준유아교육비 해외 사례	16
<표 I -8> 유치원, 어린이집 바우처 지원 금액 및 방법	18
<표 I -9> 양육지원 제도 및 현황	20
<표 I -10> 바우처 관련 국책연구보고서	21
<표 I -11> 바우처에 대한 학계 논문	22
<표 I -12>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	24
<표 I -13> 서울시 1일 4시간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 추이	25
<표 I -14> 서울시 1일 3시간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 추이	25
<표 I -15> 유아 사교육비 선행연구	31
<표 II -1> 서울특별시 설립유형 별 유치원 수, 편성 학급 수 및 유아 수	33
<표 II -2> 서울시 연령별 유치원, 어린이집 취원율	34
<표 II -3> 서울시 교원 수	34
<표 II -4> 유치원 설립유형별 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현황	35
<표 II -5> 유치원 설립유형별 연령 수업일수 현황	36
<표 II -6>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시간 현황	37
<표 II -7> 유치원 방과후과정 참여원아 수 및 강사 수 현황	38
<표 II -8> 유치원 설립유형 별 급식운영 방식 현황	38
<표 II -9> 유치원 설립유형 별 급식유아수, 공동배치영양교사 수, 조리사 수 현황	39
<표 II -10> 유치원 설립유형 별 건축년도 현황	40
<표 II -11> 누리과정 운영비(국가지원금) 연도별 추이	40
<표 II -12> 설립유형에 따른 서울시 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연도별 추이 (3개년)	41
<표 III -1> 응답자 특성	52

<표 III-2> 면담 내용 정리표	85
<표 III-3> 응답자 특성(전문가)	90
<표 III-4> 학부모 부담 경감 체감	91
<표 III-5> 누리과정비 인상에 대한 인식	91
<표 III-6> 걱정 인상 범위	92
<표 III-7> 학부모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기대	93
<표 III-8> 누리과정비 인상 시 우선 개선 분야	93
<표 III-9> 학부모부담비 경감 시 사교육비 투자 가능성	94
<표 III-10> 재정지원 확대 시 서울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인식 ...	95
<표 III-11>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생각	96
<표 III-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 시 공교육 안정성, 지속성 혜손 가능성에 대한 생각	97
<표 III-13>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	98
<표 III-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우선 투자 분야	99
<표 III-15> 원비 인상률 상한제 운영 개선에 대한 인식	100
<표 III-16> 무상교육 추진에 대한 인식	101
<표 III-17> 수익자부담금 관리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103
<표 III-18>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인식	105
<표 III-19> 응답자 특성(학부모)	107
<표 III-20> 학부모 부담 경감 체감	108
<표 III-21>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108
<표 III-22> 누리과정비 인상에 대한 인식	109
<표 III-23> 걱정 인상 범위	110
<표 III-24> 누리과정비 인상 시 우선 개선 분야	110
<표 III-25> 학부모부담비 경감 시 사교육비 투자 가능성	111
<표 III-26>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생각	112
<표 III-27>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	113
<표 III-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우선 투자 분야	113

그림 차례

[그림 I-1] KICCE 8차 토론회-차담회 포스터	7
[그림 I-2]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11
[그림 I-3]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비 세부 산출내역(인천)	15
[그림 I-4] 서울 지역구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황	26
[그림 I-5] 서울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실시	27
[그림 II-1] 서울특별시 공립 및 사립유치원 수, 학급 수, 유아 수	33
[그림 II-2] 서울시 연령별 유치원, 어린이집 취원율	34
[그림 II-3] 유치원 설립유형별 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현황	35
[그림 II-4] 유치원 설립유형별 연령 수업일수 현황	36
[그림 II-5] 유치원 설립유형 별 급식운영 방식 현황	39
[그림 II-6] 유치원 설립유형 별 건축년도 현황	40
[그림 II-7] 전국 및 서울 학부모부담금 추이(2022-2023년)	41
[그림 II-8] 서울시 학부모부담금이 높은 1-5위 유치원	42
[그림 II-9]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43
[그림 II-10] 사립유치원 원비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46
[그림 II-11]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	48
[그림 II-12]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 현황	49
[그림 II-13] 주체별 추진 체계	51
[그림 III-1] 부모 부담 경감 체감	91
[그림 III-2] 누리과정비 인상에 대한 인식	92
[그림 III-3] 적정 인상 범위	92
[그림 III-4] 학부모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기대	93
[그림 III-5] 누리과정비 인상 시 우선 개선 분야	94
[그림 III-6] 학부모부담비 경감 시 사교육비 투자 가능성	95
[그림 III-7] 재정지원 확대 시 서울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인식 ...	96
[그림 III-8]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생각	97
[그림 III-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 시 공교육 안정성, 지속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생각	97
[그림 III-10]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	98

[그림 Ⅲ-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우선 투자 분야	99
[그림 Ⅲ-12]	원비인상률 상한제 운영에서 유치원비 산정방식 고시 변경 필요	100
[그림 Ⅲ-13]	원비인상률 상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100
[그림 Ⅲ-14]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완전 무상교육 실시	102
[그림 Ⅲ-15]	교사 인건비 지원 + 표준유아교육비 지원	102
[그림 Ⅲ-16]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	103
[그림 Ⅲ-17]	수익자부담금 관련 잔액 반환 및 집행내역 공개 의무조항 추가	104
[그림 Ⅲ-18]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증가 유치원의 경우 학급운영비 차등지원	105
[그림 Ⅲ-19]	공공재정 부정청구 유치원 재정지원 중지 및 환수	105
[그림 Ⅲ-20]	공공성 강화 조건 준수 유치원에 재정지원	106
[그림 Ⅲ-21]	공영형 유치원 재약정 추진	106
[그림 Ⅲ-22]	부모 부담 경감 체감	108
[그림 Ⅲ-23]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109
[그림 Ⅲ-24]	누리과정비 인상에 대한 인식	109
[그림 Ⅲ-25]	적정 인상 범위	110
[그림 Ⅲ-26]	누리과정비 인상 시 우선 개선 분야	111
[그림 Ⅲ-27]	학부모부담비 경감 시 사교육비 투자 가능성	112
[그림 Ⅲ-28]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생각	112
[그림 Ⅲ-29]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	113
[그림 Ⅲ-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우선 투자 분야	11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교육비 정책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책이며, 이 중 학부모 부담 경감 정책은 유아교육 공공성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유아교육 분야에서 학부모 부담 정책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유아교육선진화방안, 유아교육혁신방안, 국공립유치원 다양화 방안, 공영형 유치원 정책 등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전국적으로 만 3~5세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이 90%를 넘어서고 있으나, 저출생 현상과 함께 여전히 지역별, 기관별 교육비 편차가 양극화되어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유치원의 폐원이 늘어나고 있고, 유아 수 감소로 유아교육의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유아 공교육 제도를 확립시켜 줄 수 있는 유아학교 확립이 부족한 실정이고, 경쟁교육의 심화로 유아대상 영어 학원은 지난 10년간 더 늘어나고 있다(MBN, 2023. 03. 27.).

향후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필요성 증대와 모든 유아의 공평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사립유치원의 교육비 부담 완화는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교육부·보건복지부 유보통합 추진 방안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교육비 등 학부모 부담 단계적 경감 추진」이 포함되었으며, ‘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 유보통합 정책과 함께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정책을 추진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기관의 교육, 돌봄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24년 5세를 시작하여 누리과정 지원금(현재 28만원, 유특회계) 외 추가지원을 시작으로 ‘26년까지 연차별로 4세, 3세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상 규모는 표준유아교육비의 실제 학부모 추가 부담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추가 재원은 교부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비 대폭 지원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시스템, 원비 체계, 지원항목 법제화 등의 제도개선 방향과, 사립 교직원의 투명한 보수 책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예컨대 유아교육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 유치원 학비경감 지원지침 제정, 시도교육청 학비 지원지침, 조례 제정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3).

현재 유아교육비는 표준유아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부분 무상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아교육비를 비롯한 학급운영비 등 다양한 루트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고 있으나, 학부모 부담금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약 20만원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SBS, 2022). 정부는 유보통합 정책시 완전무상교육 정책까지는 담보할 수 없으나, 정책의 학부모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치원 원비제도와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유아교육비를 재원하여도 투입대비 학부모 체감 효과로 연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들도 있다. 사립유치원의 원비 구조가 지역별, 규모별로 다르며, 표준유아교육비를 상회하는 유치원에 대한 정책 마련의 어려움, 재정투입을 늘려도 유아교육법 25조에 따라 유치원에서 추가 원비를 정하여 학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조, 원비 인상률 상한제 정책의 한계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시도가 만 5세 완전 무상교육을 도입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 사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시도별 원비 차이가 커서 보편적으로 당장 도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임혜성, 김윤희(2022)는 OECD에서 발간한 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24개국을 대상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 set ideal types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유아교육의 접근성, 공적비용, 구조적 질(교사 대 유아 비율)의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접근성은 좋으나, GDP 대비 국공립기관에 지출한 공적비용의 비율이 낮고, 국공립기관의 비율이 낮아, 교육의 공공성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김영옥(2013)의 연구에서는 OECD 국가는 기본 교육을 위한 반일제를 기반으로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며, 국가재정규모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를 지적하며, 표준교육비에 기초한 무상교육비 지원액 책정 기준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 시 부모 학비 경감 바우처와 교원 인건비를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는데, 표준교육비 산출 시 초등교원의 학력과 자격에 해당하는 교원의 임금을 산정하고, 교원의 인건비를 확보하여 유치원은 완전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무상교육비 지원과 연계하여 초등 의무교육에 준하는 유아교육제도로서 질 관리 체제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2021)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완전무상교육을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재정지원을 말한다면, 급식비, 특성화비, 방과후과정비의 수익자부담의 경비는 표준유아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저출생으로 유아 수가 향후 5-10년간 급격히 줄어들고,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한 유아무상교육이 가능해질 것을 가정한다면 이에 대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표준유아교육비 이상의 교육비를 기반으로 하는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준 마련하려 자율형 사립유치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방법,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시 유치원 법인화를 통한 차등지원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또는 설립유형과 관계없는 재

정지원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공영형 유치원 및 법인 유치원을 우대하고 혜택을 주는 정책, 또는 법인화를 유연하게 하는 정책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도 제안한 바 있다. 재정지원을 늘리기 전, 공공성이 높은 유아학교제도의 구축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단계적 무상교육으로 유아기간학제화 안착, 무상유아급식체제 마련, 사립유치원 법인화 및 퇴로 마련 방안 제안, 장애영유아 의무교육권 보장, 미래 유아학교 모델 구축을 위한 공간 지원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박창현·김근진·이재희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가 책임지는 사립유치원 운영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에 단계적 법인화 모델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유아교육 제도가 유아무상교육에서 기간학제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하였다. 일본식 유치원 법인화는 70-80년대 자기 소유규정 완화에서 폭넓게 채무임대와 담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채무를 유치원 회계에서 일부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화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저출생으로 폐원율이 높은 사립유치원에 도입 가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인화 정책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유아교육비 지원은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과 공공성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무상교육의 목적과 범위, 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 유아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익자 부담을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깊이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준유아교육비 이상의 교육비를 받고 있는 절반가량의 서울의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지원의 문제는 유보통합 정책을 함께 고려할 때 교육 평등성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 정책보다 앞서 교육감 3기 공약으로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서울 유아교육의 상황은 타도에 비해 고액 원비(전국 최고 수준의 학부모 부담금), 높은 사립유치원 비율, 지역 편차 등이 보다 높은 실정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제도를 통한 완전 유아무상교육 정책의 실현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의 맥락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확대 시 적합성, 문제점, 보완 사항, 사립유치원 공공성 및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필요하다.

유보통합을 앞두고 선도교육청 사업 등 보육시설에 대한 교부금 사용을 위한 노력들이 정치,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하고도 평등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해 유아의 최선의 이익이 부합하는 재정투입 정책과 제도 개선이 우선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보다 확대될 경우, 정책의 적합성, 예상 문제점, 보완 사항, 사립 공공성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요청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정책 및 교육감 3기 공약인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정

책」 추진에 앞서 재정 투입 전에 선행되어야 할 예상 문제점, 보완 필요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정책 실효성 확보하는 것이다.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의 예상 문제점, 보완 필요 사항, 사립유치원 재정 투명성 확보 및 공공성 방안 등을 고려해보고, 서울 교육여건에 맞는 적합성, 문제점, 보완 및 필요 사항 검토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본 연구의 제안 사항을 토대로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 예측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 및 정책 실효성 확보에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내용

이상의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학부모 부담 대폭 경감 정책 추진에 따른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 시 재정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내외 유아교육 관련 정책 사례(현황, 추진 방법, 한계 등) 등을 조사하고, 실태를 분석하였다.

둘째, 각종 관련 문헌(연구 논문, 이슈페이퍼 등) 수집하여, 현재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정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과 관련한 관계자(학부모, 공·사립유치원, 전문가 등) 면담 및 의견 수렴을 하였다.

넷째, 서울 유아교육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 도출과 관련 정책을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문헌분석

- 유아교육 관련 정책연구 논문, 이슈페이퍼 등 수집 및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유치원 공공성, 법인화, 무상교육 관련 국책연구기관 보고서 및 이슈페이퍼, OECD 해외 자료를 검토하였다.
-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 유아교육 혁신방안 등 유아교육 중장기 기본계획안에서 제안된 정책제안 등을 정리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나. 사례 분석

- 국내·외 관련 정책 사례 조사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공영형 유치원, 유아교육 공공성 정책 등 국내외 관련 사례(우수 또는 실패)들을 분석 등 현재 유아교육 공공성 실태 분석, 사교육시장 실태 분석(지난 5년간 영어유치원 확대 비율 등, 원인 분석) 등을 검토하였다.

다. 참여자 면담 분석

- 정책과 관련한 관계자(학부모, 공·사립유치원, 전문가 등)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 ▷ 조사목적 : 서울 유아교육 재정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 조사대상 : 관련 정책 관계자(국공립/사립유치원 원장, 교사, 학부모, 재정전문가, 행정가) (약 14-15명)

라. 전문가 의견 분석

- 서울시 내에 거주하는 10명의 학자들(유아교육 및 재정 전문가)을 중심으로 본 연구 의주요 정책 제언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11월 3일에서 11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온/오프라인 조사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유아교육비에 대한 의견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1> 전문가 의견조사 문항 구성

영역	문항
1. 서울유아교육비에 대한 의견	- 학부모부담경감 체감정도 - 누리과정비 인상에 대한 인식 - 누리과정비 인상 걱정 범위 - 학부모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기대 - 학부모부담경감시 사교육비 투자 가능성 - 재정지원 확대시 서울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인식 -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손실에 대한 생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시 공교육 안정성, 지속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생각 - 국가차원의 추가 재정지원에 대한 인식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우선 투자분야
2.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 원비인상률 상한제 운영 개선에 대한 인식 - 무상교육 추진에 대한 인식 - 수익자부담금 관리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인식
3. 추가 의견	- 기타 추가 의견 기술
4. 개인특성배경	- 소속기관, 성별, 관련분야 경력

마. 학부모 설문조사

- 학부모 대상 323명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11월 3일에서 11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온/오프라인 조사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문항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2> 학부모 설문조사 문항 구성

영역	문항
1. 서울유아교육비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부담경감 체감정도 - 누리과정비 인상에 대한 인식 - 누리과정비 인상 적정 범위 - 누리과정 인상시 우선 개선 분야 - 학부모부담비 경감시 사교육비 투자 가능성 -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생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우선투자 분야
2. 기타 의견	- 기타 추가 의견 기술
3. 개인특성배경	- 소속기관, 성별, 관련분야 경력

바. 정책 토론회 개최

- 서울 유아교육비와 관련 정책들에 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사립유치원 관리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정책토론회는 차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의회의원, 연구자, 현장 전문가, 학부모가 함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유아교육비 체감도와 관련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KICCE 8차 토론회 - 차담회

서울 유아교육 이야기 : 유아교육비에서 유아학교까지

2023. 11. 17 (금) 14:00 - 16:00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2회의실

주최 서울특별시의회, 육아정책연구소



일정	시간	세부내용
	13:50 ~ 14:00	사전 준비
	14:00 ~ 14:20	사회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인사말 전병주 서울특별시교육위원 내빈소개 박강산 서울특별시교육위원 외
	14:20 ~ 14:30	참석자 전원 기념사진 촬영
	14:30 ~ 15:55	좌장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이인숙 서울꿈동산아이유치원 원장 김경미 햇빛유치원 원장 박수진 나랑유치원 원장 박태규 한양제일유치원 이사장 이은진 한양제일유치원 학부모 김은주 슬기유치원 학부모 교육위원회 종합토론
	15:55 ~ 16:00	폐회

[그림 1-1] KICCE 8차 토론회-차담회 포스터

4. 유아교육비 관련 문헌분석

가.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상 유아교육비의 흐름

'05년 이후 유아교육재정 규모는 연평균 18% 이상 증가하고, 만 5세아를 둔 가구의 70%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종일반 운영을 전체 유치원의 95%로 확대하였으나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아학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도시지역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질 높고 저렴한 유치원이 부족했다. 또한 당시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급증하는 등 유아교육의 사교육화 경향이 심해지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유아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11). 이는 “아이가 행복한 미래형 학교”를 비전으로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 3가지 목표를 두고 유아학비 부담 경감, 선진 유아교육제도 구축,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우수 교원 배치·활용, 유아교육 지원체계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 관련자를 대상으로 선진화 정책의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유아 무상교육 확대와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의 탈법 단속 및 개선이 필요도가 가장 높은 과제였으며 효과가 가장 높은 과제는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로 꼽혔다(김은영·최은영·조혜주, 2011).

'12. 3. 21. 개정된 「유아교육법」에는 유아교육 선진화 과제 추진과 5세 누리과정을 3~4세까지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반일제, 시간 연장제, 종일제로 구분되던 유치원 교육과정을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였으며 무상교육 확대 등 유치원 지원 확대에 따라 '12.3.부터 국·공립유치원에 유치원 회계가 설치되었다. 이에 유아 무상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고, 무상교육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제1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13~'17)」은 생애 출발선의 동등한 교육·보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기관 이용 시 비용 경감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5세 누리과정 도입, 2013년 3~4세 누리과정 확대 추진을 했다. 또한 3~5세 유아 1인당 월 22만원을 지원하였으며(국공립유치원 원아는 월 6만원 지원),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모든 유아에게 월 7만원(국공립유치원 원아는 월 5만원 지원)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2013년도 이후 세수 감소로 정부의 당초 재정 추계가 빚나가며 생긴 정부추계액과 실교부액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누리과정 재정의 안정성 전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윤진·김지현·이민경, 2016). 유아의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측면에서는 연도별 누리과정 수혜 유아 수 비율 확대가 100% 되었으며 누리과정 및

방과후과정비 보편적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체감도 및 학부모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이윤진·김지현·이민경, 2016). 하지만 유아의 64%가 다니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의 학부모는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통해 유치원의 설립유형에 따라 학부모의 만족도가 다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유치원 취학아동 중 75%가 사립유치원에 취학하여 국공립·사립 간 학부모 부담 격차는 상존하였다. 또한 2012년 교육부가 계획하였던 단설 유치원과 병설 유치원의 신설 및 학급 증설 수가 달성되어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며 부모가 1순위로 지원한 기관에 재원하는 비율 또한 높았다(이윤진·김지현·이민경, 2016).

「제2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18~’22)」에서는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비전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교육문화 혁신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추진 과제는 1)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2)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3)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4) 유아교육·혁신을 위한 행정 시스템 구축을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중 교육비 부담 경감이 시행되었으며, 2019년까지 월 22만원이었던 유치원 학비 지원단가를 2020년도에 월 24만원, 2021년도에 월 26만원, 2022년도에는 월 28만원까지 인상하고, 원비 인상을 상한제 준수 유치원에 학급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였다. 이에 전국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19만8천원에서 16만8천원으로 총 3만원 감소한 바 있다(교육복지정책국(유아교육정책과), 2018).

이후 육아정책연구소,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학계 및 유관단체 등 협의회, 100인 규모 유아교육·보육전문가 설문조사하여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22.5.~’22.12.).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은 저출생, 유·보통합 등 정책 환경 및 유아교육 서비스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간의 유아교육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2023년 4월에 관계부처합동에서 저출생, 유·보통합 등 정책 환경 및 유아교육 서비스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간 유아교육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수립 및 발표(’23.1.30)되면서 유아 학비 대폭 경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3-5세 유아 학비 대폭 경감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2023년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24~’25년에는 4~5세 대상으로 추진하여 ’25-’27년에는 3세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23).

<표 1-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의 흐름 및 유아학비 관련과제와 핵심과제

구분	선진화 추진계획 ('09~'14)	제1차 유아교육기본계획 ('13~'17)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18~'22)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3~'27)
비전	아이가 행복한 미래형 학교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문화 혁신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실현	국·공·사립의 상생발전과 유·보통합으로 유아교육분야 국가책임 강화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학비 부담 경감 - 선진 유아교육제도 구축 -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 우수 교원 배치·활용 -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기회 확대 -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 유치원 운영 효율화 - 교육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 건강 발달 지원 - 유아교육·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 교원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 -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관련 과제	유아학비 부담 경감	유아교육 기회 확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핵심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 -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운영 활성화 -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의 탈법 단속 및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무상교육 지속 확대 - 유치원 신증설의 적정화 - 유치원 시설·설비의 적정 기준 마련 - 내실 있는 유치원 정보 제공을 위한 공시제도 정착 -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확보 -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한 실질적 교육기회 평등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 및 3-5세 교육비 대폭 경감 -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모델 다양화 - 유아교육기관 교육여건 개선 - 디지털 치유 및 안전한 디지털 경험 지원 - 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 확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11.).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pp. 7, 9에서 발췌.
 한국교육개발원(2012)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pp. 8, 9에서 발췌.
 교육복지정책국(유아교육정책과)(2018).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18~2022). p. 8에서 발췌.
 관계부처 합동(2023. 4.).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p. 9에서 발췌.



[그림 1-2]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4.) 제3차 (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p.9

나. 누리과정 지원

2012년 만5세 누리과정 도입, 2013년 만3~4세 확대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2016년까지 지원단가 월 30만원을 약속하였으나(관계부처 합동, 2011. 5. 2), 2023년 지원 단가는 28만원이다. 매년 매년 2만~3만원씩 인상하여 2016년 30만원을 이룬다는 계획이었으나, 2013년 22만원 이후 2019년까지 동결되다가 2020년 24만원, 2021년 26만원 2022년 이후 지금까지 28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현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2022년부터 동결된 상태이며, 학부모부담금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비 지원예산은 2024년에도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는 정책대선 공약집에서부터 유보통합정책의 첫 단계로 국공립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여 시설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준, 교사처우 수준, 학부모담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였다(제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2022).

<표 1-4> 누리과정 지원단가 연도별 변화 추이

단위: 천 원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지원 단가	177	200				220				240	260	280	

자료: <https://www.moe.go.kr/main.do?s=moe> 각 학년도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서 발췌.

현재 지원단가를 살펴보면, 사립유치원 기준, 누리과정비 28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3-5세 유아에게 지원하고 있다(국공립의 경우, 누리과정비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교육부, 2023b).

현재 완전무상교육 체제가 아니므로, 학부모부담금이 발생하고 있고, 누리과정 지원을 제외한 학부모 부담금을 살펴보면, 2023년 유아 1인당 국공립유치원은 월 7,632원, 사립유치원은 월 159,388원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유치원 알리미, 2023).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3조 2,106억원(만 3-5세 82만 3,435명), 누리과정비 지원을 통해 정부는 지금까지 공정한 출발선 보장, 취학전교육의 질 제고, 교육과 보육의 서비스격차 완화, 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등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해왔다(이진화·박창현·윤지연, 2015).

아울러 현 정부는 유보통합 1단계로 내년 2024년, 만5세 자녀에게 유아학비 및 보육료 5만원 추가지원 계획을 밝히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거치지 않고, 재원은 교부금으로 5만원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 핑크로 올해 11조, 내년 6조 8,748억 원 감소하고 있어 교육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3).

다. 만 5세 무상교육 실행(인천, 충남, 경남 사례)

1) 인천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확대와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2023. 5. 16.).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을 근거로 2023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계획을 세우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사기 진작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에 따른 운영비 및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2023년 기준 교육지원청에 임용보고 된 사립유치원 교원 중 대상자에게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을 보조 지원하고 2022년 기준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유치원 원비 동결 및 인하 시 사립유치원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점검하고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사립유치원에 총 결제액의 최대 0.5%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한다. 나아가 2022년 기준 무상교육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정부 지원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표준유아교육경비(55만7천원) 기준의 교육과정비를 전액 무상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였다(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2022. 2.).

인천시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계획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사립유치원 수가 매년 감소하지만, 학비 지원 및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지원 총액 및 원당

평균 지원액은 증가했으며 원비평균을 기반으로 한 원비안정화 정책을 통해 인천 평균 원비 초과 유치원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원비 인상 유치원은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약 13.5%는 원비 인상 상한률 내에서 인상하고 있어 원도심 및 저가형성 지역 유치원의 교육력 및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학급운영비 지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기준의 무상교육 추진 방향에 맞추어 표준유아교육비 전액까지 학부모 부담분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교육청 재정여건 및 유아교육기회 우선 보장 연령을 고려하여 만 5세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였다. 이의 기대효과는 1) 사립유치원 유아의 균등한 학습권 보장,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 보장, 2)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참여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유치원의 교육력, 충원율 및 학부모의 유아교육 만족도 제고, 3) 인천 원비 수준 및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예상 편성·집행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추진이다(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2022. 2.).

나) 충남

충청남도는 2021년 도내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을 만 5세 유아에서 만 3-5세 유아로 확대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체 지원액 295억원 중 충청남도가 59억원을, 충청남도교육청이 236억원을 분담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교육감 고유 사무이고 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하였다(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2022).

충청남도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표준유아교육비 차액지원)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질 제고로 유아교육 안정화 기여에 목적을 두고 추진된 사업이다. 이의 기대효과는 1)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차액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해소, 2) 유아교육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3) 유아교육 질 향상이다(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2022).

인천시, 충청남도 모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5세이며, 지원 기간 또한 2022. 3. 1부터 1년으로 동일하다. 지원 금액은 인천이 유아 1인당 월 217,000원이고, 충청남도는 유아 1인당 월 193,000원이다. 지원 항목은 인천은 표준유아교육비 중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 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이며, 이를 지원금 형태로 지원한다. 충청남도의 지원 항목은 교원인건비, 일반교육활동비, 방과후 교육활동비, 그 밖의 교육활동비이며, 이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2022).

<표 1-5> 인천 및 충남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계획 비교

구분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계획 (인천)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계획 (충청남도)
지원 대상	정부지원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무상교육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사립유치원(동의서 제출)에 재원중인 만 5세 유아(단, 외국국적 유아 포함)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동의서를 제출한 충남 도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 - 현재 유아학비(교육과정비)를 지원받고 있는 만 3~5세 재원 유아
지원 기간	2022. 3. 1. ~ 2023. 2. 28.				2022. 3. 1. ~ 2023. 2. 28.
지원 금액	유아 1인당 월 21만7천원				유아 1인당 월 19만3천원
지원 항목	구분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 경비	표준공통 운영경비	① 교원인건비(항) - 교원 인건비(수당)는 19만3천원 중 70%이상 사용 불가 ② 일반 교육활동비(항) - 교사 연수·연구비(목)는 사용 불가 ③ 방과후 교육활동비(항) - 보조금 19만3천원 중 7만원까지 사용 가능 ④ 그 밖의 교육활동비(항) ※ 위 항목 외 사용불가(적립금, 관리운영비, 시설·설비·비품비 등)
	표준 유아 교육비	기본급 및 제수당	교구비	비정규직 인건비 공공요금	
		맞춤형 복지비	재료비	기본적 경비	
		법정부담금	설비비	학생복지비	
수익자 부담 경비	구분	교육비	급식비·간식비	그 밖의 수익자 부담	-
	수익자 부담 경비	입학금	일반 교육과정 급식비·간식비	현장체험 학습비	
		교육과정 수업료		통학차량 이용비	
지원 형태	지원금(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보조금(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특성	유아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외 목적으로 사용 불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과정, 방과후과정반 운영 외 목적으로 사용 불가
지원조건	①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지원'에 동의 ※ 학부모 설명회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참여, 미참여 여부에 대한 학부모 동의 여부를 조사(의견수렴)하여 결정 ② 교육과정 학부모부담금(원비) 징수 금지 ※ 방과후과정 정부지원금(월 70천원) 외 방과후과정 특성화비를 포함한 일체의 학부모부담금은 원비 인상 상한률(1%) 내에서 인상 가능하나, 최대 월 70천원 이내에서 비용 규제 ※ 월 70천원 미만 유치원은 실비 징수 ※ 학부모부담금 징수 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실시(회의록 작성) ③ K-에듀파인 회계시스템 사용 ④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사용 ⑤ 유치원 원비 인상 상한률 준수('22년 원비 인상 상한률 1%) ⑥ 학급 담임의 경우 반드시 8시간 상시근무 교사 채용				① 학부모 부담금(원비)징수 금지 단, 특성화활동비(교재포함) 최대 월 30,000원까지 징수 가능 ※ 위의 학부모 부담금 징수 시 운영위원회 자문 실시(회의록 작성) ※ 현물 요구 금지(학용품, 재료 등 현물을 학부모에게 요구 금지) ②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사업'에 동의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과 학부모 설명회를 거쳐 사업의 동의, 미동의 여부를 결정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미동의 유치원에 대한 지원 제한

구분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계획 (인천)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계획 (충청남도)
지원방법	<p>⑦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 준수 - 교육과정(4~5시간) 및 방과후과정(8시간 이상) 운영시간 준수 - 정보공시, 유치원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부모에게 적극 안내 - 교육과정 내 특성화 활동 운영 금지 및 특성화 활동 패키지화 금지 - 유아 1인당 1일 1시간 1개 활동 이내의 특성화 활동 운영지침 준수 등</p> <p>⑧ 각 호의 지원조건에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정지 및 환수 조치</p>	<p>접수, 신청(사립유치원) → 대상자 확인, 예산 신청(교육지원청) → 예산액 확인, 재배정(시교육청) → 지원금 지급(교육지원청) → 정산 및 집행결과(사립유치원 교육지원청)</p>
지원방법	<p>접수, 신청(사립유치원) → 대상자 확인, 예산 신청(교육지원청) → 예산액 확인, 재배정(도교육청) → 보조금 지급(교육지원청) → 예산편성, 집행(사립유치원)</p>	<p>접수, 신청(사립유치원) → 대상자 확인, 예산 신청(교육지원청) → 예산액 확인, 재배정(도교육청) → 보조금 지급(교육지원청) → 예산편성, 집행(사립유치원)</p>

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초등교육과)(2022).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계획. pp. 5, 6, 8, 9.에서 발췌.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과)(2022).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계획(표준유아교육비 차액지원). pp. 1-4.에서 발췌.

□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희망참여를 원칙으로 한 무상교육비 세부 산출내역

[ 부분은 무상교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

2022학년도 정부지원 교육과정비 인상분(20만원) 및 교육청 지원 무상급식비 인상분(1만원) 반영

'22년 유치원 원비: 교육과정비(①+②) + 방과후 과정비 및 별첨에서 정한 기타 학부모부담금(③)

'21년 표준유아교육비 기준 (557천원, ①+ ②)			③ 방과후 과정 및 기타 학부모부담금								
표준인건비 (교·직원 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교재교구비, 재료비, 실비비)	표준공동운영경비 (비정규직인건비, 공공요금 등)									
→ 표준유아교육비: '교육과정비'를 의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아 1명에게 소요되는 일체의 직·간접적 기준운영비			<p>①-1 방과후 과정비 외 ①-1-1 방과후 수업료·교재교구비·복합비 및 원목가방·점심비 등 일체</p> <p>※ 일체의 학부모부담금은 2021년 원마인상 상한율 2% 이내에서 월 최대 70천원까지 규제</p>								
① 정부지원 교육과정비(340만원)		② 교육청지원 교육과정비(217만원)	<table border="1"> <tr> <td>①-1 방과후 과정비</td> <td>①-2 방과후 과정비 등</td> </tr> <tr> <td>정부지원</td> <td>학부모부담금</td> </tr> </table>	①-1 방과후 과정비	①-2 방과후 과정비 등	정부지원	학부모부담금				
①-1 방과후 과정비	①-2 방과후 과정비 등										
정부지원	학부모부담금										
<table border="1"> <tr> <td>①-1 교육과정비 280만원 (10원 인상)</td> <td>①-2 무상급식비 60만원</td> <td>①-3 학급운영비 (23만원)</td> <td> <p>표준유아교육비 기준 정부지원 원비 학부모부담금 (194만원)</p> <p>방과후 과정비 70만원 초과(9개원 6%)</p> </td> </tr> </table>	①-1 교육과정비 280만원 (10원 인상)	①-2 무상급식비 60만원	①-3 학급운영비 (23만원)	<p>표준유아교육비 기준 정부지원 원비 학부모부담금 (194만원)</p> <p>방과후 과정비 70만원 초과(9개원 6%)</p>			<table border="1"> <tr> <td>방과후 과정비 (70만원)</td> <td>특성화 등 방과후 과정 추가 비용 및 기타 부담금 일체</td> </tr> <tr> <td>정부지원</td> <td>학부모부담금</td> </tr> </table>	방과후 과정비 (70만원)	특성화 등 방과후 과정 추가 비용 및 기타 부담금 일체	정부지원	학부모부담금
①-1 교육과정비 280만원 (10원 인상)	①-2 무상급식비 60만원	①-3 학급운영비 (23만원)	<p>표준유아교육비 기준 정부지원 원비 학부모부담금 (194만원)</p> <p>방과후 과정비 70만원 초과(9개원 6%)</p>								
방과후 과정비 (70만원)	특성화 등 방과후 과정 추가 비용 및 기타 부담금 일체										
정부지원	학부모부담금										

- 정부지원 교육과정비 : 정부의 누리(공통)과정지원금 월 280천원
- 교육청지원 무상급식비
[(유아수별 식품비 단가 + 100원) + 800원] X 219일 ÷ 12월 = 월 60천원
- 교육청지원 학급운영비
= 2021년 사립유치원 운영비 예산액 ÷ 2021년 9월 1일자 사립유치원 원아수 ÷ 12월
= 원아 1인당 월 23천원
- 정부지원 방과후 과정비 :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 발생하는 정부지원 비용 월 70천원
- (참여 유치원) 정부지원 교육과정비(280천원)와 교육청지원 무상급식비(60천원), 학급운영비(23천원)를 포함한 총 557천원 균등 지원
- (미참여 유치원) 정부지원 교육과정비(280천원)와 교육청지원 무상급식비(60천원)만 지원

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2022. 2).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계획, p.22.
[그림 1-3]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비 세부 산출내역(인천)

3) 경남

경상남도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을 위해 「유아교육법」 제26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를 근거로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4년 간 115,544,000,000원의 사업비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이는 교육청 재정 및 유아교육기회 우선 보장 연령을 고려하여 만 5세부터 단계적 시행하고 표준유아교육비 기준의 교육과정비 전액 무상 지원하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2023학년도부터 시행되며, ‘23학년도에는 만 5세, ‘24학년도에는 만 4-5세, ‘25학년도에는 만 3-5세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무상교육을 희망하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기준의 교육과정비를 전액 무상 지원하여 유아 1인 당 월 20만8천원을 지원한다. 표준유아교육비 관련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라. 표준유아교육비 관련 연구

<표 1-6>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구분	내용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2023-2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 ‘24년 5세를 시작으로 누리과정 지원금(현 28만원, 유특회계) 외 추가 지원(‘26년까지 연차별로 4세 및 3세로 대상 확대) -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학부모 추가 부담 비용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협의,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결정 - 추가 재원은 교육청으로의 단계적 통합의 관점에서 교부금 등 시·도 교육청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 *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고도화 -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여 실제 유치원 운영 현실에 기반한 비용 지원 체계 마련(‘23) - 국가수준 표준유아교육비에 따른 시·도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검토, 비계측년도에도 교육비를 보정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pp.11, 32.에서 발췌.

<표 1-7> 표준유아교육비 해외 사례

구분	내용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선구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재원을 증액하여 투입하고 있음. 2000년 유치원비 부모 부담률이 52%였던 것이 2017년 기준 12%까지 내려감(정부 부담율 88%). - 사립유치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서 투명한 회계 관리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일정한 비율의 이윤 추구를 인정함으로써 전체 기관 중 약 절반을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유아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있음.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rimary education and care - 생후 24주부터 학령기 이전까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구분	내용
	<p>지원을 제공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 기관에 자녀를 보내기를 원할 경우, 부모는 거주지 자치단체 지역 의회로부터 기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사립유치원은 지자체의 관한에 의해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금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사립유치원의 보조금은 운영 보조금, 건물 보조금 및 보조금 관리로 구성되며 지원금을 합한 금액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 되지 않고 사립유치원에 지급됨.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소득,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수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공교육 내 수수료를 결정함. - 유치원 자녀 1명인 경우 3%(2022년 월 최대 SEK 1572), 둘째는 2%, 셋 째는 1%, 넷 째 이후부터는 수수료가 없음. 최대 수수료 제도가 유치원 등록 아동 수를 증가시키며 사회경제적 격차를 평준화 하는 데에 효과를 보임.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아동 1인당 평균 비용은 \$13,187이지만 실제 유치원 프로그램에서는 2021년 기준 평균 \$6,804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에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및 보육에 있어 모든 3, 4세 유아는 학기 중 주당 15시간의 지원 주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 또는 편부모 가정의 유아, 국가 최저 임금 또는 생활 임금을 받으며 연간 GBP 100,000 미만을 버는 가정의 유아는 주당 30시간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자료: 1) Early Childhood and School Education Funding - Eurydice (2022.12.23.).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norway/early-childhood-and-school-education-funding>에서 2023.05.03. 인출.
- 2) Early Childhood and School Education Funding - Eurydice (2022.12.23.).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denmark/early-childhood-and-school-education-funding>에서 2023.05.03. 인출.
- 3) Early Childhood and School Education Funding - Eurydice (2022.12.23.).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sweden/early-childhood-and-school-education-funding>에서 2023.05.03. 인출.
- 4) Friedman-Krauss, A. H., Barnett, W. S., Garver, K. A., Hodges, K. S., Weisenfeld, G. G., Gardiner, B. A., & Jost, T. M. (2022). The State of Preschool 2021: State Preschool Yearbook.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 5) Early years and childcare in England: Public spending, private costs, and the challenges ahead
https://ifs.org.uk/articles/early-years-and-childcare-england-public-spending-private-costs-and-challenges-ahead#footnote1_urrmfk8에서 2023.05.08. 인출

마. 교육비 바우처 제도

현재 누리과정비는 바우처로 운영되고 있다. 바우처 시스템은 미국에서 이미 한번 지난 간 신자유주의, 시장중심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의무교육 시스템 내에서 초 등에서 방과후학교나 자유수강권 제도에 바우처가 적용되고는 있고 이에 효과 분석이나 사례연구 정도가 있는 반면, 영유아 단계 바우처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누리과정 이후 유아 학교 제도에 반영되어 왔다. 실제로 바우처 제도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는 완전경쟁시장에 근접한 조건이 형성되어야 하나, 우리나라 유아교육 및 보육 시스템은 이러한 완전경쟁 시장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하연섭·유영미, 2017; 김연명·김송이, 2009). 누리과정 재정 지원을 위한 바우처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와 유보통합과 연계된 정책

이였으므로,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계없이 아동 1인당 동일한 지원을 한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보육료 바우처 제도는 바우처 간접 지원 방식이다. 3-5세 유아의 경우 누리과정을 통해 3-5세 바우처를 간접 지원하며,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28만원, 가정양육 선택 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0-2세의 경우에는 바우처 지급과 가정양육비의 차이를 두며 현금성 지원 및 간접 지원의 형식으로 학부모담을 경감하고자 하고 있다. 부모들은 0세 현금지원에 관심이 있으나, 1세부터 현금지원이 없으므로 국가 재정지원에 큰 관심이 없고, 1-2세의 경우, 현금성 지원이 없다보니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 금액에 대해 체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들도 있다.

<표 1-8> 유치원, 어린이집 바우처 지원 금액 및 방법

구분	유치원 이용자	어린이집 이용자
3-5세 바우처 간접지원	- 공립유치원: 10만원 - 사립유치원: 28만원 - 비선택, 가정양육: 10만원	- 어린이집 이용자: 28만원 - 가정양육: 10만원
0세	-	- 바우처: 51만4천원 - 현금지원: 18만6천원(차액지급) - 가정양육: 70만원
1세	-	- 바우처: 45만2천원 - 현금지원: 없음. - 가정양육: 30만원
2세	-	- 바우처: 37만5천원 - 현금지원: 없음. - 가정양육: 10만원

자료: 교육부(2023b).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p. 1.에서 발췌.
보건복지부(2023b).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pp. 4-7.에서 발췌.

그러나 이러한 체감 효과에 대한 문제는 영유아 단계 바우처 제도 설계의 정합성의 문제에서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다. 소득보전, 교육지원, 가정양육지원 등 목적을 달리하는 재정지원이 0-5세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방식에 혼재되어 있어 각각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0-5세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방식은 바우처(간접지원), 기관지원, 가정양육(수당)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0-2세 맞벌이 부모를 위한 가정양육수당(또는 부모급여)과 영유아교육기관 대상 바우처 제도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수당 등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관점의 지원과 3-5세 유아 대상 교육비, 보육료 등의 교육목적으로의 기관 및 아동 지원, 0-2세 가정양육수당과 같은 0-2세 맞벌이 부모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등 목적을 달리하는 재정지원이 혼재되어 있어 각각의 정책 목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득보전 형태의 아동수당 형태의 부모지원과 3-5세 유아교육 및 보육료 지원

은 공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으로 구분하고 두 트랙으로 제도를 정비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유보통합을 전제하고 학부모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바우처를 직접, 수당(현금)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지원하는 방식이 일각에서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공교육, 공보육 제도(기관 및 교사 제도 전반)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교사처우개선비 지급의 어려움 등) 논의가 보류되기도 하였다. 학부모 직접지원 신드롬은 선거철을 앞두고 매년 나타나곤 하나, 다음의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새로운 대안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 완전경쟁체제에서 유치원/어린이집이 기관별, 유형별로 모두 동질하지 않으므로 바우처 수당지급 형태로의 경쟁체제 구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의 방과후과정 및 특별활동 경쟁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유치원의 학원화, 돌봄기관화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음(특히 국공립유치원이 경쟁력 후순위).
- 초기 어린이집도 부모 직접/현금지원으로 진행했었고,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 문제로 1년간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겨서, 부모 직접지원은 초저출생 현실에서 현장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일각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권/보육활동 침해 문제가 더 가중될 가능성도 제기됨. 3-5세 65만원에 해당하는 교육과 보육을 요구하는 갑질 학부모들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음.
- 사교육시장은 변동이 없거나, 더 늘어날 가능성 내포(3-5세 사교육시장은 학부모부담 경감 정책과 무관, 공교육시스템을 제대로 확립하는 정책과 관련)
- 사용처를 한정하다고 하더라도(현재 간접 지원 형식), 가정양육수당과 묶어서 현금지급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어려움.

박은정 · 이정원 · 윤지연 외(2022)의 연구에 따르면, 바우처 형식은 현금방식으로 지원했을 때보다 오남용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으나 바우처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부모급여가 가지는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모급여의 오남용 문제가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정책적 효과를 축소시킬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또한 현금 중심의 지원이 아닌, 보육 서비스 중심으로의 지자체 정책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제도 목적에 부합한 상향조정된 제도가 필요함을 제언한 바 있다.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바. 부모급여 도입 관련 연구

박은정 · 이정원 · 윤지연 외(2022)의 연구에서는 부모급여의 제도적 성격을 규명하고 부

모급여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족정책은 현금, 서비스, 신간 정책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표면상 동일하게 보이는 현금지원 정책일지라도 지원 목적, 조건, 지급방식 등 제도 설계와 다른 정책과의 결합양상에 따라 정책의 성격 및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

부모급여의 적절한 지급 형태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설문한 결과 ‘일괄 현금 지급’의 견이 48.3%로 가장 많았고, 선택한 이유로는 부모의 선택권 보장, 소득 보장, 강화양육비 부담 완화 등 부모급여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 하는 등 효율성 측면을 꼽았다.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바우처+현금 지급’ 의견은 17.2%로 불가피한 어린이집 이용 실수요자에게 적합하며, 현금으로 소득만 지원하는 것 보다는 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박은정·이정원·윤지연 외, 2022: 9).

이때, 전문가들은 부모급여의 효과 중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가장 큰 기대 효과로 꼽았으며, ‘저소득층 아동의 기본적인 생계비 및 아동의 권리 보장’을 가장 큰 파급효과로 꼽았다. 반면, 부모급여 도입으로 부모들이 현금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을 때,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 예상하기도 하였다. 기관 이용의 수요가 많이 감소하고, 관련 기관의 재정난 악화 가능성 및 질 하락이 그중 하나이다(박은정·이정원·윤지연 외, 2022: 10).

바우처 형식은 현금방식으로 지원했을 때보다 오남용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으나 바우처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부모급여가 가지는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모급여의 오남용 문제가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정책적 효과를 축소시킬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또한 현금 중심의 지원이 아닌, 보육 서비스 중심으로의 지자체 정책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제도 목적에 부합한 상향조정된 제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박은정·이정원·윤지연 외, 2022: 173).

<표 1-9> 양육지원 제도 및 현황

구분	대상	금액	관련 법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씩	아동수당법
가정양육수당	만 2세 이후~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중 가정양육 중인 영유아	-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 12~24개월 미만: 월 15만원 - 24개월~취학전: 월 10만원 ※ 농어촌 아동 및 장애아동은 별도 지급 기준 적용	영유아보육법
영아수당	만 2세 미만 아동	2022년: 30만원 2025년: 50만원 ※ 부모급여에 통합될 것으로 예상	아동수당법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아, 누리공통과정을 제공받는 3-5세 유아	출석일수 11일 이상: 부모보육료 단가의 100% ex) 0세 기본보육료 49만9천원	

구분	대상	금액	관련 법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미만 영유아	시간당 4천원(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 부담금 1천원)	
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종일제, 시간제 기본형: 10,550원 - 시간제 종합형: 13,720원 - 질병감염아동: 12,660원 - 기관연계: 16,870원 ※ 시간당 금액임, 이용 기본 시간은 2시간 이상임(영아는 3시간 이상) 	

자료: 박은정 · 이정원 · 윤지연 외(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p. 57. 에서 발췌 및 정리.

사. 바우처에 대한 선행연구

<표 1-10> 바우처 관련 국책연구보고서

구분	내용
유한욱(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지원과 관련한 국내 바우처제도(만 5세 무상보육·교육 지원, 만 0-4세 차등보육·교육 지원, 2자녀 이상 보육·교육 및 장애아동 무상 보육지원)에 대한 현황 및 평가 - 국·공립기관과 사립기관 간 공정한 경쟁토대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국·공립기관에게 집중되어 있는 정부의 직접지원을 축소하여 바우처를 통한 간접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함. - 공급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열악한 사립기관의 교육서비스 질 제고할 필요성 제시 - 후생감소를 초래하는 바우처(바우처 확대에 따른 품질 저하, 후생감소 예방을 위한 가격 하락) - 유아교육바우처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를 수반하는 시장전환형 바우처로써 공급자 간 경쟁 및 소비자의 선택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함.
최성은·최석준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등보육료지원사업을 통해 바우처 방식과 현금지원 방식의 차이를 분석함. - 바우처 도입의 정책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바우처와 현금의 효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공급탄력성에 의해 서비스 상품의 시장가격 및 물량 효과가 좌우됨.
유희정 외(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유형, 목적, 전달체계 특성 파악 - 국내에서 운영 중인 바우처 제도 운영 현황 분석 -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학비 지원(유치원을 통한 간접 지원)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점(정부 정책 체감도 향상, 부모의 편의성 증진, 재정의 투명성 확보, 교육 현황 정보 파악, 유치원 및 교육청의 행정 업무 감소) - 육아지원 바우처 제도는 육아지원 현장의 질 향상을 최종 목표로 제시해야 함.
김은설 외(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누리과정 시행으로 부모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유아학비를 위해 필요한 재무회계규칙 제시 - 바우처 성격을 띠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으로 인한 문제점 제시(대안형 자율학비 유치원 증가, 유치원 수업료 상승)
최은영 외(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국가는 가정에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 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유아교육·보육의 민간 의존율이 높은 경우 세금 경감, 수당, 바우처 등의 지급을 통해 간접 지원하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아교육·보육 기관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국가 별 차이 - 유럽국가의 유아교육·보육 비용 규제 실시(공공 공급자에게 적용): 유아교육·보육 비용, 최소 임금, 가정의 소득에 의한 비율 - 부모 수당, 세금 경감과 같은 보편적 지원과 다른 유아교육·보육 재정 지원의 선별적 지원 특성 고려

구분	내용
최윤경·염혜경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ECEC의 비용 지원 체계 분석(세금감면, 수당, 바우처 지원, 지방정부 지원, 비용 지원 없음) - 해외(뉴질랜드, 노르웨이, 호주, 영국, 미국, 홍콩)의 영유아 교육·보육의 서비스 유형, 규모, 정부 지원과 규제 - 홍콩: 취학전 교육 바우처 제도를 통한 효과(가정의 교육비용 부담 감소, 사립유치원과 비영리 유치원 격차 해소, ECEC 접근성 높아짐)
김근진 외(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재정 조달의 경과 및 문제점 제시(교직원 인건비 증가액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을 능가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에서 교육세와 국고보조금 비율에 대해 규정하지 않음) - 유아교육 및 보육의 재정 운영 문제점 제시(민간시설에 대한 의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분리의 문제점, 완전경쟁시장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의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 - 단기 방안: 국세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재정으로 소득보전, 서비스 지원 사업의 재정분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종료 여부에 따른 누리과정 재정조달 방안 제시, 유보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을 고려한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수익자 부담 확대 - 중기 방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 준칙 제정이 필요함. - 장기 방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 배분 및 재정책임 배분,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및 지방세의 가격기능 부여
최윤경 외(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지원 확대의 쟁점(현금과 바우처의 혼합 형태, 현금으로 일괄 지급) - 서비스 이용 중심이었던 양육지원체계(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교육비의 부모바우처 지원)의 다변화 - 현금 지원과 바우처 지원의 관계, 목적의 구분 및 병합의 비교가 필요함.

자료: 1) 유한욱(2005). 바우처제도 사례 및 추가도입방안. KDI 용역보고서.
2) 최성은·최석준(2007). 바우처 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유희정·이정원·안재진·최진(2009).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과 정책 과제. 육아정책개발센터.
4) 김은설·박진아·이동하(2014). 통합 재무회계규칙 운영을 위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5) 최은영·김나영·최윤경·엄문영(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6) 최윤경·염혜경(2017). 해외 주요국의 유치원 재정지원 관리체계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7) 김근진·문무경·조혜주(2018). 육아정책 재정조달 거버넌스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8) 최윤경·박은정·차선자·권혜진·박유경(2022). 양육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양육지원법 제정 기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표 1-11> 바우처에 대한 학계 논문

구분	내용
우명숙(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주요 쟁점 (쟁점 1)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재정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현재 재원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음. (쟁점 2) 내국세의 일정률로 교부금을 유지하고, 교원인건비를 보정하는 조항을 개정해야 함. 내국세의 일정률로 교부금을 확보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쟁점 3) 의무교원 봉급교부금 및 보수교부금 실설 검토 (쟁점 4) 교부금 개정 시 법정 전입금 인상하는 것이 필요함. (쟁점 5) 교부금의 한 재원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세를 개편해야 함. - 지방교육재정의 국세 교육세를 안정적인 재원으로 바뀌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육경비 산출에 근거해야 함.
고영미(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보육 바우처 이론 고찰, 유아교육·보육 바우처의 국내·외 현황파악 - 국내 유아교육·보육 바우처의 발전 방안 모색 방안 제안 (제안 1) 저소득층 영유아의 복지적 측면, 모든 영유아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바우처 (제안 2) 공교육·공보육을 강화하는 바우처, 보육 및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바우처

구분	내용
	(제안 3) 유아교육 및 보육비 지원 방식과 항목의 형평성을 고려한 바우처 (제안 4) 교사 인건비 직접 지원 및 영유아 교육·보육비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바우처)
유희정(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바우처 제도의 도입 목적 분명히 할 것 - 전자바우처 적용 대상의 명확화(전체 영유아 대상, 수혜 대상의 일정 자격 조건 적용, 재정 누수 방지책 요구) - 공급체 현장에 대한 검토 요구(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 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구축) - 바우처 가격 결정(이용기관 차이에 따른 비용 차이 고려, 운영시간에 따른 가격 결정, 가격상승 문제에 대한 대안) -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능력 향상시킬 것을 제안하며 행정력 증가 요구 대처를 제언함.
송기창(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재원의 배분, 운영체제 분석 - 취약지역부터 무상무교육을 실시하여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무상교육 확대해나가는 방식이 필요함. - 국가가 전액을 지원하는 무상교육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매년 기준을 정해야 함. - 사립유치원을 지원하여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아교육교부금을 분리하여야 함.
김사현·홍경준(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지원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시간정책 제도가 큰 국가에서는 현금 지원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음.
양성욱(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의 긍정적 영향(사회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증진) 및 부정적(사회서비스 존재의 당위성 및 사회적 목적 달성) - 사회서비스는 이용자 및 제공자, 제공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에서 모두의 권리가 보호될 때 의미가 있음.
이성규·고재욱(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형식의 지원이 부모에게 직접 지원된 지원금을 유치원에 지급하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의 운영자와 교육청 사이에서는 지원금과 보조금 형식에서 대립 현상이 나타남. - 교육바우처 제도 지원방식의 쟁점 - 유치원교육행정의 지도 감독 및 행정의 집행체계 효율성 제고(바우처 유아 학비 전달체계 과정 고려) - 교육바우처 제도에 대한 지원 및 교부 방안 재검토
이래혁·남재현(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 수급은 교육관련 소비를 증가시키는 반면, 기호식품과 보건관련 소비를 감소시킴.
박창현·이덕난(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으로 국가보조금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효과성이 낮게 나타남. - 법인화, 회계관리, 바우처 제도 등 제도 보완이 된 후 국가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져 있음. 낮은 사립유치원의 강점을 고려하여 공영형 유치원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자료: 1) 우명숙(20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 교육행정학연구, 24(1), 247-266.
2) 고영미(2008).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바우처의 발전 방안.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2(2), 167-187.
3) 유희정(2008). 보육시설 및 유치원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육아정책포럼, 10, 11-16.
4) 송기창(2011). 유아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유아교육연구, 31(1), 43-59.
5) 김사현·홍경준(2014). 출산율 및 여성노동참여율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 정책균형관점에서 본 OECD 21개국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41(2), 213-238.
6) 양성욱(2016).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공공 가치 실현의 실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3), 177-208.
7) 이성규·고재욱(2019).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쟁점 고찰.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3(1), 93-118.
8) 이래혁·남재현(2020).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9(3), 27-56.
9) 박창현·이덕난(2021). 서울 더불어기움(공영형) 유치원의 성과와 추후 과제: 학부모 만족도와 정책요구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5(2), 27-48.

아.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

<표 1-12>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

구분	내용
이윤진 외(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지원으로 기본 교육·보육비, 기관이용비용 총액이 절감됨. - 누리과정 지원으로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 대도시 지역, 고소득층의 기본 교육·보육비, 기관이용비용의 총액이 절감됨. - 누리과정 지원으로 저소득층, 중소도시·읍면 지역,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었던 가구, 중소도시·읍면 지역, 저소득층의 가계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민선옥·배지희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영아의 발달을 위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유아의 요구 및 초등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함. -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무상보육비 지원과 주변의 권유로 영유아기 사교육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함.
정수지 외(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보육 정책 시행 시점부터 보육비는 하락하였으나 사교육비는 상승함. - 무상보육정책 시행 후 균등화가처분소득 대비 보육비 및 사교육비가 줄어듦. - 보육비 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시 보육비의 증감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지출 변화 등 다각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을 제시함.
이채정(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기 보육료 지원 확대는 시설 이용료 및 교육 비용 감소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며 취업모 가구에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남. - 유아기 보육료 지원 확대는 시설 이용료 감소에 효과가 나타났으나, 사교육 시설 이용 및 교육 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가계 내 보육료 부담 인식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계 내 보육료 부담,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최효미 외(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를 둔 가구에서 차세대를 위한 육아지원의 필요성 중 공교육 내실화를 1순위로 꼽음. - 영유아를 둔 가구를 위한 형평성을 위해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서 일률적인 지원 방식이 아닌 다양한 서비스, 가격 책정, 차등 지원을 하여 공교육 서비스 질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영유아를 둔 가구는 자녀 양육 비용 중 교육·보육비 지출을 가장 많이하며,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교육·보육 비용에 최우선으로 투자하려는 경향성이 있음.
최효미 외(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 보육·교육 정책 도입 이후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및 비용이 증가함.

자료: 1) 이윤진·이정원·김문정(2013). 5세 누리과정 도입 후 교육·보육 지출비용 변화 분석: 2011-2012년 동일기관 이용 가구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7(2), 166-189.
 2) 민선옥·배지희(201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자녀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 아동교육, 23(4), 263-285.
 3) 이채정(2018). 무상보육정책의 영유아 연령별 자녀양육비용 경감 효과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7(2), 109-132.
 4) 정수지·박윤현·송지나·김대웅·이순형(2016). 보육비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소득계층별 유아 보육비 및 사교육비 변화: 무상보육정책 시행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7(2), 27-42.
 5) 최효미·강은진·조미라·조숙인·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6) 최효미·박은정·김태우·우석진(2019).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성과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자. 유아 사교육 및 사교육비

2007년부터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발표되고 있는 사교육비 관련 통계는 초등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로써 유아 대상 사교육비와 관련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다.

유아 대상 사교육 중 하나인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영어유치원으로 지칭된 학원이며, 정부는 2012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명칭 사용 위반 및 허위·과장 광고하지 못하도록 제재

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1일 4시간 이상인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2020년 237개 원이 있었으며 2023년에는 283개원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3a). 서울시의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매년 평균 약 15개원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소재 공립유치원의 수가 296개원인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는 서울시 소재 공립유치원의 수와 비슷한 실정이다.

<표 1-13> 서울시 1일 4시간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 추이

단위: 개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학원 수	237	252	269	283

자료: 교육부(2023a). 유아대상 영어학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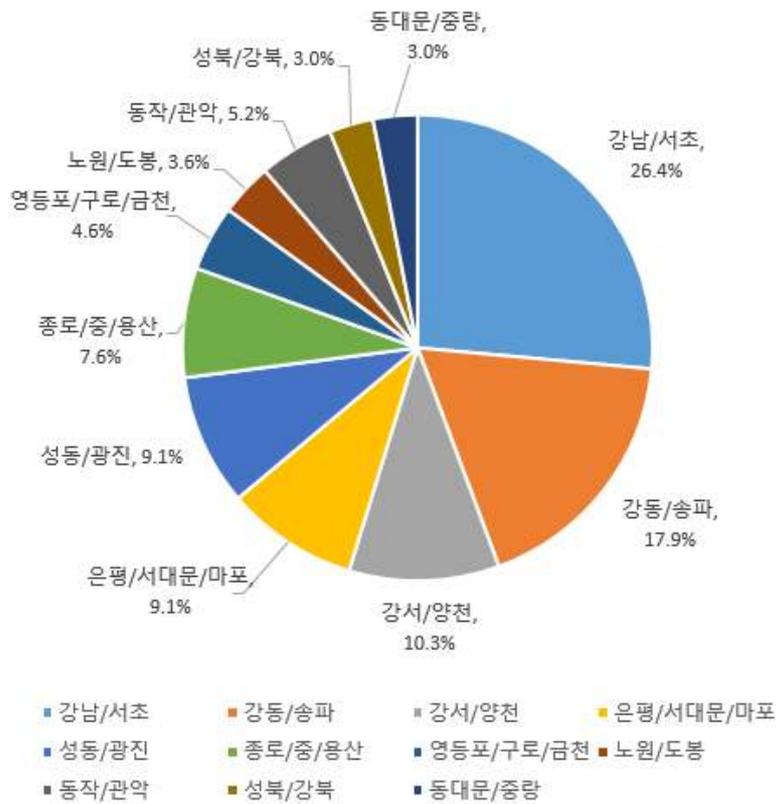
1일 3시간 이상인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2020년 294개 원이 있었으며 2022년 기준 329개 원이 있다(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2013). 지역구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강동구/송파구 지역과 강서구/양천구 지역에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5개원이 증가하였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강남구/서초구에 87개원(26.4%)가 있으며, 강동구/송파구에 59개원(17.9%), 강서구/양천구에 34개원(10.3%)이 있다. 즉,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절반 이상이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에 있다.

<표 1-14> 서울시 1일 3시간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 추이

단위: 개원

교육 지원청	지역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 (2021-2022)
강남·서초	강남/서초	85	86	87	▲(1)
강동·송파	강동/송파	51	54	59	▲(5)
강서·양천	강서/양천	25	29	34	▲(5)
서부	은평/서대문/마포	28	30	30	-
성동·광진	성동/광진	26	28	30	▲(2)
중부	종로/중/용산	19	24	25	▲(1)
남부	영등포/구로/금천	16	16	15	▽(1)
북부	노원/도봉	12	12	12	-
동작·관악	동작/관악	15	16	17	▲(1)
성북·강북	성북/강북	11	10	10	-
동부	동대문/중랑	6	6	10	▲(4)
계		294	311	329	▲(18)

자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2023. 10. 11.). 서울 유아대상영어학원 329개, 전년대비 무려 18곳 늘어나고, 고액비용문제 심각해...에서 인출.



[그림 1-4] 서울 지역구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황

서울시 1일 3시간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평균 학원비는 2022년 기준 118만8천원이며, 이는 2017년 기준 102만2천원이었으므로(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2023) 5년 동안 16만5천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부터 유치원비 인상을 상한제가 시행되어 유치원비를 1%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것에 비교하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아무런 규제 없이 교습비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유아대상 영어학원과 유아 대상 학원 및 교습소 중 부당광고가 모니터링 된 시설을 대상으로 명칭, 광고, 교습과정 및 교습비, 강사등록 현황, 무등록 등 사항에 대해 현장 점검 방법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어 유치원’, ‘놀이학교’ 등 명칭사용 위반 13건을 비롯하여 총 139건의 영어 학원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이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 2023. 6.).

서울시교육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실시

- 283개원 점검, 95개원 139건 적발, 과태료 27건 부과 -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고액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우려, 그리고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자 4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번 특별점검은 설세훈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전담팀을 구성하여 교육부-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점검 내용은 △명칭사용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게시표자·고지 위반 △시설 변경 미등록 등이다.
-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개원을 점검하여 95개원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을 하였고, 27건에 대하여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주요 위반사항은 △명칭사용 위반 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29건 △거짓·과대광고 7건 △시설 변경 미등록 14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18건 등 총 139건이다

[그림 1-5] 서울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실시

자료: 서울시특별교육청 보도자료(2023. 6). 서울시교육청,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실시, p.1

차. 유아 사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1) 한국교육개발원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은 취학 전 유아에 대한 사교육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필요성에 따라 2010년 만 3세에서 취학 전 유아가 있는 전국의 2,500개 가구를 대상으로 그 실태와 영향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에 대한 사교육 및 사교육비 지출 실태 파악, 유아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 경제, 여성의 경제 활동 및 출산 의도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아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선진화된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언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 전체의 99.8%의 가구가 유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특별활동비, 학원비, 개별 교육비, 기타 교육비 등을 합한 사교육비 지출의 총비용은 월평균 16만3천원이었다. 전체 2,872명 중 유치원과 사교육을 함께 이용하는 유아는 40.2%, 보육시설과 사교육을 함께 이용하는 유아는 42.5%, 사교육만 받는 유아는 9.7%였다. 어느 기관도 이용하지 않는 유아는 0.3%뿐이었다. 유치원과 사교육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월평균 지출액이 약 47만원이었고, 보육시설과 사교육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월평균 지출액은 약 38만원이었다. 사교육만 이용할 경우는 월평균 지출액이 약 23~25만원 정도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유아 중 20%가 평균 1.27개의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15만 5천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56%는 문화·주민센터

교육, 학습지, 개인 및 그룹 과외 등의 개별 교육을 평균 1.67개 이용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6만 9천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70%는 도서, 장난감, 교재교구 등의 기타 교육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7만 7천원을 지출하고 있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유아 사교육 의식 조사 결과, 취학 전 유아에 필요한 교육 내용에 대한 필요 정도는 ‘초등학교 적응을 위한 사회성 교육’, ‘창의력 교육과 감성 교육’, ‘초등학교 학습 준비’ 순으로 높았다. 유아 교육비에 대한 부담 정도는 유아에 대한 총교육비, 특별활동 비용을 제외하고 유아교육기관에 제출하는 교육비, 총사교육비 모두에서 ‘조금 부담된다’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유아의 총 교육비를 지출하기 위해 생활비에서 줄이는 항목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2%,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8%였다. 한편, 정부의 유아 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으로는 만 5세아 무상교육비지원,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유아 교육비 지원,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 장애아 무상교육 지원 등에 대해 ‘대강의 내용을 알고 있다’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유치원이 초등학교처럼 의무무상 교육 기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95.8%가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는데 대해 95.5%가 동의하였으며, 유아 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추가 출산을 포기한 경험에 대해 42.7%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유아 총교육비 및 사교육비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보호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다문화가정일수록 총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지출 금액이 낮았으며, 가구 총소득이 많을수록 지출 금액이 높았다. 이용하는 기관이 국·공립일 경우 사립에 비해 낮은 사교육비를 지출하였으며,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과 학원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학원만 이용하는 경우가 유치원만 이용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총교육비와 사교육비를 지출하였다. 반면, 유치원만 이용하는 경우는 보육시설만 이용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총교육비와 사교육비를 지출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본 보고서는 이상의 내용을 분석한 후 이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유아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는 학부모 수혜성 경비 지원, 보육 및 교육 수당 지급, 특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제언을 하였으며,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보급, 유치원과 초등교육의 연계 강화, 유아교육기관 및 교원에 대한 평가, 교원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학부모 참여 및 연수 활성화 등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의 지원 및 책무성 강화, 유아 사교육 조사 체제 마련, 유아학원법 개정 및 감독 강화, 학부모 운영 위원회 설치 등을 제언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2) 육아정책연구소 「유아 사교육비 추정」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 사교육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2012년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는 공

사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개념을 정립하고, 포함할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서비스별 비용과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을 산출하고, 아동 1인당 사교육비와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하였다(서문희·양미선, 2012).

먼저,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를 유치원에서의 특기적성활동 비용,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 비용, 기타 교육·보육 비용으로 구성하였다. 기타 교육·보육 비용의 경우 유사 기관, 각종 학원 및 문화센터, 개인 및 그룹 과외, 학습지, 인터넷 및 전화 교육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서비스별 비용과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반일제 학원 이용 아동은 평균 61만1천6백원의 비용을 지불한다. 이는 가구소득 대비 13.6%, 지출 대비 16.8%에 해당한다. 학원 등 시간제교육 월 평균 비용은 11만9천9백원, 개인 및 그룹 과외 월 평균 비용은 16만6천5백원이었다. 학습지 월 평균 비용은 6만5천원, 인터넷 및 전화 교육 월 평균 비용은 2만6천8백원이었다.

아동 1인당 사교육비와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아동 사교육비는 평균 12만9천7백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평균 3.8%, 지출 대비 4.8%이었다. 사교육비 지불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면 평균은 14만9천5백원, 가구소득 대비 4.4%, 지출 대비 5.5%이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있다, 보육료, 교육비 지원단가에 추가경비 항목 일부를 포함하고, 공립기관을 확충하여 부모의 추가 경비 부담을 줄이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포함한 양육비 추정을 하는 것,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있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영유아 관련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을 포함한 양육 비용 지출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계청에서 영유아 통계 생산이 가능하도록 각종 통계의 항목을 수정, 보완하고, 국가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있다(서문희·양미선, 2012).

3) 육아정책연구소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 사교육비 지출규모 변화」

육아정책연구소는 정부의 비용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부모의 보육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미취학 유아의 사교육에 소요되는 총 비용 규모를 추정하고, 2012년 1차년도 조사와의 지출 변화추이,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3년 만 3-5세 미취학 자녀를 둔 전국의 2,500개 가구를 대상으로 사교육 이용과 비용 지출 규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는 유아 사교육 개념을 정의하고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3-5세 유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유아사교육비 지출변화와 지출결정요인을 확인하였다(양미선, 2013).

먼저,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비, 교재교구비와 반일제 이상 교육기관에서의 교육비, 특별활동비, 교재교구비 및 기타납부금, 그리고 시간제 교육기관, 개인 및 그룹 과외, 학습지, 인터넷 및 전화 교육 비용 등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아동 1인당 사교육비를 지출한 비율은 89.8%로 2012년의 86.8%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전체 사교육비 지출 평균은 12만7천4백원이고, 지불하는 아동만을 포함한 사교육비 지출 평균은 14만1천5백원이었다. 전체 아동의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평균 3.8%, 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4.6%이었고, 지불 아동의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평균 4.2%, 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평균 5.2%이었다.

1인당 평균 사교육비와 연령별 인구수를 이용하여 총 사교육비 규모를 추정된 결과 유아 사교육비는 총 2조 1,431억원으로 2012년의 2조 1,742억원보다 감소하였다. 모가 취업한 경우일수록 사교육비가 감소했으며, 아동 연령 및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반일제 학원을 이용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

서비스별 이용 및 비용을 살펴보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은 전체의 70.3%가 이용을 하고 있으며, 유치원의 경우 6만7천원, 어린이집의 경우 5만6천8백원을 월평균 지불하였다. 반일제 이상 교육기관의 경우 2.4%가 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62만4천5백원을 지불하였고, 시간제 교육기관의 경우 26.3%가 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10만5천8백원을 지불하였다. 개인 및 그룹 과외는 3.5%가 이용을 하며 월평균 131,800원을 지불하였고, 학습지는 51.2%가 이용을 하며 월평균 64,300원을 지불하였다. 인터넷 및 전화 교육은 0.5%가 이용을 하였다(양미선, 2013).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특별활동 및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누리과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있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집에서는 학습 위주의 특별활동 과목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유치원에서는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 대상 사설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있다. 이를 위해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반일제를 시간제로 전환하며, 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부모교육을 의무화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방향성의 상실을 예방해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양미선, 2013).

4)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II」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기 교육·보육 비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미취학 영유아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실태 및 비용 규모를 확인하고, 2012-2014년도 지출 변화 추이 및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4년 만 0-5세 미취학 자녀를 둔 전국의 2,500개 가구를 대상으로 사교육 이용과 비용 지출 규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는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별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고, 아동 1인당 교육·보육 서비스별 월평균 비용과 이 비용이 가구소득 및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아동 1인당, 가구 단위의 총 교육·보육 서비스 비용과 사교육비, 이 비용이 가구소득 및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였다. 또한, 교육·보육 서비스별 2012년도, 2013년도 대비 이용 비용 및 총 비용, 사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양미선·김길숙·손창균 외, 2014).

먼저, 아동 1인당 사교육비를 지출한 비율은 74.3%이었다. 영아는 48.3%, 유아는 94.0%이었다. 전체 사교육비 지출 평균은 10만8천4백원이고, 지불하는 아동만을 포함한 사교육비 지출 평균은 14만5천9백원이었다. 전체 아동의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평균 2.7%, 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3.2%이었고, 지불 아동의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평균 3.6%, 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평균 4.3%이었다.

서비스별 이용 및 비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은 전체의 67.1%가,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은 전체의 76.7%가 이용을 하고 있었다. 반일제 이상 교육기관의 경우 2.6%가 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85만7천1백원을 지불하였고, 시간제 교육기관의 경우 15.1%가 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10만6천7백원을 지불하였다. 개인 및 그룹 과외는 2.8%가 이용을 하며 월평균 12만2천2백원을 지불하였고, 학습지는 29.4%가 이용을 하며 월평균 6만2천5백원을 지불하였다. 인터넷 및 전화 교육은 0.1%가 이용을 하며 월평균 1만7천7백원을 지불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 전반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정상화하는 것과 영유아 대상의 사설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있다. 끝으로, 학습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내실화하는 것이 있다(양미선·김길숙·손창균 외, 2014).

<표 1-15> 유아 사교육비 선행연구

구분	내용
백학영·안서연 (2012)	- 가구소득, 아동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함.

구분	내용
이윤진 외(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교육·보육 관점에서 바라본 누리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함. - 누리과정비를 지원한 후 기본비용,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이 상승하였으며 설립유형별로 학부모 부담 비용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설립유형 중 사립유치원의 기본비용 및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상승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이진화 외(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재정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영유아의 요구에 맞는 교육·보육 서비스의 부족, 사교육 과열 등의 논의가 계속 됨. - 아동연령,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비용 지출을 많이 했으며, 지역규모, 부모의 취업 유무는 사교육비 비용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68.2%가 방과과정특성화프로그램을 이용하며, 그 중 78.8%가 비용을 지출함.
김은영 외(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외의 장소에서 사부담, 정부 지원으로 학원, 문화센터, 가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포함한 활동을 사교육으로 정의함. - 영유아의 학습시간, 전자기기 노출 시간은 미국 소아과의사협회, 호주 보건부 기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역기능적인 모자 관계(거부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등)를 보상하고자 사교육을 하나의 수단으로 선택함. - 사교육이 보육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부모의 사교육 욕구를 최소화 해야함을 제언함.

자료: 1) 백학영·안서연(2012).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 한국사회정책, 19(3), 9-47.
2)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5).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3) 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Ⅱ-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II. 연구의 배경 및 정책 현황

1. 서울 유치원 및 유아교육비 관련 통계 현황

가. 유치원 수, 편성 학급 수 및 유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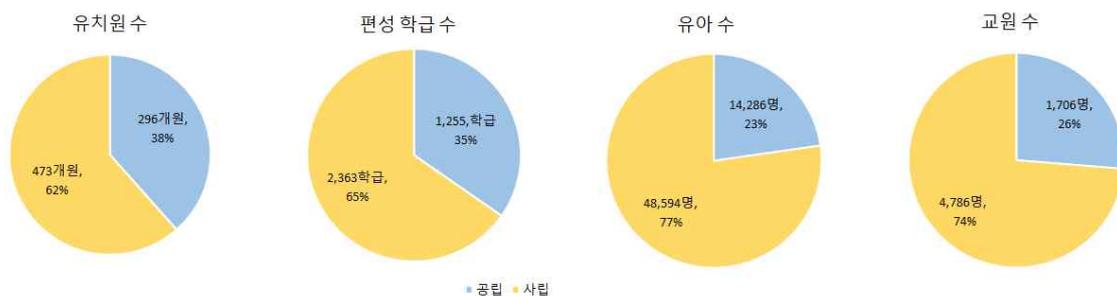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유치원은 총 769개원으로 공립유치원이 296개원, 사립유치원이 473개원이 있다 (2023년 4월 기준). 즉 서울 소재 유치원 중 38%는 공립유치원, 62%는 사립유치원이다. 편성 학급 수는 총 3,618개로 공립유치원의 편성 학급 수는 1,255개이며, 사립유치원의 편성 학급 수는 2,363개이다. 공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는 총 14,286명,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수는 총 48,594명으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23%가 공립유치원에 재원 중이며, 77%가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이다.

<표 II-1> 서울특별시 설립유형 별 유치원 수, 편성 학급 수 및 유아 수

	유치원 수	편성 학급 수	원아 수	교원 수
공립	296	1,255	14,286	1,706
사립	473	2,363	48,594	4,786
계	769	3,618	62,880	6,492

단위: 개원, 개, 명

자료: 서울교육통계(2023). 2023년 간단한 서울교육통계(핸드북). p. 20, 25에서 인출.



[그림 II-1] 서울특별시 공립 및 사립유치원 수, 학급 수, 유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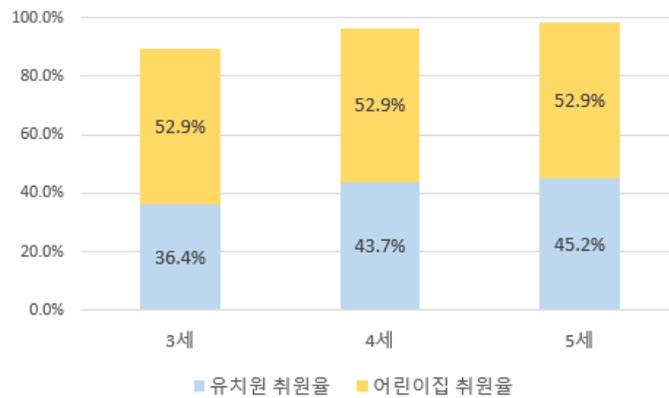
서울시 3세 유아 수는 46,529명으로 그중 16,919명이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24,994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 4세 유아 수는 49,880명으로 그중 21,775명이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20,503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 5세 유아 수는 53,453명으로 그중 24,153명이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21,473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즉, 서울시 3세 유아의 36.4%, 4세 유아의 43.7%, 5세 유아의 45.2%가 유치원에 취원 중이며, 3-5세 유아 149,862명 중 41.9%인 62,847명이 유치원에 취원 중이다.

<표 II-2> 서울시 연령별 유치원, 어린이집 취원율

단위: 명

	유아 수	유치원 이용 유아 수	어린이집 이용 유아 수	유치원 취원율	어린이집 취원율	전체 취원율
3세	46,529	16,919	24,994	36.4%	53.7%	90.1%
4세	49,880	21,775	20,503	43.7%	41.1%	84.8%
5세	53,453	24,153	21,473	45.2%	40.2%	85.4%
3-5세 계	149,862	62,847	66,970	41.9%	44.7%	86.6%

주: 1) 인구수, 유치원 이용 유아 수는 2023년 4월 1일 기준임. 조사된 2023년 간단한 서울교육통계(핸드북) p. 45에서 인출.
 2) 어린이집 이용 유아 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임. 조사된 2022년 보육통계 p.104에서 인출.
 자료: 1) 서울교육통계(2023). 2023년 간단한 서울교육통계(핸드북). p. 45에서 인출.
 2) 보건복지부(2023a). 2022년 보육통계. p. 104에서 인출.



[그림 II-2] 서울시 연령별 유치원, 어린이집 취원율

나. 교원 및 기관 근속연수

서울시 유치원 교원은 총 6,492명으로 그 중 공립유치원의 교원은 1,706명, 사립유치원의 교원은 4,786명이다. 교원의 평균 연령은 33.6세이며, 이 중 여성 교원의 비율은 98.0%이다. 수업 담당 교원의 평균 주당 수업 시간은 22.7시간이며, 이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4.6%이고, 교원 1인 당 유아 수는 9.7명이다. 서울시 전체 교(원)장은 502명, 교(원)감은 353명, 교사는 4,834명, 보직교사는 332명이다.

<표 II-3> 서울시 교원 수

단위: 명

	교(원)장	교(원)감	교사 수	보직교사 수
계	502	353	4,834	332

자료: 서울교육통계(2023). 2023년 간단한 서울교육통계(핸드북). p. 20, 25에서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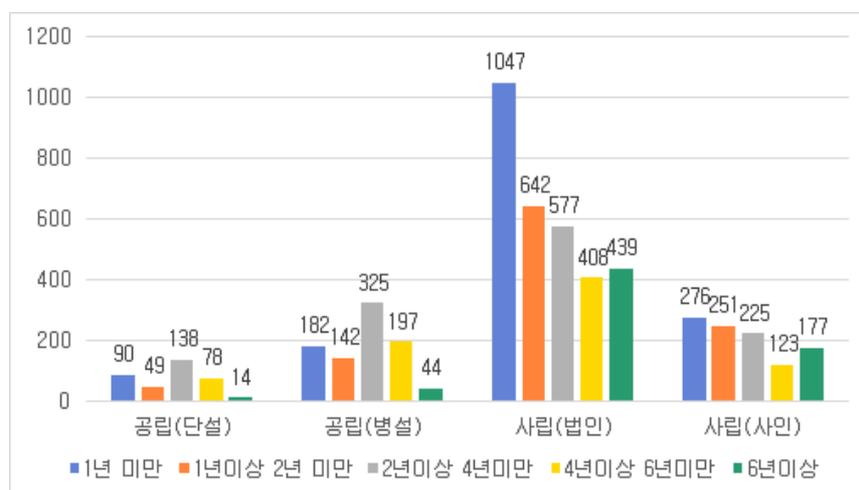
서울시 설립유형별 전체 교사 수는 사립(법인) 유치원 교사가 3,1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립(사인) 유치원 교사가 1,052명, 공립(병설) 유치원 교사가 890명, 공립(단설) 유치원 교사가 369명이었다. 유치원 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립(단설) 유치원 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는 2년 이상 4년 미만인 교사가 38%로 가장 많았으며 6년 이상인 교사는 4%로 가장 적었다. 공립(병설) 유치원 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역시 2년 이상 4년 미만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6년 이상이 4%로 가장 적었다. 사립(법인) 유치원 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인 교사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이 21%, 2년 이상 4년 미만이 18%로 그 뒤를 이었고, 6년 이상인 교사가 14%, 4년 이상 6년 미만이 13%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사립(사인) 유치원의 현 기관 근속연수는 다른 유형에 비하여 고른 분포를 하고 있었으며 1년 미만인 교사가 26%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교사가 24%, 2년 이상 4년 미만이 21%, 6년 이상이 17%, 4년 이상 6년 미만이 12%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I-4> 유치원 설립유형별 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현황

단위: 명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계
공립 (단설)	90	49	138	78	14	369
공립 (병설)	182	142	325	197	44	890
사립 (법인)	1,047	642	577	408	439	3,113
사립 (사인)	276	251	225	123	177	1,052

자료: 유치원 알리미(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현황)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에서 인출.



[그림 II-3] 유치원 설립유형별 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현황

다. 기관 운영

1) 유치원 수업일수

2023년 4월 기준 서울시 유치원 설립유형별, 연령별 수업일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4, 5세 평균 수업일수는 사립(사인)이 222일로 가장 많았으며 사립(법인)이 211일, 공립(단설)과 공립(병설)이 181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특별시 유치원 설립유형별 연령 방과후과정 수업일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립(단설) 유치원과 사립(법인) 유치원은 방과후과정 수업을 하지 않는 곳이 있었다. 설립유형별 평균 방과후과정 수업일수는 공립(병설)이 250일로 가장 많았고 공립(단설)이 246일, 사립(사인)이 241일, 사립(법인)이 230일로 가장 적었다.

<표 II-5> 유치원 설립유형별 연령 수업일수 현황

단위: 명

	3세 수업일수	4세 수업일수	5세 수업일수	평균 수업일수	방과후 수업일수
공립(단설)	181	181	182	181	246
공립(병설)	181	181	181	181	250
사립(법인)	211	210	211	211	236
사립(사인)	222	222	222	222	241

자료: 유치원 알리미(수업일수 현황)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에서 인출.



[그림 II-4] 유치원 설립유형별 연령 수업일수 현황

2) 유치원 방과후과정

가) 서울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시간

서울특별시 유치원 설립유형별 방과후과정 운영 시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주일 평균 운영시간의 최솟값, 최댓값은 사립(사인) 유치원을 제외하고 8시간, 13시간으로 나타났다. 사립(사인)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운영시간 최솟값은 7.5시간이었으며 최댓값은 15시간이었다. 방과 후 과정 평균 운영시간은 공립(병설)이 12.2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사립(법인) 유치원은 10.4시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II-6>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시간 현황

단위: 시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공립 (단설)	8	13	11.7	1.9
공립 (병설)	8	13	12.2	0.6
사립 (법인)	8	13	10.4	2.4
사립 (사인)	7.5	15	10.5	1.7

자료: 유치원 알리미(방과후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에서 인출.

나) 서울시 유치원 방과후과정 참여원아 수 및 강사 수

서울특별시 유치원 설립유형별 방과후과정 참여원아 수 및 강사 수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공립(단설) 유치원의 방과후 독립편성 학급 수는 10개, 참여원아 수는 73명이다. 오후재편성 학급 수는 평균 78개이며 참여원아 수는 730명이었다. 공립(병설) 독립편성 학급 수는 25개, 원아는 392명이었으며 오후 재편성 학급 수는 735개, 원아 수는 10,388명이었다. 사립(법인) 독립편성 학급 수는 12개, 원아 수는 210명, 오후 재편성 학급 수는 233개, 원아 수는 4,848명이었다. 사립(사인) 독립편성 학급 수는 200개, 원아 수는 4,183명이었으며 오후 재편성 학급 수는 1,394개, 원아 수는 30,145명이었다. 이와 같이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원아 수는 사립(사인)이 가장 많았으며 사립(병설), 사립(법인), 공립(단설) 순서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I-7> 유치원 방과후과정 참여원아 수 및 강사 수 현황

단위: 시간

	학급 수		원아 수		강사 수
	독립편성	오후 재편성	독립편성	오후 재편성	
공립 (단설)	10	78	73	730	215
공립 (병설)	25	735	392	10,388	686
사립 (법인)	12	223	210	4,848	58
사립 (사인)	200	1,394	4,183	30,145	1460

자료: 유치원 알리미(방과후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에서 계산함.

라. 서울시 유치원 급식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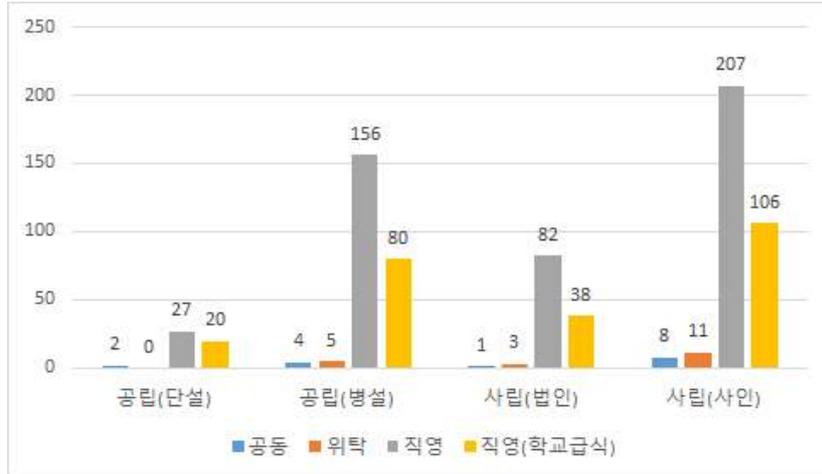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유치원 설립유형 별 급식운영 방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설립유형 유치원은 약 95%가 직영 및 학교급식 직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립(단설) 유치원은 위탁 급식 운영을 하고 있는 유치원이 없었으며, 공립(병설), 사립(법인), 사립(사인) 유치원 모두 공동급식, 위탁급식 형태로 급식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소수 있다.

<표 II-8> 유치원 설립유형 별 급식운영 방식 현황

단위: 개원

	공동	위탁	직영	직영(학교급식)
공립 (단설)	2(4.1%)	0(0.0%)	27(55.1%)	20(40.8%)
공립 (병설)	4(1.6%)	5(2.0%)	156(63.7%)	80(32.7%)
사립 (법인)	1(0.8%)	3(2.4%)	82(66.1%)	38(30.6%)
사립 (사인)	8(2.4%)	11(3.3%)	207(62.3%)	106(31.9%)

자료: 유치원 알리미(급식실시 현황)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에서 인출.



[그림 II-5] 유치원 설립유형 별 급식운영 방식 현황

서울특별시 유치원 설립유형 별 급식유아 수, 공동영양교사 수, 조리사 수는 다음과 같다. 급식유아 수 평균은 공립(병설)이 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립(단설)이 77명으로 가장 적었다. 공동배치 영양사 수는 평균 0.5~0.6명, 조리사 수는 평균 0.7~0.8명으로 모든 설립유형에서 비슷한 수로 나타났다.

<표 II-9> 유치원 설립유형 별 급식유아수, 공동배치영양교사 수, 조리사 수 현황

단위: 명

	급식유아 수	공동배치영양교사 수	조리사 수
공립(단설)	3,773(평균 77)	29(평균 0.6)	39(평균 0.8)
공립(병설)	22,050(평균 90)	147(평균 0.6)	196(평균 0.8)
사립(법인)	10,540(평균 85)	62(평균 0.5)	87(평균 0.7)
사립(사인)	26,560(평균 80)	200(평균 0.6)	265(평균 0.8)

자료: 유치원 알리미(급식실시 현황)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에서 인출

마. 서울시 유치원 건축년도 및 면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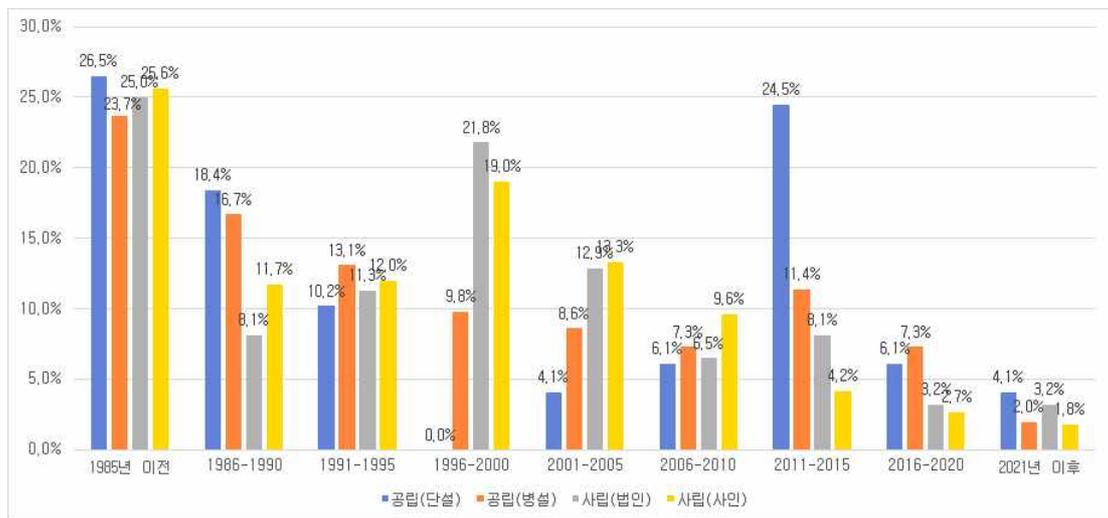
2023년 기준 서울특별시 유치원 750개원의 설립유형 별 건축년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립(단설) 유치원의 건축된 개원 수는 1985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 감소하다가 2001~2015년에 건축된 유치원 수가 특히 증가하였다. 공립(병설) 유치원은 다른 설립유형에 비하여 연도별로 건축되고 있는 유치원 수가 일정한 편이다. 사립(법인)유치원은 1985년 이후에는 1996~2000년에 건축된 유치원 수가 특히 많았으며 사립(사인) 유치원은 1996년 이후 새로 건축되고 있는 유치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10> 유치원 설립유형 별 건축년도 현황

단위: 개원(%)

	1985년 이전	1986 -1990년	1991 -1995년	1996 -2000년	2001 -2005년	2006 -2010년	2011 -2015년	2016 -2020년	2021년 이후
공립 (단설)	13(26.5%)	9(18.4%)	5(10.2%)	0(0.0%)	2(4.1%)	3(6.1%)	12(24.5%)	3(6.1%)	2(4.1%)
공립 (병설)	58(23.7%)	41(16.7%)	32(13.1%)	24(9.8%)	21(8.6%)	18(7.3%)	28(11.4%)	18(7.3%)	5(2.0%)
사립 (법인)	31(25.0%)	10(8.1%)	14(11.3%)	27(21.8%)	16(12.9%)	8(6.5%)	10(8.1%)	4(3.2%)	4(3.2%)
사립 (사인)	85(25.6%)	39(11.7%)	40(12.0%)	63(19.0%)	44(13.3%)	32(9.6%)	14(4.2%)	9(2.7%)	6(1.8%)

자료: 유치원 알리미(건물현황)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에서 인출.



[그림 II-6] 유치원 설립유형 별 건축년도 현황

바. 유치원 교육과정비 및 방과후과정비 학부모 부담금 현황

1) 누리과정 운영비(국가지원금) 추이

소득분위 하위 70% 미만의 가정에 속해있는 만 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누리과정 운영비를 2012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에게 22만원씩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2019년도까지 약 7년동안 동결되었으며, 2020년도 7년 만에 단가가 2만원 인상되었다. 이후 매년 2만원씩 증가하여 현재는 28만원이다.

<표 II-11> 누리과정 운영비(국가지원금) 연도별 추이

단위: 천원

구분	2012-2019년	2020년	2021년	2023년
누리과정 운영비	220	240	260	280

자료: e-나라지표(2023).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율 및 예산 추이.에서 인출.

2) 서울시 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연도별 추이(3개년)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의 경우, 올해 2023년 전국은 국공립 7,632원, 사립 159,388원으로 2021년부터 2023년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누리과정과 급식비 등 정부지원 증가 및 원비 인상률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다(정의당, 2023). 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학부모에게 유아 1인당 고지하는 금액이다. 이에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 특성화활동비가 포함된다. 전국을 기준으로 유치원 전체 평균 학부모부담금을 살펴보았을 때, 2021년에는 9만1천원, 2022년에는 7만5천원, 2023년에는 7만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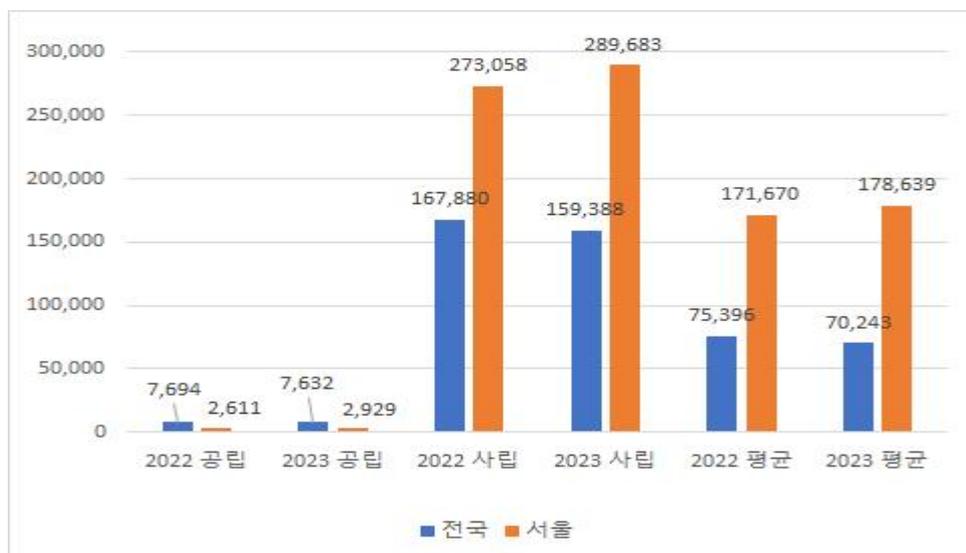
그러나 서울의 경우, 유치원 전체 평균 학부모부담금은 2021년 17만1천원, 2023년 17만9천원으로 약 8천원 가량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2022년에는 전국의 사립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에 비해 서울의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약 1.6배를 넘는 정도의 금액이었으며, 2023년에는 약 1.8배를 넘는 정도의 금액이다.

<표 II-12> 설립유형에 따른 서울시 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연도별 추이(3개년)

단위: 원

구분	2021 학부모부담금			2022 학부모부담금			2023 학부모부담금		
	공립	사립	평균	공립	사립	평균	공립	사립	평균
전국	8,261	198,313	91,164	7,694	167,880	75,396	7,632	159,388	70,243
서울	-	-	-	2,611	273,058	171,670	2,929	289,683	178,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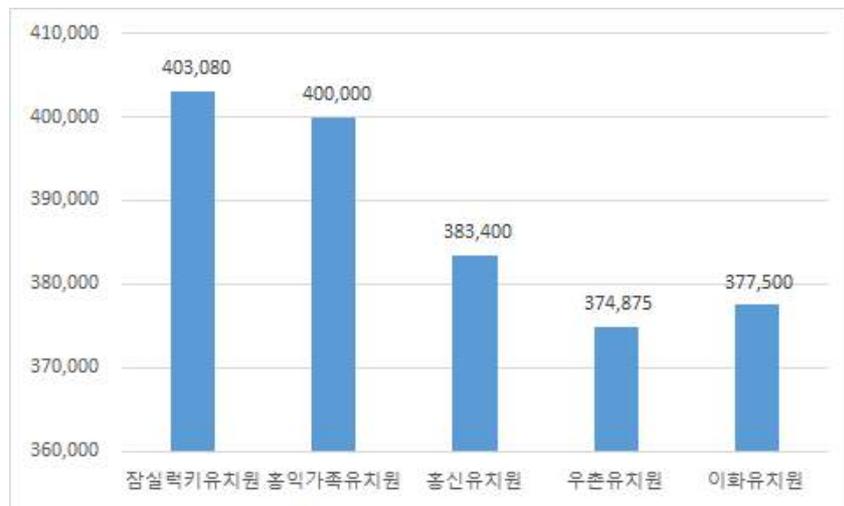
자료: 2022~2023년 시·도별 유치원 학부모부담금 현황(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제공)에서 재인용.



[그림 II-7] 전국 및 서울 학부모부담금 추이(2022-2023년)

3) 2023년 서울시 표준유아교육비 현황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유치원 중 표준유아교육비인 55만7천원에서 국가지원금 28만원을 제외한 27만7천원보다 교육비를 상회하는 유치원은 총 66개원이었으며 27만7천원보다 교육비를 적게 받는 원은 383개원이었다. 그중 표준유아교육비를 상회하는 5대 유치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잠실럭키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40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홍익가족유치원이 40만원, 홍신유치원이 38만3천원, 우천유치원이 37만5천원,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유치원이 37만8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학부모부담 교육과정비 평균은 약 20만1천원이며 학부모부담 방과후과정비 평균은 5만5천원이다. 즉, 학부모부담금의 평균은 25만6천원이며 최대 40만3천원, 최소 6만3천원이다. 즉, 표준유아교육비를 상회하는 1위부터 5위까지의 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은 평균 학부모부담금의 약 10만원 이상을 넘는 금액이다. 반면, 공영형 유치원(한양제일, 대유, 명신, 영천유치원)은 학부모로부터 추가 비용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8] 서울시 학부모부담금이 높은 1-5위 유치원

2. 서울시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현황 분석

가.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의 주요 내용

‘유·보통합 및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보통합 추진방안(유보통합추진단, ‘23. 1. 30)에 따른 과제를 반영하여 3-5세 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방과후과정비를 확대하며 3-5세 교육과정 개정과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추후에 교사자격·양성, 시설·설립 기준 등 방안을 24년도 하반기에 마련

할 것이며 그 때, 추가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유보통합의 정책 과제별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가 참여할 계획이다.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기관의 교육·돌봄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때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학부모 추가 부담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의 협의,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추가 재원은 교육청으로의 단계적 통합의 관점에서 교부금 등 시도교육청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리시스템, 원비 체계, 지원 항목 법제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사립 교직원의 투명한 보수 책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법령 정비 및 지원 체계 또한 병행하여 개선하고자 한다(관계부처 합동, 2023. 4.).

□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기관의 교육·돌봄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비 지원 확대 추진
 - '24년 5세를 시작으로 누리과정 지원금(現 28만원, 유특회계) 외 추가 지원 → '26년까지 연차별로 4세 및 3세로 대상 확대
 - ※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학부모 추가 부담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협의,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결정
 - ※ 추가 재원은 교육청으로의 단계적 통합의 관점에서 교부금 등 시도교육청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
- 관리시스템, 원비 체계, 지원항목 법제화 등 제도 개선 병행
 - 사립 교직원의 투명한 보수 책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법령 정비 예시) 유아교육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 유치원 학비 경감 지원지침 제정, 시도교육청 학비 지원지침·조례 제정 등
 - (지원 체계 예시) 사K 기능 개선, 부담 경감 항목 법제화, 나이스 활용 등

[그림 11-9]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4.) 제3차 (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p.11

나. 유아학비 운영 현황¹⁾

1) 2023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주요 변경사항

2023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2를 근거로 한다. 먼저, 2022학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지원 단가는 만 3-5세를 대상으로 공립 15만원, 사립 35만원으로 변동사

1) 교육부(2023b).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주요 변경사항에서 발췌, 정리함.

항이 없다.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와 관련하여 변화가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량휴업일 관련 기준에 있어 보완된 부분이 있다. 휴일에 대한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에서, 재량 휴업일을 휴일에 포함한다. 또한, 방학과 졸업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만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정했던 기존 기준과 달리, 재량 휴업일을 교육과정 운영으로 추가하였다. 교육과정비 지원항목이 확대되었다. 2022년까지 유아학비(교육과정비)에서 방과후과정 지급이 불가능했으나, 집행 잔액 발생 시 방과후과정 교재 및 교구비, 그리고 간식비에만 한하여 허용된다.

저소득층 유아학비(사립) 및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사립)와 관련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 추가 학비를 지원하고, 공·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교육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로 구분하던 지원항목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교육과정 월 최대 25만5천원과 방과후과정 월 최대 8만원으로 구분한 것과 달리 이를 통합하여 월 최대 33만5천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유아학비 사립 기준 35만원과 별도로 지원된다. 마찬가지로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도 교육과정 월 최대 25만4천원과 방과후과정 월 최대 8만원 지원에서 통합 월 최대 33만4천원으로 변경하여 지원한다. 이 또한 유아학비 공립 15만원, 사립 35만원과 별도로 지원된다.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규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2022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2023년도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의 경우 교육과정비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방과후과정비는 수기를 통해 처리하던 정산 방식을 일원화하여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정산 처리한다. 이때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유치원 생기부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안을 반영하여 변경된 유아 교육일수 인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초 1~6호로 된 특례를 1~8호로 확대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미세먼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교외체험학습’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연간 최대 60일까지 인정), 4)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5)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7)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수업 참여 일수, 8)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이다.

방과후과정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와 특례의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 여부 등이 유의사항으로 추가되었다. 1) 수업일수에 포함되는 교육과정 시 위의 특례에 따라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경우, 당일 방과후과정은 동일 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며, 2)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시 3호(교외체험학습)·7호 외의 사유만 적용할 수 있으며, 8호는 연간 인정할 수 있는 범위(30일) 내에서 적용 가능하다. 3) (제3호 및 제8호) 최대 인정일수에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예: 금요일·월요일 질병결석 시 토·일요일은 관계없이 8호 사유로 2일 인정), 4) (제6호) 해당 사유로 교육 일수를 인정받는 경우, 반드시 ‘부득이한 사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5) 학부모는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참가신청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유치원에 제출해야 함, 6) 소관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점검 시 출석부와 증빙서류 대조를 필수로 한다.

2) 유치원비 안정화 정책 추진 계획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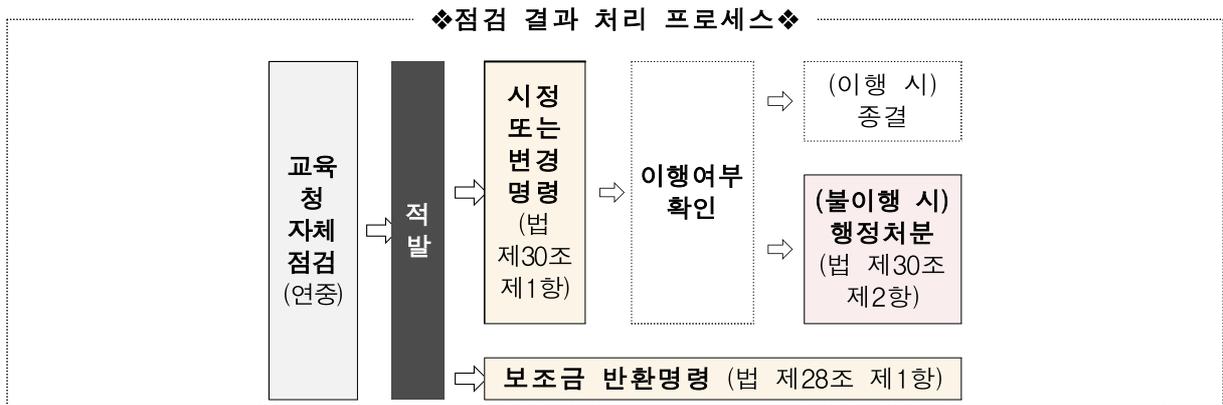
유치원비 안정화 정책 추진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25조, 제28조, 제30조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의2를 기준으로 한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중 약 70%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중점 추진 중에 있다. 최근 3년(’20.~’22.8월)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2.7%이다. 2022년 전국 평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월 167,880원 수준(유아 1인당, 특성화활동비 포함/’22.4월 정보공시 기준)이다. 2016년 원비 인상률 상한제 실시 이후,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감소 등 원비 증가 추이가 안정화되고 있다.

‘원비 안정화 점검단’ 구성·운영을 통한 연중 상시 점검이 이루어진다. (본청-총괄) 단장(유아교육과장), 반장(유아교육지원팀장), 반원(유아교육지원팀원 5명-원비 및 재정지원 담당, 에듀과인담당)과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 수립하여 교육지원청별 점검단 구성·운영한다. 1) 유치원별 현장 점검은 3년 이내의 주기를 원칙으로 하고, 2) 점검의 실효성 및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회계운영 지도·점검과 통합 실시가 가능하며, 3) 사립유치원 관련 회의 및 방문 시 원비안정화 정책 등 관련 사항 포함 안내한다. 4) 수익자 부담경비 인상 요인 제거 등을 통한 유치원비 안정화를 유도하고, 5) 인상률 상한 준수 여부 확인, 과다 유치원비 수납 유치원의 원비 책정 근거 확인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한 원비 안정화 추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원비 책정 근거, 인상 상한률 준수 여부 등 원비 책정 관련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학년도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 계획” 과 “2023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에서 발췌, 정리함.

사항을 중점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행정상 착오·실수 등은 계도 조치하되, 인상률 상한제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유치원이 인상률 상한을 초과하여 원비를 인상 및 징수한 경우 해당 유치원에 시정·변경 명령(제30조)하거나 기지급한 보조금(학급운영비, 처우개선비 등)을 반환 조치(제28조)한다. 시정·변경 명령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 실시한다.



[그림 II-10] 사립유치원 원비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23c), 2023학년도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계획, p.4.

하지만 교육부가 고시한 원비 산정 방식은 유치원 현장 상황 및 다른 법령과 상충하여 실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실제 유아 대상 징수 금액(단가) 기준으로 당해연도 원비를 결정하는 것을 고시하였지만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서 공고한 금액(단가) 기준으로 당해연도 원비가 결정되고 있다. 이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유치원 원비를 확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비를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개시일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준수할 수 없다. 더불어 학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2023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에 따른 ‘원비 인상률 상한제’ 준수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 ‘K-에듀파인’ 및 ‘처음학교로’ 사용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1) 2023년도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 계획(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상 원비 상한률 적용하여 2022년 기준 원비 인상률 1.0%를 2.7%로 하여 상한제를 준수한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 시행)에 따라 부정청구 시 재정지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안내한다. 3)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4 관련 [별표 1의3]에 따라 정보공개 미이행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한다. 4) 2023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계획(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상 인상 단가 적용하여, 2022년도 1인당 최대 지원금 월 74만원을 월 77만원으로 상향하여 기본급 보조 60만원, 장기근속수당 4만원으로 각각 2만원과 1만원 추가 지원한다. 5)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을 확대한다. 정년(만62세)인 경우 당 연 퇴직일이 속한 월까지 지원한다. 6) 유치원 이해 편의 제공을 위해 교원 육아휴직수당 지원 계획을 재정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안내한다. 7) 2023년 생활임금 인상 단가를 적용하여, 1인당 1일 96,240원을 지원한다. 8)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유치원 변동사항 증빙자료 제출 기한 설정한다. 9) 「사립유치원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 제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을 사전에 안내한다.

3) 재정지원 세부내용

재정지원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원 기본급 보조의 경우, 사립유치원 교원 정원기준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원장, 원감, 담임교사(방과후과정반 포함), 영양교사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원장(감), 영양교사는 월 최대 64만원, 담임교사는 월 최대 77만원을 지원한다. 방과후과정반의 경우, 편성학급이 1학급인 경우 유아 인원수와 상관없이 담임교사 1명에게 지원한다. 편성학급이 2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3월 학년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방과후과정반 유아 20명 당 담임교사 1명에 대해 지원하고, 유아수 증감에 따라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담임교사 지원 인원 추가·제외를 결정한다.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1. 교원 경력)에 따라 매월 1일 기준으로 교원 경력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한다.

교원 육아휴직수당 지원의 경우, 사립유치원 교원 정원기준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교원 중 30일 이상 육아휴직 보고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1일 8시간 근무자(주 40시간)로 사학연금(건강보험 포함) 가입 교원만 해당되며,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된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자녀 1인당) 동안 지원된다.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원한다. 기간제교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수당 지급을 종료하고, 복직 후 지급액(총 지급결정액*15%)을 미지급한다.

단기대체강사비 지원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정규 교원의 수업결손으로 대체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강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단기대체강사 1인당 1일 96,240원(시간당 12,030원)을 지원한다. 이때 추가 소요되는 경비(법정부담금, 주휴수당 등)는 유치원에서 부담한다. 연수, 경조사 휴가, 병가, 공가, 출산 휴가에 따른 수업결손으로 대체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학급운영비 지원의 경우, 유아모집·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 원비 안정화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를 지원한다. 2023년 1차 정보공시

및 원비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2023년 1차 정보공시 및 원비 현황 조사 결과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예정이므로 작성 누락, 입력 오류 등 사유로 변동 있는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학급별 교육운영비 항목으로 사용하되, 인건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1) 2023학년도 월 평균 학부모부담금(유아학비 제외)에 따른 지원 제외가 있다. 60만원 이상 유치원의 경우, 학급운영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2) 보조금 지원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제외된다. 3) 휴·폐원 예정 등 사실상 미운영(원아가 없는 유치원 등)하는 유치원은 제외되며, 4) 지원을 원치 않는 경우(유치원에서 별도 공문 발송 필요)에도 제외된다. 2024학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

❖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 산출방식 ❖

□ (1단계)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평균에 따라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

※ '21년 사립유치원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평균: 12,441천원

- ①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평균의 0.5배 미만: 감액 없음
- ②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평균 0.5배 이상 ~ 평균 미만: 학급운영비 10% 감액
- ③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평균 이상 ~ 평균 1.5배 미만: 학급운영비 15% 감액
- ④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평균 1.5배 이상 ~ 평균 2배 미만: 학급운영비 20% 감액
- ⑤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평균 2배 이상: 학급운영비 25% 감액

□ (2단계) 유치원 규모에 따른 기준금액(규모별 평균) 이하인 경우 학급운영비 감액의 50%만 적용

구분	유치원규모	기준금액(천원)	기준
㉠	1~2학급 이하	2,723	해당 구간의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1단계 학급운영비 감액 기준의 50%만 적용
㉡	3~5학급 이하	10,442	
㉢	6~9학급 이하	13,516	
㉣	10학급 이상	40,913	

⇒ 예시

(단위: 천원)

연번	유치원명	학급수	순세계잉여금 현황			감액 기준			감액 금액	
			당해연도 (A)	전년도 (B)	증감 (A-B)	1단계	2단계	최종	월	년
1	㉠㉠ 유치원	8	50,000	44,000	6,000	① (감액없음)	-	감액 없음	0	0
2	㉡㉡ 유치원	12	120,000	75,000	45,000	⑤ (25%감액)	X	25% 감액	1,440	14,400
3	☆☆ 유치원	3	30,000	20,000	10,000	② (10%감액)	㉢ (기준 50%)	5% 감액	72	720

연번1) (1단계) 증가액 ① 0.5배 미만으로 감액 없음

연번2) (1단계) 증가액 ⑤ 학급운영비 25% 감액, (2단계) 증가액이 12학급 이상 기준금액 40,913천원 초과
이므로, 1단계 감액의 50% 미적용 ⇒ 학급운영비 25% 감액

☞ 산출식 > 월480천원×25%×12학급=1,440천원, 연간 1,440천원×10개월=14,400천원

연번3) (1단계)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② 학급운영비 10% 감액, (2단계) 증가액이 3~5학급 기준금액 10,442천
원 이하이므로 1단계 10% 감액의 50% 적용 ⇒ 학급운영비 5% 감액

☞ 산출식 > 월480천원×5%×3학급=72천원, 연간 72천원×10개월=720천원

[그림 II-11]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23b). 2023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p.13.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의 경우, 학부모부담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진행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결제액의 0.01% 지원한다.

4) 재정지원 배제 및 공공재정 환수

감사 거부 및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 포함) 미이행 유치원, 행정처분(모집정지, 정원감축) 받은 유치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지원에서 배제된다. 공공재정 환수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현황³⁾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 현황 ('23.9.1. 현재)				
구분	2017학년도 선정·운영		2018학년도 선정·운영	
	한양제일유치원	대유유치원	명신유치원	영천유치원
법인	학교법인 인아학원	재단법인 대유원	사회복지법인 명신원	학교법인 영천학원
모집학급/ 정원/현원	3학급/62명/62명	4학급/86명/74명	5학급/108명/108명	3학급/62명/60명
교직원	11명	13명	14명	12명
소재지	서대문구 통일로	강서구 곰달래로	영등포구 신길로	성북구 장위로
약정기간	2017.3. ~ 2025.2.		2018.3. ~ 2026.2.	

[그림 II-12]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 현황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23a). 2023년도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 계획(안). p.2에서 발췌.

1) 목적 및 배경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교육 선택권 확대,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그리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사립 장점을 함께 갖춘 새로운 형태의 유치

3) 서울특별시교육청(2023a). 2023년도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 계획(안)에서 발췌, 정리함.

원 모델 제시하여 교육 선택권 확대하고, 재정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치원 우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7년부터 공영형사립유치원 4개원을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17년에는 한양제일유치원, 대유유치원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18년에는 명신유치원, 영천유치원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공영형 유치원은 공사립유치원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유치원 모델로 서울시교육청은 공영형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치원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여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준수한다. 1일 4~5시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과정 시간 내 특성화 운영은 불가하다.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생활기록부 및 학적 적정 작성 및 관리한다.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교육내용,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 유치원 행동강령, 봉급 및 수당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한 유치원 규칙을 마련한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한다.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및 회계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사전 자문 실시한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내실화 및 공공성 확보 등 성과를 나타냈다. 「공영형 유치원 성과분석 및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20년)」 학부모(219명)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90.5% 이상, 재지정 희망 97.9% 이상이다. 재약정 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결과, 출범 이후 매년 교육과정·재정회계 분야별로 운영 개선되어 유치원 운영의 안정성 및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과후과정 증설을 통해 교육 및 돌봄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도 공영형 사립유치원 4개원 출범 이후 확대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개방 이사 조건을 완화하고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출연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에 대한 건의를 바탕으로 확대 계획이 있었으나 확대되지 않았다.

방과후과정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며, 에듀케어는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방학기간 없이 운영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학부모 대상 의견조사 실시 및 반영 (1일 운영 시간 등)한다. 방과후과정과 관련하여 보조 인력을 지원한다. 특성화프로그램은 방과후과정에서만 운영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원아별 1일 1개 1시간 이내 운영한다. 이는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특성화프로그램 미참여 유아에 대한 지도도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비용은 가능한 방과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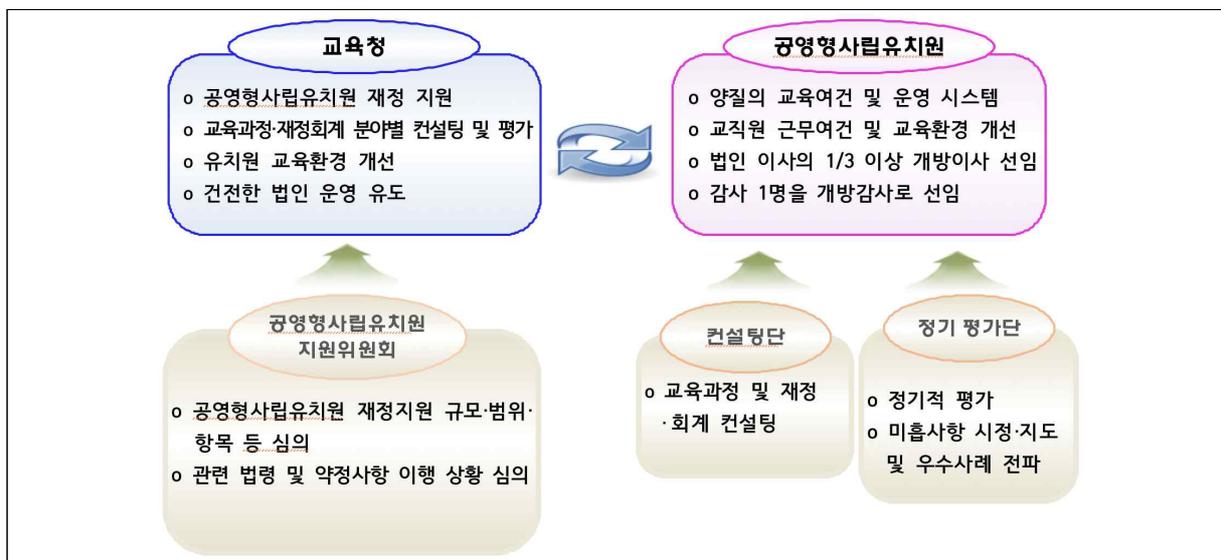
지원금 내에서 운영함으로써 학부모 부담금 최소화에 노력해야하지만, 부득이 추가 비용 발생 시 참여 유아수, 강사료, 실시횟수 등을 고려하여 최소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재정 지원 및 회계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총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예산을 약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한다. 유치원 학급수, 교직원 수·경력 등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한다. 유치원 총 소요 예산액 산정 후 별도로 지원되는 누리과정비, 친환경급식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며, 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학교 교직원 급여 기준, 유치원 운영비는 공립유치원 정상운영비 산정 기준으로 지원한다. 회계 관리는 K-에듀파인을 이용한다.

컨설팅은 교육과정·재정회계 분야별 컨설팅단 구성 후 유치원별로 매칭한다. 컨설팅 위원이 해당 유치원 방문·영상(Zoom)·유선 등으로 월 1회 이상 기준으로 실시하되, 유치원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컨설팅 위원은 교육과정과 재정회계 분야에 별도로 하며, 교육과정 분야는 현(전)직 유치원 원장·원감 등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컨설팅이 가능한 자, 재정회계 분야는 학교회계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교육행정 6·7급 등 사립유치원 재정회계 컨설팅이 가능한 자로 한다. 각 4명씩 총 8명으로 이루어진다.

3) 2023년 추진 방향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공공성 강화와 질 높은 교육·돌봄 제공을 목표로 한다. 공형 사립유치원 신규 모집 및 선정에 있어서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던 사항을 수요조사를 통해 모집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조건이 적합할 시 시의회의 사전 협의를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추가 변경되었다.



[그림 II-13] 주체별 추진 체계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23a). 2023년도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 계획(안). p.4.에서 발췌.

Ⅲ. 서울 유아교육 재정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에 대한 현장 의견 분석

1. 면담 분석 결과

가. 면담자 특성

총 14명의 전문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정부 정책 및 교육감 3기 공약인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추진에 앞서 본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정책에 대한 보완 및 요구사항 등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표 III-1> 응답자 특성

분류	유형	인원
관리자	공립	1인
	사립(사인)	3인
	사립(법인-협동조합형유치원)	1인
	사립(공영형 유치원)	2인(이사장, 기관장)
교사	공립 교사	1인
학부모	공립(병설, 단설)	2인
	사립(법인-협동조합형)	2인
	사립(공영형 유치원)	1인
재정전문가	-	3인

나. 공립유치원 원장의 요구 및 의견

1)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가) 기존 정책에 대한 인식

(1) 반작용으로 인한 정책 실효성 저하

기준에 누리과정비 지원을 시작하며 교사의 처우 개선과 학부모 부담 경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각종 반작용으로 인해 결론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번 부담 경감 정책 또한 기존과 같이 실효성이 없을 것을 우려하였다.

2012년도에 누리과정비 지원 시작하고 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중략) 갑자기 사립호봉이라는 게 갑자기 나온 거 아시죠? (처우개선비 지원금만큼 호봉을) 30만원씩 다 다운 시켜서 공립하고 똑같은 처우 개선을 한 게 아니라 나머지 차액들이 다 설립자의 수익금으로 남게끔 그렇게 구조를 바꿔버린 거예요.

(2023. 8. 3. 공립유치원 원장 D)

현장에서 이러한 부작용들에 대해 전달했음에도 법 개정을 하는 등 반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사립유치원의 구조가 기형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중략) 정말로 하려고 했으면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거를 굉장히 촘촘하게 걸러낼 수 있는 제도를 뭔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중략)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고(후략)

(2023. 8. 3. 공립유치원 원장 D)

(2) 원비 인상률 상한제에 대한 인식

원비 인상률 상한제보다도, 중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제도와 같이 자율형 유치원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열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단 표준유아교육비는 산정하고, 이 표준유아교육비에 대한 대국민 안내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고등학교도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이런 거를 좀 열어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도 약간 자율형으로 어느 정도 유형을 나누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면서 그렇지만 표준 교육비는 전 국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면서 (중략) 자율형으로 그냥 좀 어느 정도는 열어주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사립유치원에서도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2023. 8. 3. 공립유치원 원장 D)

2)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보완 및 요구사항

가) 국가 차원의 정책 정비

(1)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방식 전환

사립유치원 또한 초중등의 방식과 같이 교사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정할 때 교사 인건비를 제외하여 현실적인 표준유아교육비를 제대로 산정함으로써 부작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교육부에서부터 저는 중학교 식의 그런 방식을 좀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사인건비를 직접 지원해서 (중략) 교사인건비를 뺀 나머지 운영비를 정말 포준 교육비를 제대로 산정을 해서 운영비를 유아 수만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 수가 적은 유치원에서도 교사인건비가 안 나와서 폐원하는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을 거고 (중략) 합리적인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023. 8. 3. 공립유치원 원장 D)

(2)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신뢰할 수 있게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국가에서 공립유치원에 대한 투자를 그만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설 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설립여건도 그렇고, 이 설립되는 위치도 그렇고 굉장히 유치원은 굉장히 뒷전으로 밀려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결국은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중략)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하려면 공립을 그만큼 끌어올려서 사립이 국립을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3. 8. 3. 공립유치원 원장 D)

나) 공공성과 투명성의 강화

(1) 법인화 전환 지속

현재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전환 정책은 거의 멈추어 버린 상태이다. 게다가 유보통합 이후 들어올 법인이 아닌 기관들도 많은 상황에서, 법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성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하여, 유치원의 상황에 맞게 법인화의 형태를 약간 수정해서라도 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저는 법인화는 그거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 기준을 조금 완화할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이사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 학교제도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 8. 3. 공립유치원 원장 D)

(2) 회계 투명성 정책과 감사제도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에듀파인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현재 다소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 감사 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다.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에듀파인도 투명성을 강화해서 공공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거 같아요. 그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감사가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3. 8. 3. 공립유치원 원장 D)

(3) 급여 상한액 설정

사립 기관장 및 임직원의 경우 급여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하는 만큼 급여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가족 채용을 통해 가족의 급여를 높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떤 원장님은 제가 그때 보니까 명절 휴가비가 1년에 백만원씩 12개월이 잡혀 있는데 (중략) 본인은 1년 내내 명절이에요. 그걸 유치원 평가 자료로 아주 떼떽하게 내놨어요. (중략) 행정직으로 이제 본인 가족들 채용해가지고 행정직들이 막 5백만원씩 6백만원씩 받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중략)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에서 돈을 퍼줘도 이 구조 자체는 아마 바꾸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후략)

(2023. 8. 3. 공립유치원 원장 D)

다. 사립 법인 유치원 원장의 요구 및 의견

1)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가) 기존 지원에 대한 인식 및 운영 현황

(1) 재정 지원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것보다 기관으로 직접 지원이 되는 학급 운영비가 인상되어 기관 운영에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급 운영비가 작년부터 좀 많이 되었거든요.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양하게 특성화비로도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 학급 운영비 안에서 방역 도우미 외에 추가적인 방역 선생님들을 채용할 수 있었고, 학급 운영비 내에서 특성화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2023. 8. 12. 법인유치원 원장 E)

그러나 누리과정비 인상을 통해 학부모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도, 기관에서는 인상분만큼 돈을 적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치원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원비 인상률상한제로 인해 원비를 추가로 건을 수 없는 부분도 어려움의 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학비 지원이 2만원이 인상이 되었을 때 부모님들이 그 2만원이라는 비용을 덜 내시는 부분이잖아요. 유치원의 교육 운영에 있어서 그 2만원이 어머님들이 덜 내고 나라에서 지원을 2만원을 더 받았다고 해서 유치원의 운영적 비용 문제에 대해서 효과는 없는 거죠. (중략) 이 1%(원비 인상률 상한제) 갖고는 한 달에 1인당 한 2~3천 원도 못 올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엔 이제 유치원들이 그 1%라는 제한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고요.

(2023. 8. 12. 법인유치원 원장 E)

단순히 누리과정비 인상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 시기 방역도우미 예산 교부를 예로 들어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으면 기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계속 청소하고 닦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 안전 쪽으로 한 번이라도 더 손이 가게 되어 있고 또 더 깨끗한 환경에서 또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도 확실하게 주는 거죠. (중략) 저희가 방역 지원금이 적어요. (중략) 방과 후 선생님들하고 수업이 시작되는 오후 시간이 더 필요해서 오후에다가 저희가 다 (기관 자부담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2023. 8. 12. 법인유치원 원장 E)

(2) 특성화 활동에 대한 인식과 현황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특성화 활동보다는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적합한 활동을 통해 선정하고, 활동 비용도 과목 당 1만원~2만3천원 정도의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특성화 활동과 휴식 이후의 방과후 활동은 단순한 돌봄을 하거나 외부 강사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 채용한 교사를 통해 특색활동을 진행하며 놀이중심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이루고자 하였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루에 유치원에서도 특강을 하고 오후에도 학원으로 이렇게 전전을 한다면 아이들의 행복에 있어서 정말 좋지 않다 (중략)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과 놀이와 쉽이 있는 교육을 4시부터 5시 20분까지 집중적으로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치원은 진짜 아까 그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을 보내시는 어머니들이 거의 없으세요.

(2023. 8. 12. 법인유치원 원장 E)

창의 미술, 가루야 놀자, 감성아 놀자, 하이터치 이런 교육부에서 나온 책자를 방과 후 반 교육으로 끌고 와서(중략) 계속 제가 연구 개발해서 감상한 놀자 활동이 오후에 들어가고 근데 그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중략) 이 방과 후 2차 반은 꼭 해야겠다, 이렇게 어머니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학원보다는 여기 이게 더 낫다.

(2023. 8. 12. 법인유치원 원장 E)

(3) 투명한 유치원 운영 도모

유치원은 양육자와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유치원이기에 더욱 공공성이 있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공영형 유치원이 아님에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교직원의 처우를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양육자의 참여와 의견 조성으로 건강한 유치원 운영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 있었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이기 때문에 더 공공성 있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가 있고 많은 의견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그래서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중략) 반대포 9명을 더 선출해서 총 16명의 부모님들과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2023. 8. 12. 법인유치원 원장 E)

학교처럼 홈페이지에다 특성화비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1년 동안 어떻게 쓰였는지를 다 오픈 해서 올리구요. 운영위원회 회의록, 예결산 공개하게 된 것도 다 일단 올리고 (중략) 어머님들의 설문을 매 학기마다 급식이라든지 운영 면에 대해서 어머님들의 설문을 이용해서 저희가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2023. 8. 12. 법인유치원 원장 E)

나) 보완 및 요구사항

(1) 누리과정비 현실화 및 인건비 지원에 대한 요구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양육자의 수요와 교직원의 처우를 동시에 살피면서도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누리과정비와 학부모 부담금만으로는 원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 28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이 28만원에서 교원 인건비, 운영비, 유아들 교육활동 재료비, 시설비 이게 다 이 돈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보조교사까지 채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머님들한테 지금 8만원 더 받고 28만원 하면 36만원인데 이 돈으로 벅차요.

(2023. 8. 12. 법인유치원 원장 E)

이처럼 국공립유치원 수준에 맞추어 교사의 처우를 책정하고 있지만, 저출생이 심화되고 집값 상승으로 인한 지역 외 인구 유출로 유아 모집이 적어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사 인건비를 포함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선생님들한테 공립 호봉에 정액 수당 같은 걸 다 이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 혹시라도 원아 모집이 안 돼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인건비 부분을 덜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중략) 교사 인건비 부분을 확실하게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나라에서 28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줘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023. 8. 12. 법인유치원 원장 E)

이 돈을 갖다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쓴다면 그 유치원은 얼마 못 가는 거죠. (중략) 어머님들은 선택을 할 때 분명히 아이들을 위해서 잘해주는 유치원을 선택하지 (중략) 그리고 저는 만약에 무상교육이 된다면 방과 후를 정교사로 해서 조금 더 수준 높게 교육하는 유치원을 선택할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2023. 8. 12. 법인유치원 원장 E)

(2) 시설비 및 학급운영비 지원에 대한 요구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단된 시설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아이들의 현장학습과 활동 재료비 등을 넉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학급운영비 지원이 조금 더 강화되기를 요구하였다.

지금은 시설비 부분이 중단이 됐어요. 이런 시설비 부분도 항목별로 조금 지원을 해 주시고 (중략) 학급 운영비가 조금 원아가 갑자기 이탈하거나 이런 유치원들한테는 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학급 운영비가 이번에 인상이 많이 됐거든요. (중략) 저희가 좀 풍족하게 아이들 현장학습과 그다음에 재료 활동비를 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급 운영비 지원이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 8. 12. 법인유치원 원장 E)

(3) 초등교육과의 연계 및 유치원교육에 대한 홍보

초등학교에 가서 한글 등의 인지학습에 뒤처질까 염려하여 어릴 때부터 인지 위주의 학습을 시키는 것을 우려하였다. 기본적으로 한글 지도는 초등 1학년 교육과정에서 지도하는 ‘한글책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행학습을 하고 오는 아이들이 많아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한글을 배우고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 이렇게 유아기 교육과 학령기 교육의 괴리가 발생하는 상황은 유치원 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가 다소 부족함을 시사한다.

서로 같이 계속 말하는 거 위주로 아이를 갖다가 지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학교를 가니까 아무래도 쓰는 거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절 부르더라고요. 애 때문에 집을 못가겠다. (중략) 선생님이 한 5월 정도 때 저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아이 너무너무 잘 쓴다. (중략) 너무 일찍 가르치면 아이들이 흥미를 잃고, 7살 정도부터 흥미 느꼈던 친구들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2023. 8. 12. 법인유치원 원장 E)

저희 유치원은 정말로 선생님들이 수업시간 끝난 다음에 놀이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놀이는 통합 교육이잖아요. (중략)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논리적인 사고력도 키워주고 아이들의 언어 의사소통 능력도 발달이 되는데 어머님들은 이 부분을 놓치시는 것 같아요. (중략) 마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놀았더니 아이들이 효과가 있다는 걸 자꾸 어머님들한테 보여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2023. 8. 12. 법인유치원 원장 E)

(4)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 마련

양육자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투명한 기관 운영을 하고, 이를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일단 먼저 기관을 믿고 지원을 하고 만약 투명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 과감하게 행정 조치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초등학교의 이야기인데 점심에서 후식이 나오는 걸 좀 챙겨왔다가 아이들한테 적게 해주고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져간다. (중략) 학부모님들이 항의를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단호하게 조치를 하지 않고, “다들 이렇게 하니 좀 이해하세요.”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게 관리가 좀 잘 이루어져서 어머님들이 좀 더 유치원을 믿고 맡기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023. 8. 12. 법인유치원 원장 E)

학교 기관이니깐 그 원장님들 믿으시고 일단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유치원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행정 조치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지원을 해서 어머님들 조금 이렇게 부담 안 되게 지금 너무들 힘들잖아요. (중략) 00구에 지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다 경기도권으로 다 이사를 나가고 있어요. 안 낳아서 애가 없는 게 아니라 전세 자금이 비싸서 경기도권으로 다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 8. 12. 법인유치원 원장 E)

또한 회계나 운영이 불투명한 유치원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무조건적으로 양육자의 수요에 맞추는 유치원과 인지 위주의 교육을 선호하는 대부분의 양육자의 인식을 불투명한 운영 문제가 생기는 근원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특강비들이 높거나 모든 과목이 3만원인 유치원들은 이상한 곳이죠. (중략) 그래서 또 감사에서 걸려요. 걸린 유치원들 봤더니 특강비를 자기가 다 가졌고 그다음에 특강 강사료는 유치원 교육비 계좌에서 나가고 이랬더라고요. (중략) 원장님들이 교육비를 인상할 때 올리는 부분이 이 특강비 갖고 그렇게 장난을 해요. (중략) 교육비 아무리 5만원 올려줘도 또 특강비에서 올리면 엄마들은 그 특강비는 그냥 내고 다녀요.

(2023. 8. 11. 법인유치원 원장 E)

요즘은 또 뭘 하나면 막 저녁을 줘요. 유치원들이 해줘요. 그런데 예결산에는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저녁은 엄마들한테 이제 현금으로 받거나 뭐 받죠. 그러면 이 식품비는 어디서 마련이 될까요? (중략) 감사 나와도 통장을 지금도 이렇게 이중으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못 밝혀내면 끝인 거죠.

(2023. 8. 11. 법인유치원 원장 E)

5만원 지원됩니다. 특강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좋다고 거기에 가요. (중략) 막 한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한 게 놀이로 배우는 말과 언어 이렇게 해서 그래도 교육부에서 준 방침에 맞춰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자 가르쳐 달래요. 그럼 오겠대요. 한자 급수 시험하는 데 많거든요.

(2023. 8. 11. 법인유치원 원장 E)

방학 중에 애를 12시에 보내줬대요. 밥만 먹고 오후에 (중략) 밥값 안 받을 테니까 먹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오전에 자유 놀이 그 시간에 학원 보내고 오후에는 이게 쓰기 활동이 있으니까 보낸다는 거예요.

(2023. 8. 11. 법인유치원 원장 E)

저는 무조건 5만원 올려주는 건 네 우리 쪽으로 오실 어머님들도 많고 나는 좋아요. (중략) 진짜로 줘 너무하다 싶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유치원 알림이 딱 들어가서 보면 특강비들을 쭉 보면 느낌이 딱 오거든요. (중략) 5만원을 주더라도 예 특강비를 인상하는 선을 갖다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23. 8. 11. 법인(유치원 원장 E)

교육청에서 주는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고, 원장(설립자)의 인건비를 임의로 책정하여 이윤을 남기는 부분과 교사의 경력 미인정과 호봉 낮추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장

(설립자)의 인건비를 상한하고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유치원 중에서 그거 안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인건비(교사 처우개선비) 63만원 안 받고 (본인) 급여를 갖다가 천만원씩 올린 유치원들 있잖아요.

(2023. 8. 11. 법인(유치원 원장 E))

경기도권의 유치원인데 경력 교사가 많대요. 그런데 월급은 최저 7호봉 수준 모두가 그러니까 경력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중략) 최저임금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공립 호봉이라 그래서 보면 초과 수당까지 포함해서 공립 호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인 거예요. (중략) 그래서 25년에 진짜 교사의 급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올려주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2023. 8. 11. 법인유치원 원장 E)

1)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가) 기존지원 및 각종 정책에 대한 인식

(1) 유아교육 지원 및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신

공영형 유치원 이사장은 정부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용이 건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대통령이 교육청에 있는 예산을 뽑아다가 대학을 지원해주는 돈으로 돌렸어요. 이 A당에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에 유치원이나 초중고는 없구나. 교육의 저변은 안중에 없고 당장에 팔아먹기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빨리빨리 시장에 내보내려고 하는 업적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3. 9. 2. 공영형 유치원 이사장 A)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한 이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지원을 한 이후부터 원장 선생님들이 가정에 재산이 증식이 되기 시작했대요. (중략) 집에 놓고 있는 식구들은 거기다가 다 유치원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중략) 또 하나는 애들을 막 뽑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은 교재를 팔아서 리베이트를 챙긴답니다. (중략) 세 번째 원인, 가장 큰 근본 목적이 뭐냐 하면 정치는 정치권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자가 많답니다.

(2023. 9. 2. 공영형 유치원 이사장 A)

(2) 현 상황에서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 일반 사인 유치원과 보육 기관(어린이집) 모두 재정 투명성이 건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기에, 무분별하게 유보통합이 되었을 때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그게(유보통합이) 감독하기 쉽다고 그러는데 더 어려워요. 교육기관에다가 주면 교육기관에서만 감독하면 끝나잖아요. 가정에 다 주는 걸 어떻게 투명성을 검증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행정력을 방임하고 자기가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중략) 정치적인 목적이 이 안에 들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전제입니다.

(2023. 9. 2. 공영형 유치원 이사장 A)

(유보통합 정책은) 어떻게 교육을 잘할까에는 초점이 없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로지 출생률이 높아질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중략) 정치는 계속해서 그쪽(보육)은 돈이 적죠. 조금씩만 주면 되잖아요. 조금씩만 주면 올려주기가 좋아요.

(2023. 9. 2. 공영형 유치원 원장B)

(3) 바우처 제도에 대한 우려

공영형 유치원 원장님 경우 현재의 간접 바우처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만약 앞으로 모든 지원이 학부모 직접 지원으로 이루어질 경우, 유치원 운영 및 유아교육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였다.

바우처(교육비 학부모 직접 지원)가 돼서 한다면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미래가 없어요.

(2023. 9. 2. 공영형 유치원 원장B)

나) 보완 및 요구사항

(1) 사인 법인화 또는 국공립 기관 확충

공영형 유치원의 이사장은 유보통합 이전에 모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여, 관리체계의 편의 및 회계 투명성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바우처를 하든 누굴 주든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게 저는 있다고 봐요. (중략) 교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동일 연령대에서의 교육은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로. (중략) 민간단체에서 조사를 한 거 보니까 대안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모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야 일단 회계의 투명성이 나온다. (중략) 유치원의 이사장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공사립 구분이 없는 재정 지원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전부 다 국공립 형태로 일단 만들어야 된다. 그럼 법인화거든요. 그리고 법인화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이게 학교거든요.

(2023. 9. 2. 공영형 유치원 이사장A)

전혀 도움은 없어요. 이사장으로서. 그렇지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국가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 소명을 가지고 움직인 이러한 데에는 반드시 저는 (공영형 운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으로 일원화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법인화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떡볶이집이나 통닭집 장사 안 된다고 돈 대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중략) 공립으로 가는 길이 뭐예요? 법인화죠.

(2023. 9. 2. 공영형 유치원 이사장A)

(2)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 인력 지원

공영형 유치원 원장은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 능력이 검증된 행정 인력을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과 어린이집(유보통합 대비)에도 보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사립과 어린이집의 재정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유보통합과 같은 정책 시행 이전에 인력 지원을 통해 먼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립에도 정확한 행정 능력을 가진 행정사, 행정실장을 국가에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일원화해서 교육을 시켜 행정실장만 해도 각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 내보내서 그거를 관리하도록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빠른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2023. 9. 2. 공영형 유치원 원장B)

(3) 시설비 및 인건비 지원

공영형 유치원 이사장과 원장은 교재 교구비 지원 등을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설과 교직원에 투자하여 질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원했다. 즉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목을 잔뜩 지원하기보다는, 질 좋은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비와 교직원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시설을 이제 잘 꾸며주는 거고 그다음에 원장의 입장에서는 좋은 교사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략) 저희는 인건비로 지금 하여튼 일단 투입하고 싶어요.

(2023. 9. 2. 공영형 유치원 이사장 A)

돈을 주면 임금에다 해야지 좋은 교사가 제일 중요해요. 교구 교재는 안 중요해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많다(교재교구 지원비)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까워요. 그 돈을 교사들 인건비로 썼으면 좋겠어요. (중략) 맨날 교구 교재비 학습 체험비 이것만 시설 이것만 주면 뭐 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2023. 9. 2. 공영형 유치원 원장 B)

(4) 학부모운영위원회 활성화

공영형 유치원은 학부모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 학부모의 참여가 높아져야, 위에서 주장한 투명한 운영과 재정 건전성 등이 확보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서 그분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면 저는 공정하고도 투명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2023. 9. 2. 공영형 유치원 이사장A)

다. 사립유치원 원장의 요구 및 의견

1)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가) 기존지원에 대한 인식

(1) 사립유치원에 대한 역차별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은 현재 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이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에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답변하였다.

어린이집은 이미 무상이고 그다음에 국공립 무상인데 영어 한 번 빼놓고는 저희가 그래도 학부모 부담금을 절반은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역차별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후략)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A)

공사립 간 지원의 형평성에 관해서는 사립유치원의 수준이 공립유치원에 뒤지지 않으며 국공립유치원이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해 기능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은 아이들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든,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든 모든 아이들이 중요하기에 형평성에 맞게 현재 지원이 적다고 여겨지는 사립에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공립유치원을 만들어 놓은 것은 국가인데 (중략) 엄마들하고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략) 그들이 반발을 하더라도 저는 이 형평성 문제에서 모든 것을 떠나서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가장 잘 자랄 수 있게 이 나라에서 잘 자랄 수 있게 대우를 받고 (중략) 학부모도 부담도 경감이 된다면 그걸 뭐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겠어요.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A)

(2) 인상률 상한제에 대한 부담

현재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어 있어 각 유치원의 원비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만약 지원금을 원비의 비율로 지원해준다면 원비가 높은 유치원은 더 많은 지원금을 받고, 원비가 낮은 유치원은 오히려 더 적은 지원금을 받게 되어 반발이 생길 우려가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재정 지원을 대폭 증액해도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기관에서 추가 원비를 정해 학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재정 지원에 따른 투명성 확보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은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원비 인상률 상한제로 인해 고액의 원비를 받는 유치원과 소액의 원비를 받는 유치원에 지원 격차가 생겨나는 부분을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고 있었으며, 이를 원비 인상률 상한

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액과 소액 사립의 여건이 격차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반발이 있을 거다 하는 건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중략) 지역마다 정말 땅값이 엄청 비싼 데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고액으로 유치원을 그렇게 운영하신 데도 있어요. (중략) 이제 저희도 요구하는 게 상한선을 좀 제발 한 번 정도는 정상화시켜서 풀어달라고 (후략)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A)

(3) 특성화 제한에 대한 어려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특성화를 많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성화가 1인 1과목이다. 그러면 지금 영어 안 하는 유치원은 없거든요. 영어를 안 하면 사립유치원에 안 오죠.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할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데 영어를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A)

또한 요즘 학부모는 방과후에 단순한 돌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까지 함께 이루어지기 원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라도 돌봄을 오래 하지 않고 아이돌보미 등을 활용하여 하원한 후에 유치원 외부에서 추가로 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유치원에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문직 엄마들이든 집에서 일을 안 하시든 아무튼 17시 정도면 애들을 다 데리고 가고 종일반이 거의 없더라고요. (중략) 엄마들의 수요가 보육도 원하고 교육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보육을 다 원하는 그런 체계를 갖는 최선의 방법이 그래도 하루종일 아이들하고 17시까지 지내는 어린이집보다는 그래도 유치원에서 단일반(교육과정반) 교육을 하고 또 돌봄을 하는 서비스를 하고, 또 특성화도 다 해주고, 이런 걸 엄마들이 원해서 입학 상담 때부터 “여기 특강 몇 개 해요”를 먼저 물어봐요.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A)

특성화 제한이 없을 경우, 현재 유치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을 유치원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되어 정부의 사교육 방지 정책에 발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중략) 그러니까 엄마들의 니즈를 잘 이렇게 수용을 해줘야 이제 안전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정부가 사교육 없는 (정책을 추구하고), 그런 사교육에 너무 엄마들이 이제 힘들게 돈을 많이 쓰니까 가능하면 특성화를 좀 장려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이 좀 다양한 특기 교육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특성화를 한 개 상한선에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A)

(중략) 어떤 데는 이미 80만원 이미 100만원짜리가 있던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원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 보면 아예 영어 선생님이 상주하거나 그냥 편법으로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잡아내며 이게 유치원 교육의 질이 그래도 유아교육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있고, 임용이 돼서 그런 어떤 체계가 잡혀서 그런 유치원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 그래도 낫지 (중략) 그래서 그런 수요도 이 특성화로 흡수가 될 수 있으니 특성화를 좀 더 자유롭게 해달라 이런 원장님들은 그게 요구였어요.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A)

나) 재정 지원에 따르는 예상 문제점

(1) 기관 자율성 침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재정 지원을 환영하면서도 재정 지원에 따라 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였다. 즉 정부의 재정 지원에 따라 보고나 조사 등 책임과 의무가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저도 그렇고 다 이거를 표준 교육비 정도 지원해주면 엄마들이 경감되고 너무 좋죠. 그런데 일부 유치원에서는 이게 자율성이 또 침해받을까 봐 원하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중략) 무상으로 가는 거 아니다, 무상으로 가면 우리 다 발목 잡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A)

대폭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자. 이 취지는 참 좋은데요. (중략) 지원을 받게 되면 정부에서 그대로 주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보고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버거워하는. (중략) 이제 여유 있는 유치원들은 왜 맨날 구걸하듯이 받으려고 그러냐 부모들한테도 어차피 받아도 받는 건데,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괜히 코 께이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B)

(2) 책임 및 업무 증가

재정 지원에 따라 여러 업무가 증가할 것이고, 그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부족하여 기관장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돈을 주고 나서 이것저것 하라 하더니 지금 에듀과인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에듀과인까지 하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걸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선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는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교사 중에 누군가가 그걸 하지 않으면 원장이 그걸 해야 되는데 상당히 버겁단 말이에요.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B)

재정을 지원하면서 그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나이스를 또 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이스 가기 전에 지금 하는 것도 버거워요, 사실은. 이제 자리 잡으려고 그러는데 내년 9월부터는 교육비를 나이스로 신청해라,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연수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략) 우리가 공무원도 아닌데 왜 공무원처럼 이렇게 해야 될까.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B)

현재에도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추가 재정 지원에 따라 책임과 의무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또 끌려가는 거예요. (중략) 그리고 여기 재정성 투명에 대해서 에듀과인을 할 때 보니까 전부 다 교육청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이 돈이 어떻게 나가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그러니까 돈을 진짜 허투로 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또 투명성을 또 이야기하면, 사람들을(사립유치원을) 어떻게 보고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B)

2) 보완 및 요구사항

가) 인건비 지원

사립유치원 기관장은 학부모의 직접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기관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기관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처럼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

즉 교원, 영양(교)사, 조리사, 운전기사, 행정 인력 등은 필수 인력이기에, 유아 수나 기관의 여건에 관계 없이 이 부분을 정부에서 확실히 책임져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저출생에 따라 아이들이 줄고 있기에, 1인당 지원되는 표준유아교육비가 아니라 고정적인 지원금이 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지원을 하되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지금 그 지원 가운데 차라리 교사들에게 인건비를 주면 어떡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의식할 거 아닙니까. 교사들 인건비를 줬자 표가 몇 표나 돼요. (그래서 교사가 아닌) 학부모들한테 주면 그 많은 학부모들 표가 그 사람들을 보게 됐잖아요.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B)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죠. 고정 인력이 필요해요. (중략) 지금 한 반에 저희가 한 20명 정도 미만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데 20명 정도는 돼야지 그나마 인건비가 나오고 조 옆에 기사님 비용도 나오고 원감도 나오고 행정 인력도 좀 나오고 원장님도 가져갈 수 있는 거지.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A)

70명이면 진짜 겨우 운영이 돼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원장님이 아무리 유치원 교사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중략) 어차피 우리가 엄마들한테 받긴 나라에서 받긴 똑같아요. (중략) 국공립 투명하게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애들 몇 명이 와 가지고 그 아이들을 몇 명이 훑쳐 보는 거예요. 어른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중략) 그런 세금 저희가 낸단 말이에요.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A)

지금 한 명당 얼마씩 준다, 이런 거는 많이 주나 적게 주나 저희 재정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단 엄마들이 좀 더 유치원 문턱이 낮아져서 어린이집 가거나 유치원을 비싸 가지고 못 오거나, 좀 자기들의 수입이 너무 없는데 유치원을 보내고 싶은데 너무 힘들게 살아서 꼭 유치원을 보내면서 쪼들리게 살거나 이런 엄마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A)

나) 책임 및 의무 완화

사립유치원의 기관장들은 현재에도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교사들에게 국가 수준의 호봉을 지급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재정 운영이 무조건 불투명하다고 매도하지 말고, 또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도 않을 것을 요구한다.

사립 교직원의 투명한 보수 책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거 얼마나 투명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 인건비 보조라고 그래서 이렇게 교사들한테 직접 주잖아요. (중략) 여기저기서 다 확인이 되는데 투명성, 투명성 하니까 이걸 사립유치원을 이상한 집단으로 보는 건가?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B)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무슨 통장을 다 조사하고 그런 짓을 안 하면 좋겠어요. 진짜 안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듀파인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다 했던 말이지요. 그래서 자존심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표준 교육비를 주면서 이게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들이 내는 돈을 대신 내주는 거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좋은 거지.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A)

다) 학급당 유아수 감축 및 법제화 반대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정하여 유아 1인당 지원을 받게 되면, 유아 수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은 학급당 유아수를 감축하거나 상한선을 법제화했을 경우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급당 유아수 감축이나 상한선 법제화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급당 인원 수를 줄이는) 법안을 우리가 찬성하지 않았던 게 그러면 운영이 안 된다는 이유였거든요. (중략) 그런데 20명 있을 때는 인건비도 나오고 운영비도 나왔지만, 15명이 있을 때는 겨우 인건비가 나오고 운영비는 너무 쭉 조금인 거죠.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A)

그래도 감사한 거는 뭐냐 하면 학급당 운영비가 그래도 좀 올랐어요. 교육청에서 그래도 좀 학급당 운영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니까 그게 표준 교육비를 주신다면 어느 정도 걱정선의 아이들을 받고 나머지는 학급당 운영비에서 좀 보충을 하면은 운영은 되긴 하는 거죠. 그래도 인건비 나오면서.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A)

라) 표준유아교육비 이외의 수익자부담금 운용

사립유치원의 기관장들은 유치원이 어린이집에 비해 고급 인력을 활용하고 고정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표준유아교육비 이외의 수익자부담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하여 기관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선생님 고급 인력 쓰죠, 오전 쓰죠, 오후 쓰죠. 그 다음에 무슨 행정도 따로 있어야 되죠, 공간이 있어야 되죠, 원장이 있어야 되죠, 기사 또 따로 해야죠.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게 고정 인건비가 많은. (그렇기 때문에) 표준 유아 교육비로 그게 충당이 되냐, 그 이상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표준 유아 교육비를 주신다면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학부모 부담금 발생하는 거 지금보다 경감은 많이 되겠지만 그거 받고 운영을 할 수 있어요.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A)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정하게 되면, 이미 표준유아교육비를 상회하여 원비를 받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기관장들은 표준유아교육비 외에도 수익자부담금을 운용해야 기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표준유아교육비 만큼만 지원을 받고 추가로 부담금을 운용할 수 없거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면, 사립에 특화된 교육이나 학부모들의 수요에 따른 특성화교육 등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교육비가 전부 동일해 그러면 그냥 공립이예요 사립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립의 의미가 없고 (중략) 또 그다음에 또 하나 공립은 1인당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비용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사립은 그 공립에 반도 안 되면서 이도저도 아닌 형태가 되는 거예요. (중략) 그러면 나는 무상 표준 교육비를 줄 거면 교사들을 책임지라든가, 이런 뭔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해줘야지. 그 표준 교육비 안에 지금 주던 교사들도 다 데리고 있고 인건비도 다 그대로 줘야 되고 이러면 운영할 수가 없어요.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C)

따라서 차라리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정하여 지원하지 않고, 누리과정비에 추가로 지원금을 얹어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누리과정비에서 얼마를 더 지원해주면 좋겠는가?)

- 20만원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A)

- 50만원. 아니 부모들이 경감하도록 대폭 경감 그 정도 해 줘야 정부에서 정신 차리고 뭔가 하는구나.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B)

- 2만원. 이거는 표가 안 나고. 10만원 정도만 돼도 확 들어오거든.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C)

나라에서 무상교육이라고 딱 묶어서 요금만 받고 “더 이상 받지 마.” 해버리면 유치원 원장님들도 반발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교사들의 처리도 문제가 되고 학부모들도 또 교육의 수준이 낮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 무상교육이 7세만 무상교육 이렇게 말고 그냥 학부모 경감으로 전 연령이 가면 좋겠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C)

다 해달라는 건 아니고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금액으로 그래도 2만원 말고 조금 더 해서 경감을 해 준다면 모두가 체감하고 모두가 다 좋지 않을까 그래서요. (중략) 이 표준 교육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표준 교육비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2023. 7. 21. 사립유치원 원장 C)

라. 교사의 요구 및 의견

1)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가) 기존 정책에 대한 인식

(1) 무조건적인 지원에 대한 불신

학부모가 부담 경감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기관에 무조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재정 지원 확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관에 돈을 퍼주기 식으로 제공하면 학부모는 사실 체감이 어려울 것 같아요.

(2023. 8. 3. 공립유치원 교사 A)

그 금액만 늘리는 게 아니라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서 늘려야 된다.

(2023. 8. 3. 공립유치원 교사 A)

2)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보완 및 요구사항

가) 국가 차원의 정책 정비

(1)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사립유치원 또한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으니 사립학교처럼 인건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서 사립학교처럼 인건비 지원이 된다면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립기관에서 징징거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학교로 가려면 어쨌든 선생님들의 질이 상향돼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고 그래야지 교육의 질도 같이 올라가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2023. 8. 3. 공립유치원 교사 A)

(2) 열악한 국공립유치원 환경 개선

현재 국공립유치원 또한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담 경감 정책과 더불어 국공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교부금을 활용에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병설 유치원이나 단설 유치원의 열악한 부분은 시설 개선을 교부금으로 먼저 하는 게 맞고 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사립학교법에 맞춰서 기관에 인건비를 (먼저)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상향해도 되지 않겠나.

(2023. 8. 3. 공립유치원 교사 A)

(3) 목적사업비 형식의 지원

현재처럼 무조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사업비와 같이 예산 항목을 지정해주는 형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목적사업비처럼 필요한 유치원들이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놓으면 거기에 투자를 해주는 거지 돈만 막 가져다 퍼주면 이걸 어디에 썼는지 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분명히.

(2023. 8. 3. 공립유치원 교사 A)

단 이렇게 목적사업비 형식으로 재정을 지원하게 되면 기관에서 재정을 유용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으나, 학부모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사실은 학부모 부담금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학부모 부담금을 줄이려면 목적사업비로 주면 절대로 못 줄이는 거예요.

(2023. 8. 3. 공립유치원 원장 D)

나) 공공성과 투명성의 강화

(1) 법인화 전환 지속 및 투명성 강화

공립유치원 원장과 같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회계 투명성 정책과 감사제도 강화 등의 방향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사립유치원이 지금 한 번에 초중등 법인화처럼 되기 어려우니 조금 융통성 있게 유치원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서 법인화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공립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너무 의견이 100% 같아요.

(2023. 8. 3. 공립유치원 교사 A)

마. 학부모의 요구 및 의견

1)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가) 교육비 부담 및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인식

(1) 원비 현황 및 학부모 부담 체감정도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학부모의 경우 32만 5천원 상당의 학부모 부담금을 내고 있었으며, 과거 사립에 재원한 경우 분기별 100만원 상당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반면 공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학부모의 경우 0~5만원 상당의 추가금 외에는 소요되는 비용이 없었으며, 공영형 유치원도 공립에 준한 유치원이기에 학부모 부담이 적어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저희는 기본 과정비가 20만7천원이고요. 방과 후 특활비가 6만8천원, 그리고 이제 종일반이라고 해서 오후 늦게 5시에서 7시에 하원하는 친구들은 5만원씩 이렇게 받고 있어요. (중략) 이렇게 보내는 거 대비해서 이렇게 조금 비싸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립유치원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편이어서 좀 만족하고 보내고 있거든요.

(2023. 8. 3. 사립유치원 학부모 A)

제가 만 3세부터 (공립병설에) 보냈는데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5만원 이상 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중략) 큰 아이를 사립에 보냈었는데 (중략) 레지오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좋다고 해서 보냈는데 여기는 또 분기별로 백만원 넘게 냈던 것 같아요. (중략) 그다음에 특별활동비 이렇게 월화수목 금액 발레를 넣든지 영어를 넣든지 하면 이제 거기에 추가되는 건 월별로 냈었고요.

(2023. 8. 3. 전 사립유치원, 현 공립유치원 학부모 B)

(국공립이라서 따로 비용을 걷는 것이 없는지 질문하자)
네 저희 국공립이라서 (내지 않아요).

(2023. 8. 3. 공립유치원 학부모 C)

그 누리과정비가 인상하는 분을 제가 체감했다는 그런 질문자인 것 같은데 저는 체감하고 있거든요. (중략)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매년 발전되고 달라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체감을 하는 거예요.

(2023. 9. 2. 공영형 유치원 학부모 D)

돈을 내지 않으니 40~50씩 내는 유치원에 비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 같아서 못 보내겠다는 학부모들도 있었어요. (중략) 오히려 사립 일반 유치원보다 더 회계가 투명하고 운영이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교육의 질이 다른 유치원보다 더 낮다 전혀 못 느꼈고, 오히려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게 더 관리가 잘 되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더 주위 학부모들한테 추천을 하거든요.

(2023. 9. 2. 공영형 유치원 학부모 D)

(2) 사교육 참여 현황

공립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유치원에 내는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었지만,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때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는 이유로 절감 비용을 사교육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다.

오후에 특별활동이 따로 있지는 않고 보육과 놀이를 경험한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애가 좀 약간 이제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심심해하더라고요. (중략) 올 3월부터 이제 7세 되고 부터 이제 태권도 미술 그리고 이제 영어 이렇게 3개를 3시부터 5시 사이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사교육 비용이 총 합해서 47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2023. 8. 3. 전 사립유치원, 현 공립유치원 학부모 B)

저는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음미체(음악, 미술, 체육)를 좀 많이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중략) 유치원에서는 저희 원장님 원감님께서도 굳이 공부에 별로 초점을 안 맞추시는 분인 것 같고 또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 글 쓰는 거 좀 지금 순서 안 맞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좀 이렇게 방치하는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23. 8. 3. 전 사립유치원, 현 공립유치원 학부모 B)

사립유치원 가입 비용으로(비용을 절감해서) 저는 지금 따로 지금 학원을 좀 많이 보내고 있어요. 어차피 거의 유치원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사고력 학원이랑 (아이가) 좋아하는 미술학원에 조금 많이 투자를 하고 (중략) 방과 후 과정 하면 4시 반까지 있다가 (중략)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학원을 두 군데 다니고 있어요. (중략) 3개월에 60만원(사고력 학원). 미술 학원이 지금 15만원이거든요. 35만원 빨간펜도 하고 있거든요. (다 합치면) 한 60만원 정도.

(2023. 8. 3. 공립유치원 학부모 C)

저 같은 경우에는 만 5세까지는 몸으로 뛰어 놀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아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돈으로 사교육비를 시키지 않아요.

(2023. 9. 2. 공영형 유치원 학부모 D)

(3)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연계교육에 대한 인식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교육과 초등교육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예: 한글교육에 대한 입장)과 과열된 입시 경쟁에 의해 유치원에서 실행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다소 부족하게 느끼는 현상이 있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 때문에 사교육 또한 과열되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학교에 일단 입학하면 한글을 모르고 들어온 애들은 되게 좀 뭐라고 해야지 선생님들도 아이를 좀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입학하면 유치원 때부터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게 많아지니까 이제 유치원에 바라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는 게 아닐까도 싶어요. 그래서 사교육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닌가.

(2023. 8. 12. 법인(협동조합형)유치원 학부모 E)

저도 한글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초등학교를 첫째를 보내보니까 정말 한글을 안 떼고 가서는 교육이 안 되니까. (중략) 저는 워낙에 제가 이제 지금 나이대는 아이가 좀 많이 놀고 많이 경험하고 이것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년엔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2023. 8. 12. 법인(협동조합형)유치원 학부모 D)

반면 일부 학부모의 경우, 이음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유치원에서 한글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유아기 발달 수준에 필요한 것은 한글 낱자 교육이 아니라 사고력 발달 등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한글 교육은 초등교육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글자 낱자를 가르치는 게 교육에 있어서 제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지 저는 되묻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한글 낱자를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잖아요. (중략) 아이의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것인데 한글 교육을 위해서 유아교육 시간에 낱자를 공부하게 한다는 거는 어처구니가 없고, 약간 구시대적인 옛날 교육 방식을 가진 분들이 하시는 소리가 아닌가.

(2023. 9. 2. 공영형 유치원 학부모 D)

(4) 특성화 프로그램(또는 사교육)에 대한 인식

유치원에서 오전에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교사마다 역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이기에 아주 큰 불만은 없었다. 하지만 공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는 오후 방과후과정 시간에 다양한 특기 활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조로운 보육이 진행된다는 것에 아쉬워하는 경향이 강했다.

대부분 학부모의 경우 방과후 특성화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지만, 일부

학부모의 성향에 따라서는 외부 강사를 활용한 특성화나 외부 사교육이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 않기도 하였다.

누리과정이 끝나고 나서 방과 후 과정에 가게 되면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이 아이들끼리 놀이나 이제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놀고 이런 걸 한다고. 네 살까지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이제 5세가 됐는데도 똑같이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사립유치원을 보낸 케이스거든요. (중략) 사립유치원에 가서 큰 애 때는 좀 특활이 좀 핑장히 다양했어요. (중략) 어린이집보다 넓고 할 수 있는 고 또 아이들이 교실도 어린이집이랑 다르고 (중략)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보냈거든요.

(2023. 8. 3. 사립유치원 학부모 A)

사립유치원은 (방과후에) 그래도 뭐라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영어를 조금 한다던가 숲학교를 간다든가,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상태라고 지금 저는 저 생각을 해서 학원 위주로 지금 (보내고 있다).

(2023. 8. 3. 공립유치원 학부모 C)

지금 만 5세죠 초등학교 가기 직전. 애가 너무 이제 그 (낮잠)시간을 너무 괴로워했어요. (중략) 억지로 이제 다 같이 누워야 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략) 예전에 누나가 사립 다닐 때처럼 칼림바를 해본다든지 발레를 한다든지 악기를 다룬다. 이런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해 주시지 않으니까.

(2023. 8. 3. 전 사립유치원, 현 공립유치원 학부모 B)

특활도 지금 막내는 영어, 미술, 체육, 영어 두 번 하고 미술하고 체육하고, 지금 수업을 해달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브레인 팩토라는 걸 해요. (중략) 배운 걸 이렇게 가끔씩 알려주는 거 보면 배울 만한가 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세 아이에게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긴 해요. (중략) 큰 애 때처럼 많은 비용을 내지는 않지만, 이 정도 비용을 내고 아이가 그 시간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2023. 8. 3. 사립유치원 학부모 A)

저는 아이가 좀 놀았으면 좋겠고 해서 저희 유치원에 너무 만족해서 첫째도 보내고 둘째도 보내는 거고요. 물론 특강을 많이 해서 사교육을 안 시키고 유치원에서 활동 많이 하면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렇다고 저는 외부 강사가 너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싫어요. (중략) 다른 유치원들도 좀 그렇게 선생님들이 (오후에) 돌봄만 하지 않고 교육의 질이 좀 더 높아진다면 그러면 굳이 특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2023. 8. 12. 법인(협동조합형) 유치원 학부모 D)

일부 학부모는 고교서열화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의 정책을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입시 경쟁 체제가 유아기부터 사교육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입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경쟁 체제에서 지금 유발시키고 있잖아요. (중략) 자사고를 유지한다는 정책부터가 유아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모순이 있고, 정말 이 유아교육에 있어서 사교육 시장을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줄이려고 하면 고등학교도 그렇게 고교 서열화나 이런 걸 시키면 안 되겠죠. (중략) 유치원 때부터 경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냥 유아교육이나 초등학교 교육의 그런 틀로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틀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 9. 2. 공영형 유치원 학부모 D)

2)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보완 및 요구사항

가) 공교육 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들은 유치원 내에서 기본 교육과정 외에 방과 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사교육에 추가로 참여할 것 같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치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일정 비용을 내고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면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질문하자)

- 해결이 된다면 엄마들이 더 안정적이게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2023. 8. 3. 사립유치원 학부모 A)

여러 가지 활동을 선생님이랑 할 수 있고 그냥 돌봄만이 아니고 그래서 또 10만원이 줄거나 아니면 무상이 되어도 그 돈으로 저희 유치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안 하지 않을까요? 들은 만약 이렇게 무상이 됐는데 (방과후에) 그냥 돌봄만 이루어진다면 사교육을 하겠죠.

(2023. 8. 12. 법인(협동조합형) 유치원 학부모 D)

그러나 완전 무상이 되어 사립유치원에서도 비용을 거의 내지 않게 된다면 그 비용은 다시 사교육에 투자할 것 같다고 답변하며 사교육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거나, 오히려 비용 전액 직접 지원으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사립유치원도 완전 무상이 되어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사교육에 투자할 것이냐 질문하자)

-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 무상교육을 하게 되면 그 돈은 거의 사교육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건 부모의 선택이니까요.

(2023. 8. 3. 사립유치원 학부모 A)

(포준유아교육비 전액을 바우처 지급으로 학부모 직접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묻자)

만약에 지금 저한테 매달 50만원 이상의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저 역시도 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사교육 시장에서 더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겠어요. (중략) 그래서 그게 오히려 유아교육비 경감 정책이 아니라 유아 사교육을 더 확산시키고, 100만원뿐만 아니라 그럼 여러 가지 특활비를 붙여서 학부모의 부담을 더 들게 할 수도 있는 현실을 잘 모르는 그냥 선심성 정책이라 생각해요.

(2023. 9. 2. 공영형 유치원 학부모 D)

공교육 내에서 한글 교육 등을 강화하여도 사교육에는 투자할 것 같다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엄마가 당연히 한글을 가르쳐줘야 되고 저녁에 와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중략) 이제 또 맞벌이 하는 입장에서 제가 저녁에 와서 애를 앉혀서 한글 공부하는 것보다 좀 애들이 다 같이 한글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2023. 8. 3. 전 사립유치원, 현 공립유치원 학부모 B)

(유치원에서 초등 연계를 위해 한글 교육 등 준비를 다 해주는 데 동의하는지 질문하자)

- 네 저는 도서 가르쳐줬어요.

(2023. 8. 3. 공립유치원 학부모 C)

(유치원에서 초등 연계를 위한 인지교육을 하면 사교육을 더 하지 않을 것이냐 질문하자)

- 아뇨, 사교육은 그래도 (할 것이다).

(2023. 8. 3. 사립유치원 학부모 A)

나) 학부모 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보내는 학부모의 경우, 공립유치원은 돈을 안 내도 되는데 사립만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사립유치원 재원 학부모에 대한 부담 경감을 해 주길 원하였다.

반면 일부 학부모는 학급당 유아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진다면, 현재처럼 20만 원 이상의 학부모 부담금이 들더라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금보다 5만원을 더 지원한다면 체감이 되느냐 질문하자)

- 주는(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좀 빠졌네,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2023. 8. 3. 사립유치원 학부모 A)

(얼마 정도를 지원하면 체감이 되겠느냐 질문하자)

- 이게 국공립유치원은 다 지원이 되고 사립유치원 반만 되는 거잖아요. (전액 지원이) 안 된다면 반액 정도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중략)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 이렇게 15만원 사이 이렇게 내면 안 될까? (중략) 국가에서 기본 과정이라고 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나온 건데 이걸 저희는 유치원과 저희가 반반씩 내고 있는 거라, 줄여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2023. 8. 3. 사립유치원 학부모 A)

- 무상이 되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정말 체감이 확 올 것 같은데 그래도 반 정도(10만원) 해도 체감은 오지 않을까요?

(2023. 8. 12. 법인(협동조합형) 유치원 학부모 D)

단계적으로 올려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공립이랑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워낙 또 한꺼번에 이걸 딱 맞춰주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안 되면 이제 정말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지원을 넓혀가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딱 맞추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2023. 8. 3. 사립유치원 학부모 A)

(누리과정비 2만원 인상에 대한 체감 효과를 묻자)

2만원이 인상됐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체감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렇고 저희가 차라리 무상 급식이 되었잖아요. 아예 무상이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와닿았어요.

(2023. 8. 12. 법인(협동조합형) 유치원 학부모 D)

저도 2만원이 크게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2023. 8. 12. 법인(협동조합형) 유치원 학부모 E)

오히려 저는 교사 대 아동 인원이 좀 적어져서 오히려 질이 높아지면 돈을 20만원을 내더라도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 많다 적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중략) 더 인원이 줄어든다면 저는 그러면 그 20만원도 크게 느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예요.

(2023. 8. 12. 법인(협동조합형) 유치원 학부모 D)

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 및 질 제고

학부모들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영어 유치원) 등의 사교육이 늘어나는 이유가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미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아이를 사교육에 참여시키고 있고, 이걸 잠재우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제반 투자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이다.

첫 딸을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중략) 영어 유치원 출신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학교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듣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애가 충격받고 너무 슬퍼하고 진짜 하루 종일 울었거든요. (중략) 기본적인 건 좀 해야겠다 싶어서 솔직히 이 둘째를 7살 때 이제 영어학원을 보내게 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사교육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략)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공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엄마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잠재우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중략) 잠재우기 위해 노력한다기보다 그냥 공교육에 계속 해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 8. 3. 전 사립유치원, 현 공립유치원 학부모 B)

저는 또 유치원에도 보건실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치원 보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님 애가 지금 아파요, 이제 데리러 오셔야 돼요.” 이거거든요. (중략) 잠시만이라도 좀 애가 쉴 수 있는 교실 한칸이 아니라 초등학교 보건실 같은 그런 개념의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있어서 어머님들의 부담을 낮춰주려는 노력이 조금씩 추가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3. 8. 3. 전 사립유치원, 현 공립유치원 학부모 B)

지금 방역 도우미가 7월에 끝났다고 해요. (중략) 선생님들이 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중략) 2만원 이런 게 아니라 외적인 부분으로도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오히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더 케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3. 8. 12. 법인(협동조합형) 유치원 학부모 E)

반면 아예 공교육의 질이 낮다고 생각하여, 교육과정을 쇠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운영 중인 개정 누리과정, 즉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효과를 학부모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공교육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하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사진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오거든요. 거의 강당에서 뛰어놀거나 종이 자르거나 퍼즐 맞추기 그다음에 낚시놀이 되게 한정적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오후 4시까지 그거를 반복되면서 계속한다고 생각하나 너무 지루해질 것 같기도 하고 못한다고 많이 해요. 종류도 너무 재미없다고 하고.

(2023. 8. 3. 공립유치원 학부모 C)

또한 교사에 의해 교육의 질이 차이가 난다고 느껴, 교육의 질을 평준화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공교육은 항상 선생님이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교육은 어느 정도 퀄리티가 항상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교육은 너무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오는 신뢰감이 이제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략) 선생님들 교원 양성에서부터 좀 더 투자를 해서 선생님들 질도 좀 높이고 또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에 대한 믿음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3. 8. 3. 전 사립유치원, 현 공립유치원 학부모 B)

바. 재정전문가의 의견

1) 유아교육비 부담 현황에 대한 인식

가) 지원 방법에 대한 인식

현재 유치원은 기관마다 원비가 다르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을 경감해주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관이 아닌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게 유치원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돈을 줘서 개인이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반값 등록금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나와 가지고 요게 똑같은 거야.

(2023. 7. 21. 재정전문가 A)

나) 원비 인상률 상한제에 대한 인식

유치원 원비가 기관마다 다르고, 초중등처럼 공·사립의 등록금을 똑같이 맞춰줄 수 없

기 때문에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국가가 도입한 두 번째 방식이 이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인데 상한은 할 수 있으나 3년간 등록
물가 상승률의 1.5배 범위 내에서 상환하는 순간에 국가 재정 지원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중략) 이제 만약 관점이 학부모들의 부담의 경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기 초·중·고등학교
처럼 공사립의 등록금을 똑같이 맞춰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비가 지금 차이가 극심
한데 그러면은 이제 원비를 손을 못 대게 되면 인상률을 제한하고.

(2023. 7. 21. 재정전문가 A)

2)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보완 및 요구사항

가) 국가 재정 추가 확보 필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교부금만을 활용할 것이 아니
라, 국가 재정을 추가로 확보해서 투입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국가는 지금 전혀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추가 재정을 확보할 생각은 없어요. 거기 보면 교부
금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지금 있는 돈
갖고 이제 쓰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재정 (투자) 의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
이 들고.

(2023. 7. 21. 재정전문가 A)

나) 지속 가능한 정책 운영에 대한 논의

(1) 금지 개념 적용

사립유치원의 경우 기관마다 원비가 천차만별이다. 현재 기관별 고유의 원비를 인정하
면서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는 것도, 원비 인상의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지금
처럼 기관별로 상이한 원비 체계를 인정하면서 더 재정 지원이 추가된다면 사립유치원의
원비 인상률은 더 높아질 수 있고, 또 기관별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기존 사립유치원 원비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누리과정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유치원 원비를 인상하는 요인이 되고 있을 것 같
아요. 이미 그리고 이런 정책이 나온다면 사립유치원들은 계속 인상 퍼센테이지도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중략) 최소한의 원비 인상만 가지고 알뜰하게 운영을 하겠다 했던 사립유치원하고, 고
급화 전략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유치원 간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메워주는 부담은 전부 다 이제 국가와 지자체에 가게 되는 점이 있고요.

(2023. 7. 21. 재정전문가 B)

따라서 기존의 기관별 원비를 인정하고 추가 지원을 하기보다는 예전 고등학교의 수업료 등을 책정할 때처럼 급지를 지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방식이 아니라 최소한 동일한 시도 혹은 시도 내 지역별 급지 개념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예전 고등학교 수업료 사례를 보면 가급지, 나급지, 다급지, 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업료나 이런 것들을 책정했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동일한 시도 내에서도 약간의 이런 급지 개념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들이 그냥 정한 금액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중략) 급지 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치원 원비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2023. 7. 21. 재정전문가 B)

표준유아교육비의 경우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급지는 시도별 또는 시도 내 지역별로 기관별 원비 기준을 편차 적용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현재 무상교육을 운영하는 지역에서 표준유아교육비를 상회하여 원비를 받는 경우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처럼, 급지별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기존의 유치원 원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그게 요즘 얘기하는 표준교육비하고는 또 유사한 점도 있지만 좀 다른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급지별로 유치원 원비를 좀 정하고 그 지원을 받겠다고 하는 유치원은 그걸 적용해 주고 아닌 데는 이제 한마디로 재정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략) 계속 고급화 전략으로 나가겠다. 이런 데는 서로의 이해가 맞아서 그냥 (지원 없이) 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략) 완전 무상교육에 가까운 그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와서 운영을 하겠다면 거기는 급지별 교육비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게 유치원의 교육 계획을 새롭게 짜야 되는 거죠. 좀 그렇게 두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2023. 7. 21. 재정전문가 B)

반면 급지의 개념을 적용하는 게 복잡하고 구획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단계별로 지정하여 학부모에게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가나다 급지의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세부 기준으로 가나단을 구획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중략) 서울시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 누구나 금액을 1안으로 30, 2안으로 40, 3안으로 50을 주고 나머지 더 주는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 비용을 들어서라도 그 유치원에 보내겠다는 의사로 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2023. 7. 21. 재정전문가 A)

(2) 소득별 차등 지원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을 고등교육의 국가장학금을 활용한 반값 등록금 정책과 비슷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국가장학금은 유아교육의 상황과 다르게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고 있기에, 유아교육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행할지 아니면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인식하였다.

소득분위의 개인 베이스를 지금 지원을 해 가지고 (하면) 그게 이제 지금 자꾸 보편성하고 또 이게 안 맞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균등하게 일정 금액이 가는 게 좋은 거냐, 국가장학금처럼 소득분위 베이스로 가서 지원하는 게 그게 더 공정한 거냐 이거는 사실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2023. 7. 21. 재정전문가 A)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한 번 진입하면,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소득별 차등 지원 방안을 꼭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가능하면 개인 베이스로 차등 지원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기본에 관련된 거는 보편으로 가더라도 좀 이렇게 추가적인 관련된 내용은 좀 이렇게 우리가 교육 복지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급여 대상자나 이런 거는 별도 지원하듯이 그런 개념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중략) 이게 보편으로 간다는 거는 결국은 권리성 개념으로 간다는 뜻인데 그러면 진입하고 나면 못 빠져나오거든요.

(2023. 7. 21. 재정전문가 A)

(3)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만 3-5세를 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함께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지원이 다 이루어질 수 없고 단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게 동일하게 어린이집도 동일하게 적용될 되어야 진짜 학부모 부담이 경감이 되는 거죠. (중략) 지금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돈은 풀려고 그럴 거고, 풀면은 전부한테 풀려고 그럴 거고, 그다음에 이제 풀었을 때 체감도는 높으려고 그럴 테고. 이런 문제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재정을 갖다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게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2023. 7. 21. 재정전문가 A)

현 정부에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지원에 필요한 재정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기도 하였다. 만약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만을 따져 보았을 때, 유보통합 후 어린이집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산 운용 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함께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시도교육청 예산 갖고 유치원의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추가 지원까지 해야 되는 거
 죠. 지금 현재 수준의 지원은 기재부를 통해서 어떻게든 (중략) 받아내는 걸로 놓고 계산을 하더
 라도 어린이집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은 이거는 오롯이 시도교육청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
 분은 계산서에 안 넣고 이 정책을 추진한다 이진 말이 안 되는 거죠.

(2023. 7. 21. 재정전문가 B)

(4)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더 지원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공립유
 치원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립에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
 고 국공립에도 함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방과 후 활동비 같은 거를 또 동시에 국공립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도 지금보다 좀 더 지원하고
 그래서 그 돈을 바탕으로 국공립유치원도 조금 방과 후 활동을 다양하게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 7. 21. 재정전문가 C)

특히 학부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열악한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이 함
 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단순히 국공립에 대한 지원 개념이 아니라, 양질의
 국공립유치원 모델을 발굴해내는 데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유치원 쪽에는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영세한 병설 유치원이 많
 잖아요. 거기에 좀 더 지원을 하고 (중략) 요즘 학부모들이 자연주의 교육이나 이런 거를 선호
 하는 사람은 멀리 이사를 가서라도 그렇게 모이기 때문에 좋은 국공립유치원 모델도 좀 만들 겠
 이렇게 다 병행해야 되지 사립만 주면 분명히 이거 포폴리즘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2023. 7. 21. 재정전문가 C)

(5) 인건비, 급식비 등 보편 항목 지원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통한 지원, 급지별 차등 지원 등의 방안 외에도, 현실적인 안으
 로 교원 인건비와 급식비 등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등하게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안
 하기도 한다.

가장 현실적인 안은 지금 현재 교원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걸 수당 형태든 아니면 저
 기 이제 호봉을 보준해 주는 형태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명확하게 지원해주고 (중략) 우리 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적어도 똑같이 잘 먹어야 된다, (중략) 그런 몇 가지 항목들을 좀 잡아서
 급간식비, 교원 인건비 이런 거는 전부 다 똑같이 들어간다.

(2023. 7. 21. 재정전문가 B)

즉 교원 인건비와 급식비 등 모든 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부분은 다른 명목으로 유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동등하게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이 필요하다면 개인 소득별로 차등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을 제안한다.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이제 그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거는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걸 전제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유치원 원비나 이런 걸 인정한다면 개인별로 차등 지원해서 소득분위별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대신에 좀 두텁게 하면 되는 거죠.

(2023. 7. 21. 재정전문가 B)

그러나 인건비에 관해서는 모든 기관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사립유치원에 동일한 인건비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방식과 유사하며, 체제 개혁을 통해 질이 높지 않아 정리되어야 하는 기관에도 지원하게 되는 지점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유초중고등학교 교사가 단일 호봉으로 똑같은 봉급표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중략) 교사 봉급에 손을 대게 되면은 결국은 고용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제 고용을 보장해 준다는 건데 (중략)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하는 방식하고 유사해져버리는 거예요. (중략) 우리가 저기 그럴 바에 직영으로(국공립유치원처럼) 수용해버리지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지금 한계 사항에 이르는데 이참에 지금 우리가 털 건 털어내고 지금 양질의 교육을 전체적으로 재구조화를 해야 될 이 혁명의 시기에 기존에 있는 체제를 갖다가 이렇게 존치하려고 한다는 데 대해서는, 기존 체제를 혁신을 못 시키는 체제거든요.

(2023. 7. 21. 재정전문가 A)

또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방식보다,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여 정책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건비 부담을 통해 기관에서 절감되는 비용이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받는 주체가 교사면 조금 투명성 측면이나 이런 사용 측면의 우려가 있고 저는 부모들 바우처 형식으로 일단 주는 게 정책에 대국민 체감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볼 것이고요. 그 돈이 너무 숨어서 쓰이고 (학부모가) 체감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럴 것 같거든요.

(2023. 7. 21. 재정전문가 C)

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1) 재정 지원에 따른 의무 부여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면 그에 따라 당연히 의무도 부과돼야 한다고 보았다. 현재 사립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으며 의무와 책임을 지듯이, 사립유치원도 그에 준용한 의무가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

재정 지원이 그렇게 강화가 되면 지금 사립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대로 사립유치원에 준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략) 지금 사립유치원이 지금 사인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런 담보 장치 없이 돈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굉장히 안전장치 확보가 안 돼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2023. 7. 21. 재정전문가 A)

시민들에 의해서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중략) 돈이 가는 곳에 통제나 평가나 감사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붙어야 되고 에듀파인 도입했다고 하니까 그걸 점점 철저하게 활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잘못된 몇몇 한두 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을 때 완전히 일벌 몇 개 하는 식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2023. 7. 21. 재정전문가 C)

(2) 공립유치원 확충 및 사립유치원 퇴로 마련

기관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사립유치원에 지속적으로 인건비 등의 지원을 통해 소생해 주기보다는, 차라리 사립유치원의 퇴로를 열어주고 공립유치원을 확충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교육의 질 제고하고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라는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공립을 계속 늘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중략) 어린이집들이 요즘에 요양 관련 시설로 지금 전환을 급속도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립유치원은 이게 교육청 허가 사항이고 용도 변경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중략) 이참에 그런 걸 좀 건의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한 50%를 퇴출시키는 게 어떨까. (중략) 인건비를 계속 못 댈 정도로 경영이 지금 악화됐다는 뜻 아닙니까?

(2023. 7. 21. 재정전문가 A)

재정 지원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 승인사항으로 돼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열어주고 그다음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법률 개정도 하고, 용도 변경이라든가 등등 또 지자체장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하고.

(2023. 7. 21. 재정전문가 B)

다만 특별한 요구를 원하는 학부모를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부속 등의 사립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남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공립유치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할 것인지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재정 지원을 좀 덜 하더라도 다양성을 위해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있고 또 거기에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의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들의 경우는 (중략) 법인이 운영하는 특별한 어떤 유치원들,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수요도 있고, 거기는 조금 달리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규제하지 말고 대신 재정 지원이나 이런 거는 좀 덜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사실 학부모들이 탄탄하게 맞춰주니까 거기는 지원 안 받아도 다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3. 7. 21. 재정전문가 B)

(3) 기관 적정 규모화 연구

초중등학교의 경우 인구에 따른 기관의 적정 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통폐합 시 교육과정, 교원의 업무부담, 교원 배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치원도 저출생 및 지역의 인구 분포를 고려해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 연구에 따라 적정 규모화를 유도해가며 재정 지원이 뒤따르는 방식이 되어야 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퇴로를 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일부가 구조조정이 되어서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규모가 되어야 거기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적정 규모에 관련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 지원에 앞서서 그런 거 좀 추가 검토 사항을 그러니까 (해야 한다).

(2023. 7. 21. 재정전문가 A)

아마 서울시가 서울시의 유아의 학생 수가 구별로 어떻게 예측되는지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군구 단위별로 또 시도 단위도 예측 연구가 없어요. 학생 수 감소는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시도 단위나 시군구 단위로 학령인구에 대한 예측 연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서울시 교육청이 25개 자치구별로 유치원 학령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예측을 하고 거기에 적정 규모를 넣어서 그래서 유치원은 몇 개가 필요한지 이것을 산출하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2023. 7. 21. 재정전문가 B)

사. 소결

본 절에서는 지속 가능한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운영을 위해 교원, 학부모, 재정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서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III-2> 면담 내용 정리표

구분	유형	정책에 대한 인식	정책에 대한 보완 및 요구사항
기관장	공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작용으로 인한 정책 실효성 저하 원비 인상을 상한제에 회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방식 전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구분	유형	정책에 대한 인식	정책에 대한 보완 및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유치원 법인화 전환 지속 · 회계 투명성 정책과 감사제도 강화 · 임직원 급여 상한액 설정
	사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유치원에 대한 역차별 · 인상률 상한제에 대한 부담 · 특성화 개수 제한에 대한 어려움 · 기관 자율성 침해 · 책임 및 업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지원 · 책임 및 의무 완화 · 학급당 유아수 감축 및 법제화 반대 · 표준유아교육비 이외의 수익자부담금 운용 허용 혹은 표준유아교육비가 아닌 누리과정비 지원금 상향
	법인 (협동 조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별(학급운영비, 특별사업비, 교사 인건비 등) 지원의 순기능 인식 · 이윤보다는 유아의 발달과 흥미에 적합한 활동 제공 · 지원에 따르는 적절한 관리와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비 현실화 및 인건비 지원 · 시설비 및 학급운영비 지원 강화 · 초등교육과의 연계 및 유치원 교육에 대한 홍보 ·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
	법인 (공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지원 및 재정 건전성 불신 · 현재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 · 바우처(학부모 직접 지원) 제도에 대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인 법인화 또는 국공립기관 확충 ·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인력 지원 · 시설비 및 인건비 지원 · 학부모운영위원회 활성화
교사	공·사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조건적인 지원에 대한 불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 열악한 국공립유치원 환경 개선 · 목적사업비 형식의 지원(유용 방지) · 법인화 전환 지속 및 투명성 강화
학부모	공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비 부담 없거나 적음 · 특성화 활동이 적어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있음 · 방과후 활동에 대한 아쉬움 · 특성화 이외의 사교육에도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교육 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공교육에 대한 투자 및 질 제고
	사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비 부담 있음 · 공립에 비해 재정 지원 부족 ·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에 만족 · 특성화 이외의 사교육에도 관심 	
	법인 (협동 조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비 부담 적음 · 학부모의 요구에 맞추면서도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받음 · 양질의 방과후 교육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지원 체감보다는 기관에 대한 지원(예: 방역 인력, 보조교사, 양질의 교사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요구
	법인 (공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비 부담 없음 · 다양한 유치원 활동에 대한 만족 · 사교육 비선호 · 이음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한글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직접 지원 반대 · 우리나라 입시 경쟁 체제 해소를 위해 · 고교 서열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경쟁 정책 폐지 필요

구분	유형	정책에 대한 인식	정책에 대한 보완 및 요구사항
		· 학부모 직접 지원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 비대화 우려	
재정 전문가		· 기관이 아닌 학부모 직접 지원	· 국가 재정 추가 확보 필요 · 급지 개념 적용에 대한 논의 · 소득별 차등 지원에 대한 논의 · 어린이집과의 지원 함께 고려 ·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시설 환경 개선 지원
		· 원비 인상률 상한제 필요	· 인건비, 급식비 등 보편 항목 지원 · 재정 지원에 따른 의무 부여 · 공립유치원 확충 및 사립유치원 퇴로 마련 · 기관 적정 규모화 연구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해 면담자들은 대부분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정책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약간씩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면담자들의 답변을 크게 ‘정책에 대한 인식’ 과 ‘정책에 대한 보완 및 요구사항’ 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각 면담자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립유치원 기관장의 경우 현재 재정지원을 하며 이에 대한 반작용을 정부에서 전혀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 경감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고 있었으며, 원비 인상률 상한제 또한 사립의 거부감이 있으므로 중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와 같은 자율형 유치원을 활용하여 열어주는 방향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였다.

정책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정하여 현실성 있게 지원할 것, 둘째,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가 병행될 것, 셋째,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전환을 지속할 것, 넷째, 회계 투명성 정책과 감사제도를 강화할 것, 다섯째, 임직원의 급여 상한액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사립유치원 기관장의 경우, 현재 재정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해 사립유치원이 차별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사립유치원은 인건비까지 모두 지원되는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이 차별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인상률 상한제와 같은 정책 때문에 기관 간 여건 차이도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정책과는 상관없이 특성화의 개수를 제한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재정 지원에 따라 기관 자율성의 침해와 책임 및 업무가 증가하는 부당함을 겪고 있으며, 재정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정책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국공립처럼 인건비를 전액 지원할 것, 둘째 재정 지원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완화할 것, 셋째, 유아 1인당 재정이 지원되므

로 유아 수가 줄면 어렵기 때문에 학급당 유아수를 감축하거나 상한선을 법제화하지 말 것, 넷째, 표준유아교육비 이외의 수익자 부담금을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다른 시도처럼 표준유아교육비만큼 지원하지 말고 누리과정비 지원을 상향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법인 유치원의 경우, 일반 사립유치원과 다소 다른 인식을 보였다. 현재 정책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학급운영비 인상, 특별사업비 등 지원의 순기능을 인식하고, 기관 운영 시 재정이 유아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투명한 운영을 중시하였다. 물론 현실적인 기관 운영의 보장을 위해 사립과 같이 누리과정비 현실화, 인건비, 시설비, 학급운영비 등의 지원은 원하였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을 원하지는 않았다. 즉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가 지원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 예로 관리감독 강화와 특성화 활동비에 대한 제한, 원장(설립자)의 인건비 상한액 제한 등을 이야기하였다.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 일반 사립유치원과 다소 다른 인식을 보인 것은 물론 국공립유치원 현장과 비슷한 인식을 보이며, 현재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이 미비하고,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렇게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유보통합’ 정책을 통해 새로운 민간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게 될 경우, 더욱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교육환경의 질이 하향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또한 바우처 제도(교육비 전액 학부모 직접 지원)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그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고 교육 현장도 완전히 무너질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교사의 경우 공립유치원 기관장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사립에 대한 제도적 장치 없이 무조건적인 지원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있었다. 정책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사립학교처럼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독 제도를 선행할 것, 둘째, 열악한 국공립유치원의 환경 개선을 우선할 것, 셋째, 기관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사업비 형식으로 재정을 지원할 것, 넷째,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지속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학부모는 학부모 부담 완화 정책을 통해 현재 어떻게 유치원 교육을 느끼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공립 학부모의 경우 원비 부담이 없거나 적은 것에 만족하였으나 특성화 활동이 적어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활동이 빈약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반면 사립 학부모의 경우 원비 부담은 있으나 방과후에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에 만족하였다. 그리고 공립에 비해 재정 지원이 부족하여 학부모 부담이 발생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공사립 학부모 모두 공통적으로 유치원 교육 및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이외의 사교육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정책에 대해 보완하고 요구하는 사항은 공통적이었다. 첫째, 공교육 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둘째,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질을 제고할 것으로 재정 부담과 별개로 공교육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다만 사립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금을 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공사립 학부모 모두 재정 부담 경감을 통해 완전 무상교육이 되면, 절감된 비용을 유치원 교육과 상관 없이 사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법인(협동조합형)유치원 학부모의 경우, 기관에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원비 자부담 금액이 있음에도 원비가 부담된다고 느끼지 않았으며, 누리과정비 5만원 인상이 되더라도 기관에 지원되어 원활히 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방향(예: 방역인력, 보조교사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재원 중인 유아들의 경우, 양질의 방과후 운영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가 낮았다.

공영형유치원 학부모의 경우, 기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부담금이 없으면 질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공영형 유치원 학부모의 경우 사교육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고 적기교육과 유치원의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 사고력, 창의력 등을 길러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공영형유치원의 학부모는 교육비 전액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왜냐하면 학부모에게 교육비 전액이 직접 지원되면, 이것이 결국 유아 사교육 시장 확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유아 사교육 시장 확대 방지를 위해 학부모에 대한 지원은 지금처럼 간접 지원 방식이 되, 학부모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지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 하길 원하였다.

또한 유아기 사교육을 아무리 막아도 계속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 및 경쟁 교육 체제에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초등, 중등, 대학으로 이어지는 입시체제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고교서열화,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정책이 유아기부터 조기 사교육을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입시 및 경쟁교육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서열화,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정책을 폐지하기를 원한다고 답변하였다.

재정전문가는 재정이 지금처럼 기관이 아닌 학부모 직접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원비 인상률 상한제도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정책에 대해 보완하고 요구하는 사항은 첫째, 국가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것, 둘째, 급지 개념 적용에 대한 제안, 셋째,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득별 차등 지원에 대해 논의할 것, 넷째, 연령이 중첩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에 대한 지원을 함께 고려할 것, 다섯째,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할 것, 여섯째, 인건비와 급식비 등 보편 항목을 지원할 것, 일곱째, 재정지원에 따라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비롯한 공공성 강화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것, 여덟째, 공립유

치원을 확충하고 사립유치원의 퇴로를 마련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것, 아홉째, 저출생에 따라 기관의 적정 규모화 연구를 선행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2.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가. 응답자 특성

총 1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응답자의 10%는 대학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40%는 연구기관에, 50%는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응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40대와 50대가 각각 50%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40%, 여자가 60%였다. 응답자의 학력은 박사가 70%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가 20%로 그 뒤를 이었다. 학사는 10%였다. 관련 분야 근무 기간은 16년 이상이 70%로 가장 많았고, 10-15년 이하가 30%였다.

<표 III-3> 응답자 특성(전문가)

단위: 명(%)

특성		빈도(비율)
전체		10(100)
소속기관	대학	1(10)
	연구기관	4(40)
	유치원	5(50)
	기타	0(0)
연령	30대	0(0)
	40대	5(50)
	50대	5(50)
	60대 이상	0(0)
성별	남자	4(40)
	여자	6(60)
학력	학사	1(10)
	석사	2(20)
	박사	7(70)
관련 분야 근무 기간	5년 이하	0(0)
	6-10년이하	0(0)
	10-15년 이하	3(30)
	16년 이상	7(70)

나. 유아교육비 및 교부금에 대한 질문

1) 학부모 부담 경감 체감

누리과정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된다고 체감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가장 많은 60%가 ‘동의한다’ 라고 응답하였다. ‘보통이다’ 는 2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와 ‘매우 동의한다’ 는 10%였다.

<표 III-4> 학부모 부담 경감 체감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평균	표준편차
학부모 부담 경감 체감	1(10)	0(0)	2(20)	6(60)	1(10)	3.6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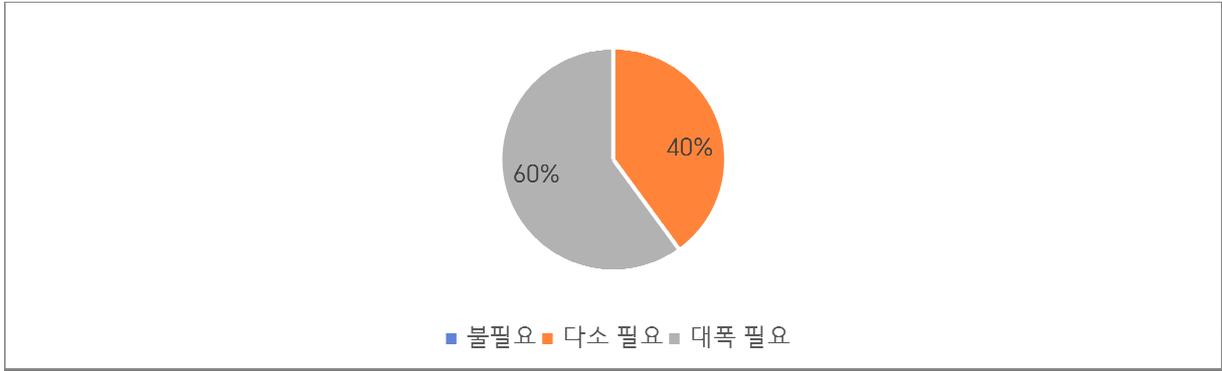
[그림 III-1] 부모 부담 경감 체감

2) 누리과정비 인상에 대한 인식

누리과정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60%는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고, 40%는 ‘다소 인상이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표 III-5> 누리과정비 인상에 대한 인식

문항	불필요	다소 필요	대폭 필요	평균	표준편차
누리과정비 인상에 대한 인식	0(0)	4(40)	6(60)	2.6	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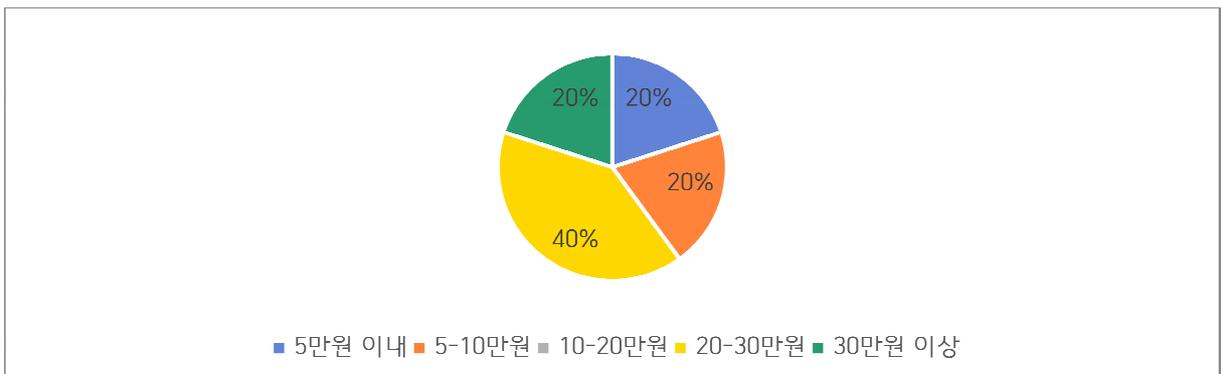
[그림 III-2] 누리과정비 인상에 대한 인식

3) 적정 인상 범위

적정 인상 범위를 묻는 문항에 대해 40%가 20-30만원이라고 응답하였고, ‘5만원 이내’, ‘5-10만원’, ‘30만원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20%였다.

<표 III-6> 적정 인상 범위

문항	5만원 이내	5-10만원	10-20만원	20-30만원	30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적정 인상 범위	2(20)	2(20)	0(0)	4(40)	2(20)	3.2	1.55



[그림 III-3] 적정 인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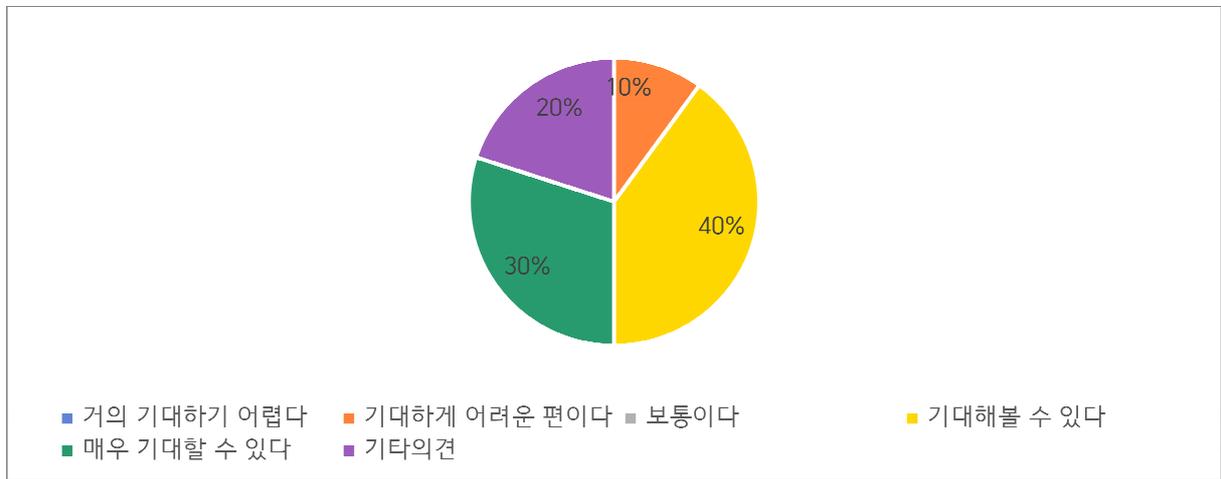
4) 학부모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기대

학부모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묻는 문항에 대해 40%가 ‘기대해볼 수 있다’ 고 응답하였다. ‘매우 기대할 수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30%, ‘기대하기 어려운 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0%였다. 기타의견에는 ‘학부모 부담을 제한하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질문은 기준점이 무엇인가에 따라

원마다 상황이 달라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지원이 대폭 증액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 있었다.

<표 III-7> 학부모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기대

문항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기대하게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기대해볼 수 있다	매우 기대할 수 있다	기타의견	평균	표준편차
학부모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기대	0(0)	1(10)	0(0)	4(40)	3(30)	2(20)	4.13	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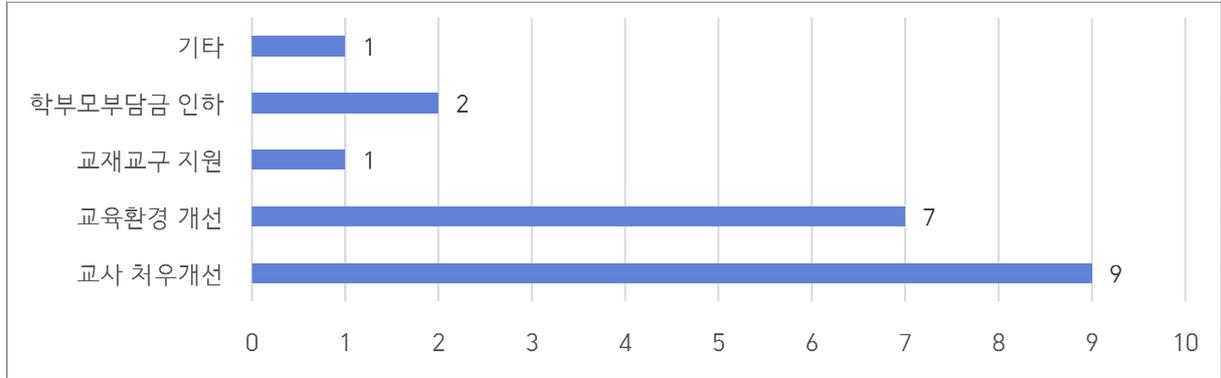
[그림 III-4] 학부모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기대

5) 누리과정비 인상 시 우선 개선 분야

누리과정비 인상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묻는 복수응답 문항에 대해 ‘교사 처우개선’ 이 9명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7명, ‘학부모부담금 인하’를 2명, 교재교구 지원을 1명이 선택하였다. 기타 의견에는 ‘교사의 인건비 지원해 주시거나. 중등 사립학교처럼 재정결함의 형태로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가 있었다.

<표 III-8> 누리과정비 인상 시 우선 개선 분야

문항	교사 처우개선	교육환경 개선	교재교구 지원	학부모부담금 인하	기타
누리과정비 인상 시 우선 개선 분야	9	7	1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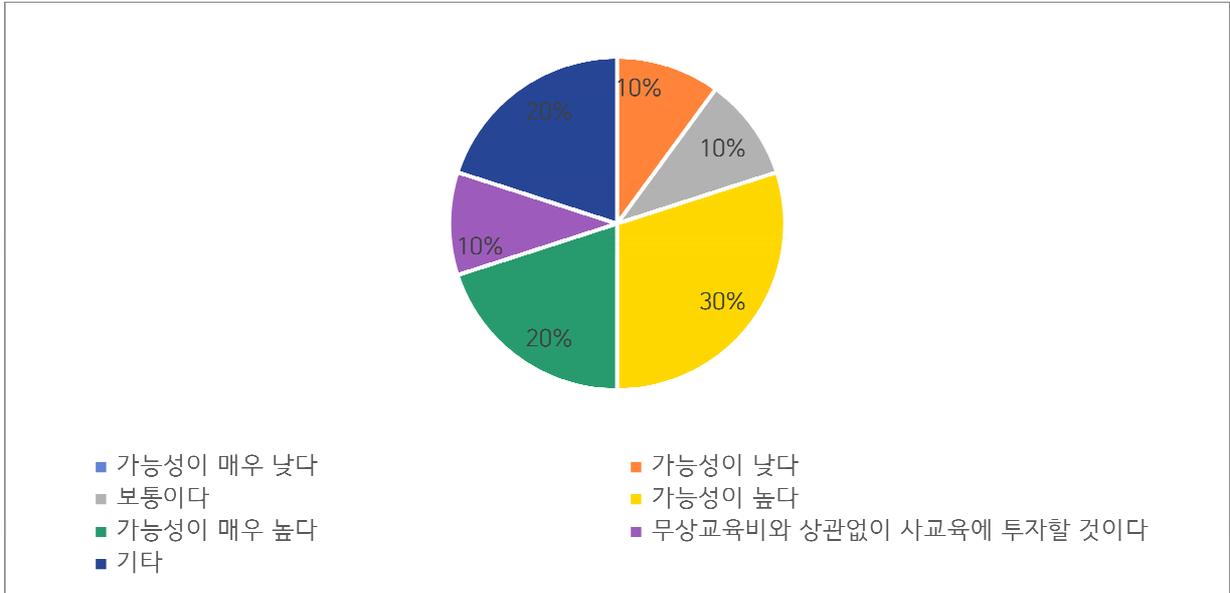
[그림 III-5] 누리과정비 인상 시 우선 개선 분야

6) 학부모부담비 경감 시 사교육비 투자 가능성

누리과정비가 인상되어 학부모부담비가 경감되면, 경감된 비용만큼 학부모들은 자녀의 사교육비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30%는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응답하였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0%였으며, ‘가능성이 낮다’, ‘보통이다’, ‘무상교육비와 상관없이 사교육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0%였다. 기타 의견에는 ‘부모의 성향이나 경제적 성향, 양육태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부모의 교육관 및 경제능력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음. 그렇지만 학부모 경비가 줄어들면 사교육을 원하심. 지금도 방과후특성화교육 1일 1과목이 부족하여 하원 후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 가 있었다.

<표 III-9> 학부모부담비 경감 시 사교육비 투자 가능성

문항	가능성이 매우 낮다	가능성이 낮다	보통이다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상교육비와 상관없이 사교육에 투자	기타	평균	표준편차
학부모부담비 경감 시 사교육비 투자 가능성	0(0)	1(10)	1(10)	3(30)	2(20)	1(10)	2(20)	4.13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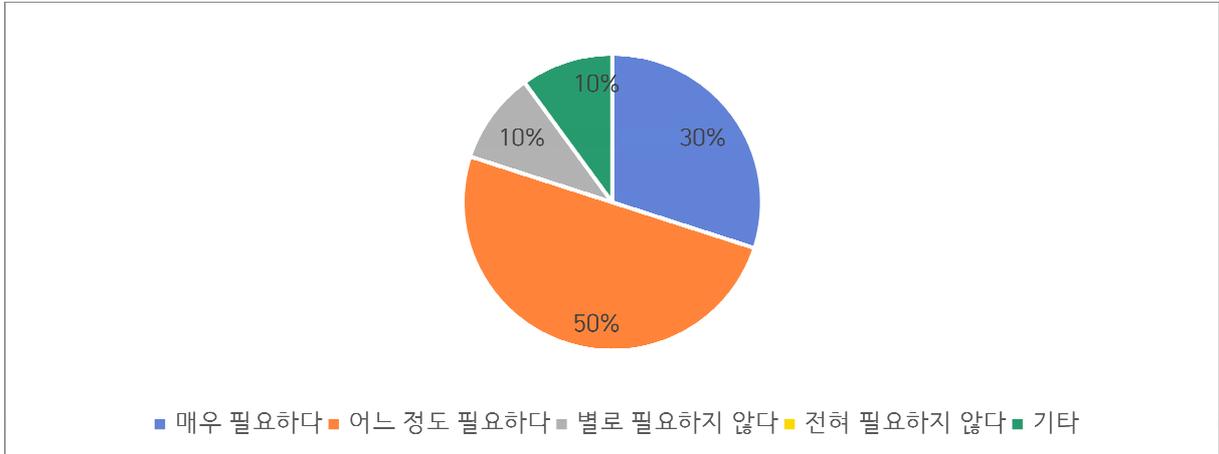
[그림 III-6] 학부모부담비 경감 시 사교육비 투자 가능성

7) 재정지원 확대 시 서울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인식

재정지원 확대 시 서울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가장 많은 50%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0%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0%였다. 기타 의견에는 ‘지금 에듀파인 사용으로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투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점검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법인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회계를 투명하게 진행해 오고 있으며 에듀파인의 도입으로 더 투명해졌으나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가 있었다.

<표 III-10> 재정지원 확대 시 서울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인식

문항	매우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기타	평균	표준편차
재정지원 확대 시 서울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인식	3(30)	5(50)	1(10)	0(0)	1(10)	1.78	0.67



[그림 III-7] 재정지원 확대 시 서울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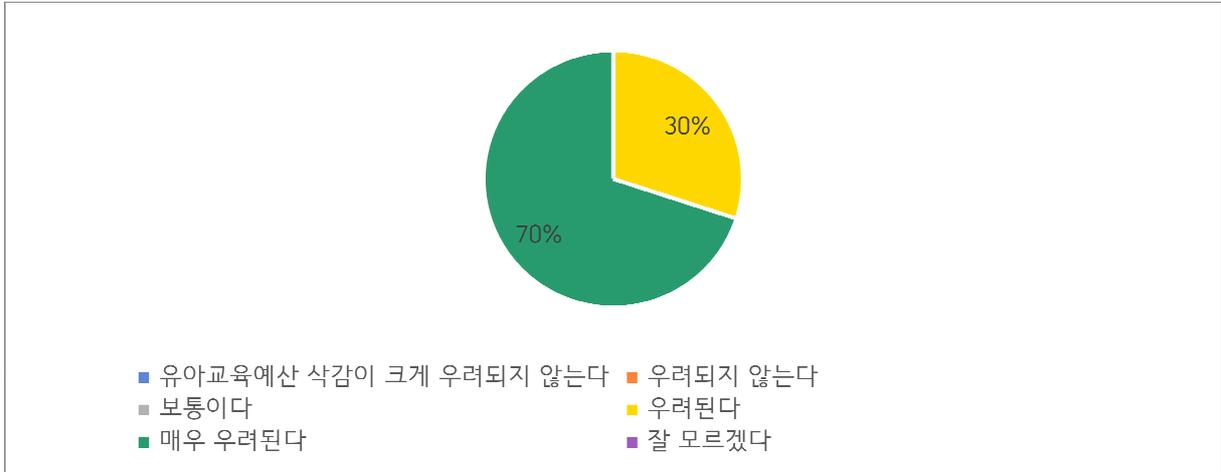
또한,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묻는 문항에 대해 ‘에듀파인 시스템’, ‘교육지원청 차원의 회계 관리’, ‘학교교육 체제로 들어가야 한다.’, ‘회계전담 직원을 배치를 위한 지원금이 필요하다.’, ‘유아교육 현장에 맞는 회계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과 행정인력 확보’, ‘예결산서 공개 및 예결산 심의 절차 강화’, ‘예결산 심사 및 공개 강화’, ‘회계처리 업무지원’, ‘투명하고 통일된 회계시스템 적용(에듀파인의 고도화 및 적용) 및 감사 강화’ 라고 응답하였다.

8)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생각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70%가 ‘유아교육예산 삭감이 매우 우려된다’ 고 응답하였으며, 30%가 ‘유아교육예산 삭감이 우려된다’ 고 응답하였다.

<표 III-11>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생각

문항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	우려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우려된다	매우 우려된다	잘 모르겠다	평균	표준 편차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생각	0(0)	0(0)	0(0)	3(30)	7(70)	0(0)	4.7	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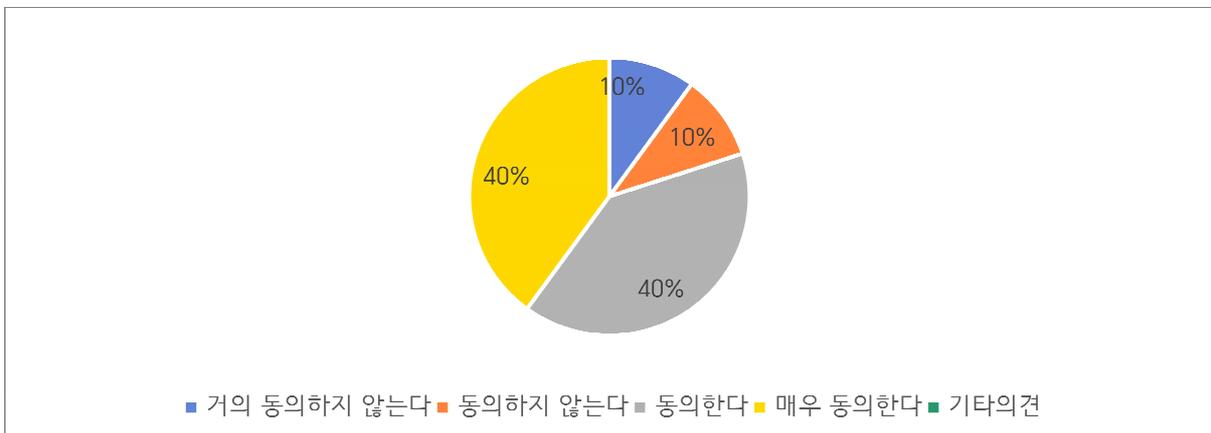
[그림 III-8]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생각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시 공교육 안정성, 지속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생각

유보통합 추가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용하게 될 때, 유초중등 교육사업을 상대적으로 위축하게 만들어 공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0%였다.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0%였다.

<표 III-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 시 공교육 안정성, 지속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생각

문항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기타 의견	평균	표준 편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 시 공교육 안정성, 지속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생각	1(10)	1(10)	4(40)	4(40)	0(0)	3.1	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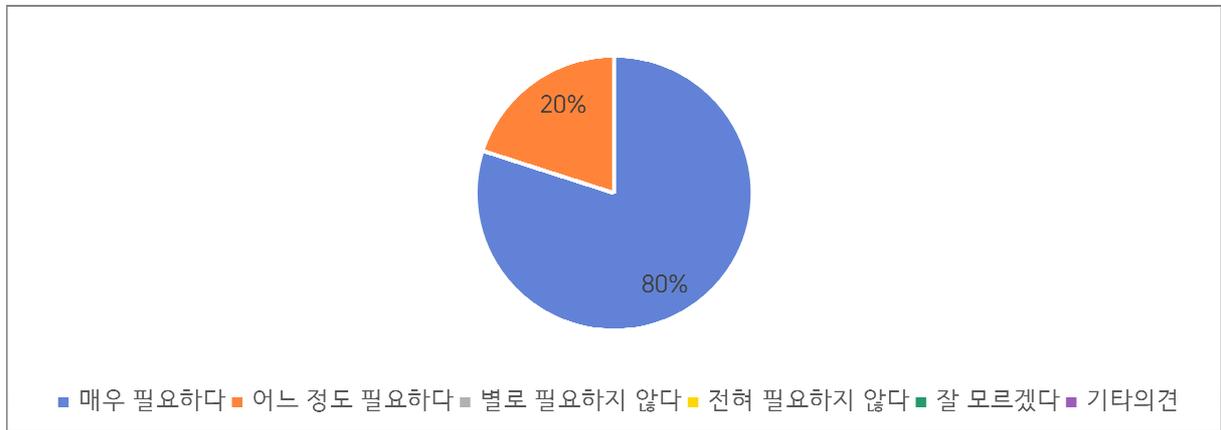
[그림 III-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 시 공교육 안정성, 지속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생각

10)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응답에 대해 80%가 ‘매우 필요하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20%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라고 응답하였다.

<표 III-13>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

문항	매우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기타의견	평균	표준편차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	8(80)	2(20)	0(0)	0(0)	0(0)	0(0)	1.2	0.42



[그림 III-10]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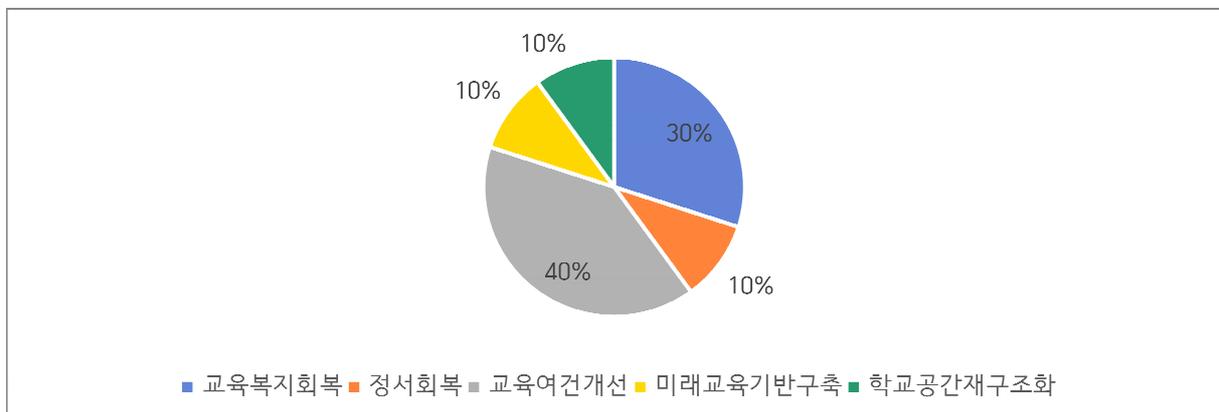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그 밖의 해결 방안을 자유롭게 묻는 문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유보통합을 급작스럽게 추진하기 보다는 보다 신중하고 느리게 검토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추가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야 함’, ‘유치원도 초·중·고 처럼 의무교육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저출산시대에 아동관련정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시대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유아기 부터 유치원인 아닌 유사기관(유치원 처럼 운영되는 스포센터, 영어학원등)으로 유아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사기관으로 내몰리면서 유아기 부터 유아들의 감정과 정서는 무시되고 부모의 판단에 의해 유아들이 불안하게 양육되어지고 있으므로 학교라는 태두리안에서 유아의 인권이 지켜질수 있도록 교육할수 있게 의무교육 도입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효율화’, ‘정부의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함’, ‘일반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투자 확대’ 라고 응답하였다.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우선 투자 분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우선 투자해야 할 곳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응답에 대해 40%가 ‘교육여건 개선’ 이라고 응답하였다. ‘교육복지 회복’ 은 30%, ‘정서 회복’ 과 ‘미래 교육 기반 구축’, ‘학교 공간 재구조화’ 는 각각 10%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III-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우선 투자 분야

문항	교육복지회복	정서회복	교육여건개선	미래교육기반 구축	학교공간 재구조화
지방교육재정교 부금 우선 투자 분야	3(30)	1(10)	4(40)	1(10)	1(10)



[그림 III-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우선 투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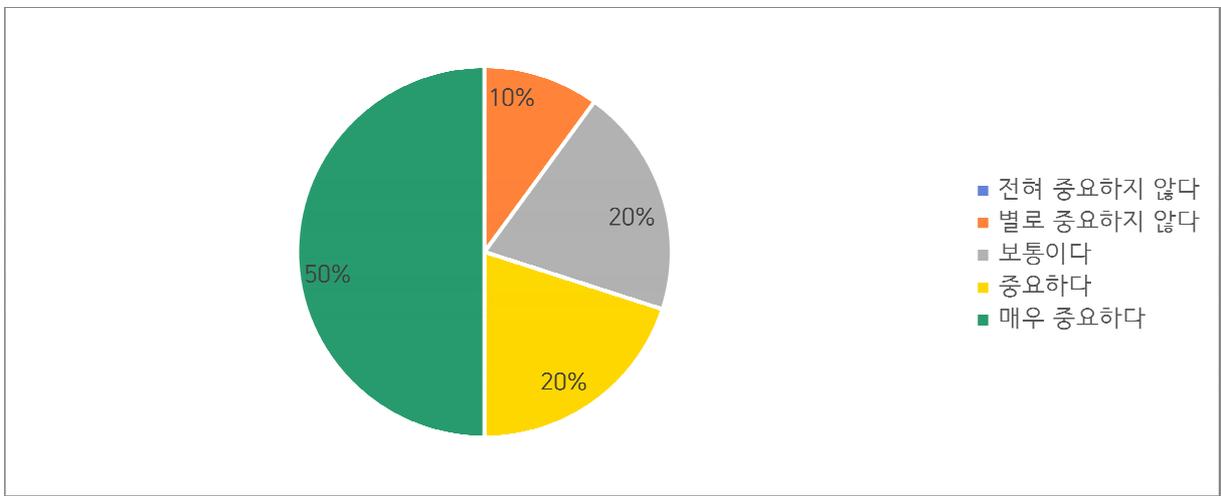
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

1) 원비인상률 상한제 운영 개선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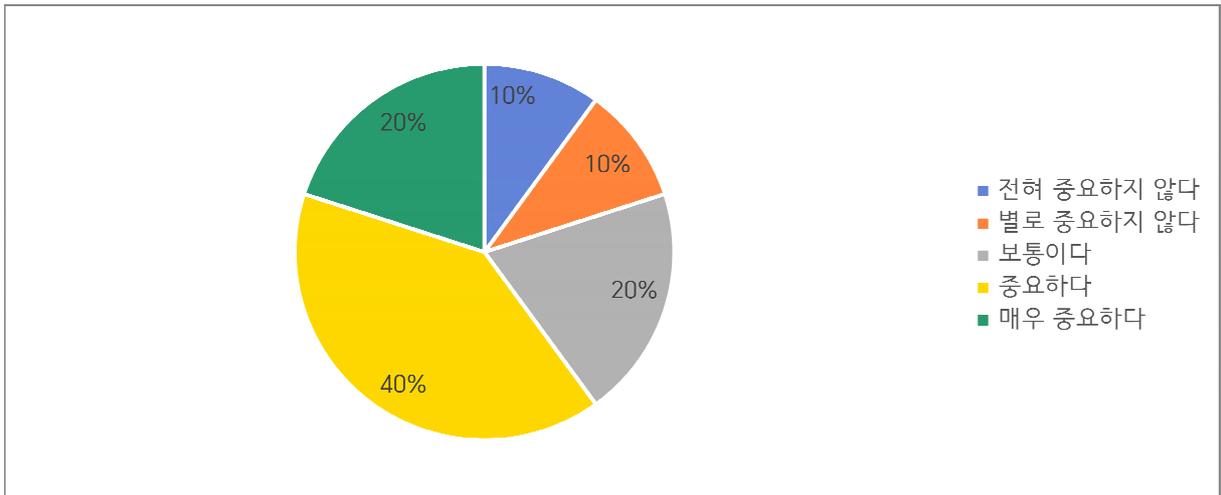
원비인상률 상한제 운영에서 유치원비 산정방식 고시 변경 필요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가장 많았다. ‘중요하다’ 와 ‘보통이다’ 는 20%, ‘별로 중요하지 않다’ 는 10%를 차지하였다. 원비인상률 상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필요에 대해서는 ‘중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40%로 가장 많았다. ‘매우 중요하다’ 와 ‘보통이다’ 는 20%,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는 10%를 차지하였다.

<표 III-15> 원비 인상률 상한제 운영 개선에 대한 인식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평균	표준 편차
1. 원비인상률 상한제 운영에서 유치원비 산정방식 고시 변경 필요	0(0)	1(10)	2(20)	2(20)	5(50)	4.1	1.10
2. 원비인상률 상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위반시 원비 반환 의무 규정 마련	1(10)	1(10)	2(20)	4(40)	2(20)	3.5	1.27
전체						3.8	1.19



[그림 III-12] 원비인상률 상한제 운영에서 유치원비 산정방식 고시 변경 필요



[그림 III-13] 원비인상률 상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원비인상률 상한제 운영 개선과 관련한 추가 및 기타 의견으로는 ‘원비인상률 상한제 법은 유치원운영을 계속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하향식유아교육을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폐지되거나, 폐지하지못한다면, 유아교육내실화를 위하여 당해연도 물가상승율과 공무원 봉급인상률과 맞게 인상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징수금액과 보고한금액은 차이가 없고 같다.’, ‘원비 인상률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원비에 대한 격차가 심하게 존재합니다.’, ‘원비인상률 상한제는 이미 시행된지 오래된 것이 아닌가. 원비인상률 상한제와 관련하여 매년 교육청의 재정지원과에서 검토하고 유치원과 소통한다. 법제화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에 놀란다.’, ‘고시의 인상률은 매해 인건비 인상률 보다 적어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학교법인 유치원은 교사의 호봉이 오르는데 매년 인상률이 인건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여 정말 운영할수 없습니다. 원비 인상률을 현실화 해주시고 위반시 법령의 규정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비 인상률 상한제에 수익자부담금은 제외 되어야 함. 학부모 요청에 의한 신사업(ex. 차량운행, 특별공연관람 등) 시행이 불가함’ 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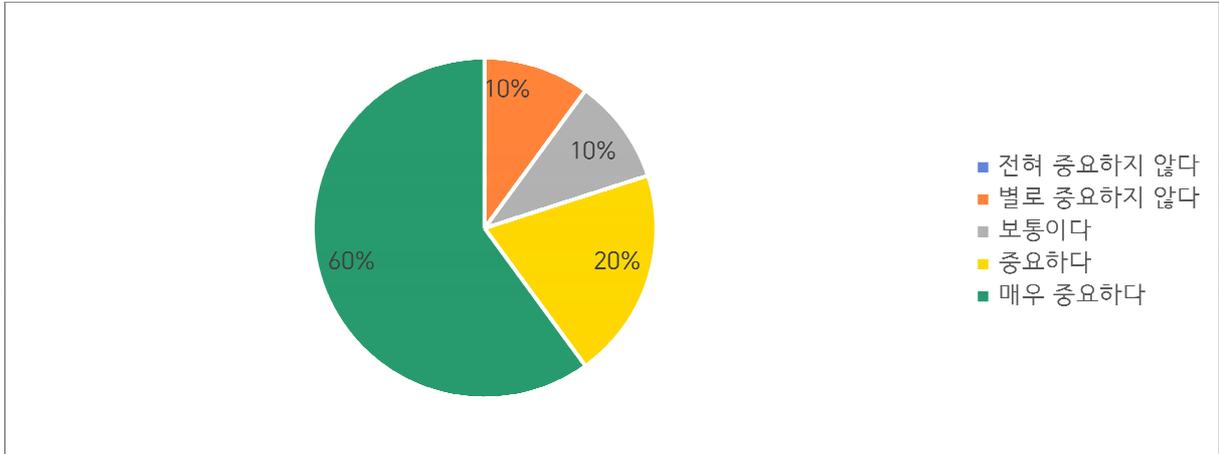
2) 무상교육 추진에 대한 인식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로 가장 많았다. 20%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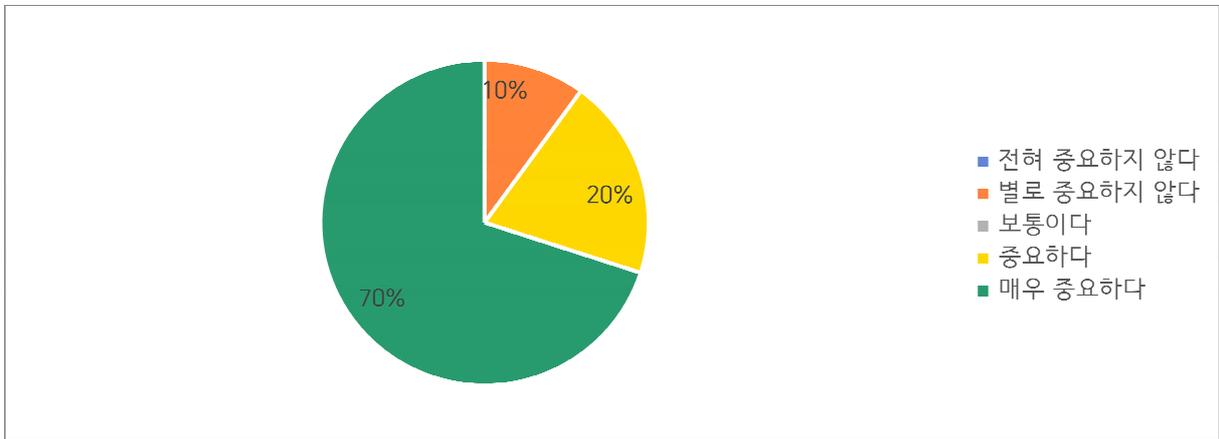
교사 인건비 지원과 표준유아교육비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로 가장 많았다. 20%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0%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6> 무상교육 추진에 대한 인식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평균	표준 편차
1.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표준유아교육비(현재 55만 7천원) 수준의 완전 무상교육 실시	0(0)	1(10)	1(10)	2(20)	6(60)	4.3	1.06
2. 교사 인건비 지원 + 표준유아교육비 지원(현재 55만 7천원)	0(0)	1(10)	0(0)	2(20)	7(70)	4.5	0.97
전체						4.4	1.02



[그림 III-14]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완전 무상교육 실시



[그림 III-15] 교사 인건비 지원 + 표준유아교육비 지원

무상교육 추진과 관련한 추가 및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서울은 지역별로 학부모 교육수준 및 지역의 온도에 따라 유아교육비가 다양하며, 다른 시도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학부모들은 더좋은 시설, 선행학습의 요구등으로 영어학원을 선호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사립유치원들은 각 사립유치원만의 전통성있는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및 고경력 우수한 교사등으로 유아교육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서 유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설비등 낙후된 교육시설까지 충원하는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교사인건비지원과 표준유아교육비지원만으로 내실있는 유아교육을 실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의 시설개선비등도 지원해주고,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곳은 사립의 자율성.자주성을 주어서, 지역별 학부모들의 교육수요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유아들이 영어학원 등으로 내몰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사 인건비 및 표준유아교육비 지원 확보로 인해 안정적으로 유치원 운영이 가능함’, ‘무상교육이라는 단어대신 초중고처럼 의무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단어에서 읽혀지는 어감이 다르다.’, ‘유아 학비교육비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사립중고 재정결함 처럼 유치원도 재정결함

을 진행해 주시면 유치원 발전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출산 시대 의 무교육을 진행해 주세요.’, ‘표준유아교육비는 재산정 되어야 함. 공사립 공통된 유아 교육비가 산정되어야함. 유아교육은 이미 중등 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 및 관리 운영 이 되어야 함’, ‘국내 출생률 추세를 고려한 완전 무상교육 지원이 필요함’ 과 같은 응답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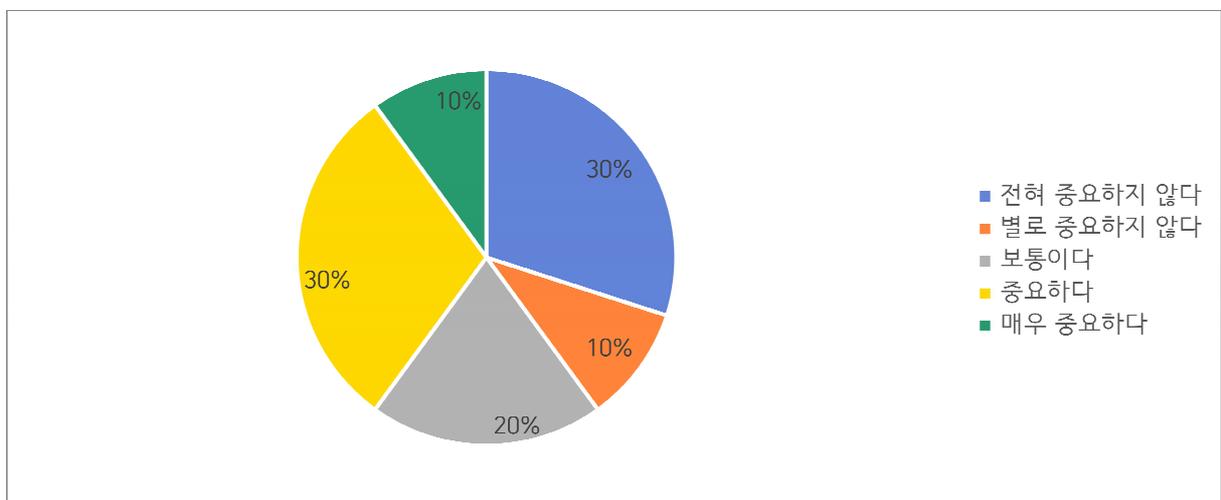
3) 수익자부담금 관리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한지 묻는 문항에 대해 각각 30%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보통이다’ 고 응답한 비율은 20%였으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는 각각 1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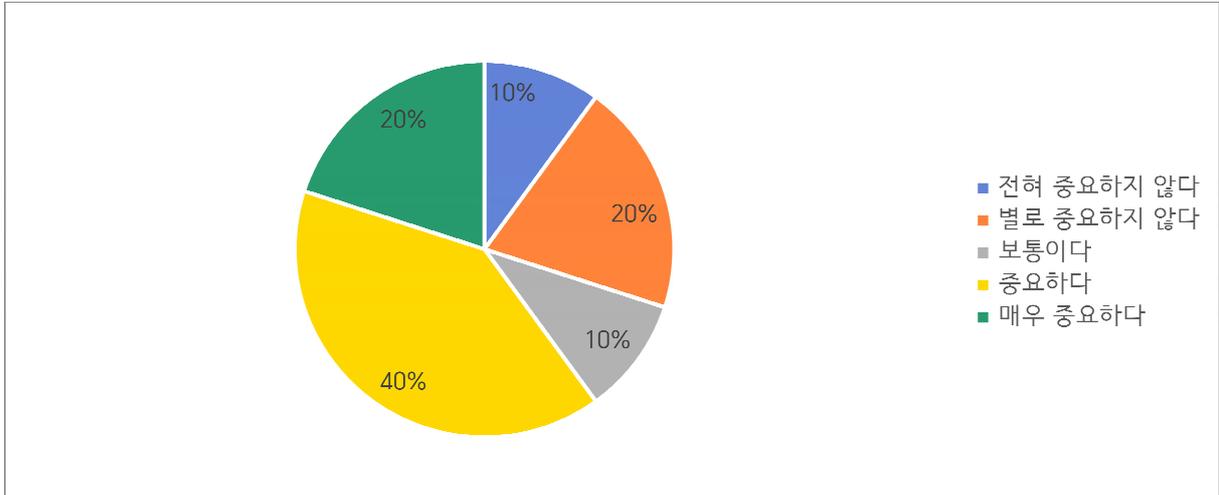
수익자부담금 관련 잔액 반환 및 집행내역 공개 의무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한지 묻는 문항에 대해 가장 많은 40%가 ‘중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0%였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0%였다.

<표 III-17> 수익자부담금 관리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평균	표준편차
1.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법제도 개정 건의)	3(30)	1(10)	2(20)	3(30)	1(10)	2.8	1.48
2. 수익자부담금 관련 잔액 반환 및 집행 내역 공개 의무조항 추가	1(10)	2(20)	1(10)	4(40)	2(20)	3.4	1.35
전체						3.1	1.42



[그림 III-16]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



[그림 III-17] 수익자부담금 관련 잔액 반환 및 집행내역 공개 의무조항 추가

수익자부담금 관리 제도 개선과 관련한 추가 및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사립유치원의 운영위는 자문으로도 충분하게 기능을 하고있습니다. 굳이 법 개정까지 할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립유치원이 공공성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행정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직원이 따로없기 때문에 지금의 자문으로도 충분하게 학부모 만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인식 개선 및 교육지원청의 관리 감독 필요’,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의무는 아니었지만 학교법인유치원에서는 공립에 준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유치원은 규모가 학교급에 비해 매우 영세합니다. 초중등 처럼 모든 지원을 해주시고 제도를 바꿀수 있으나 현장에서 제도를 실천해 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제도나 법령을 시행해주셔야 실효성이 생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치원은 너무도 영세하여 모든 교직원이 교사, 청소, 차량도우미, 행정, 교무등 다 소수의 교직원이 맞아서 운영하다고 정말 힘들고 제도를 따라가기자 매우 힘듭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음’ 과 같은 응답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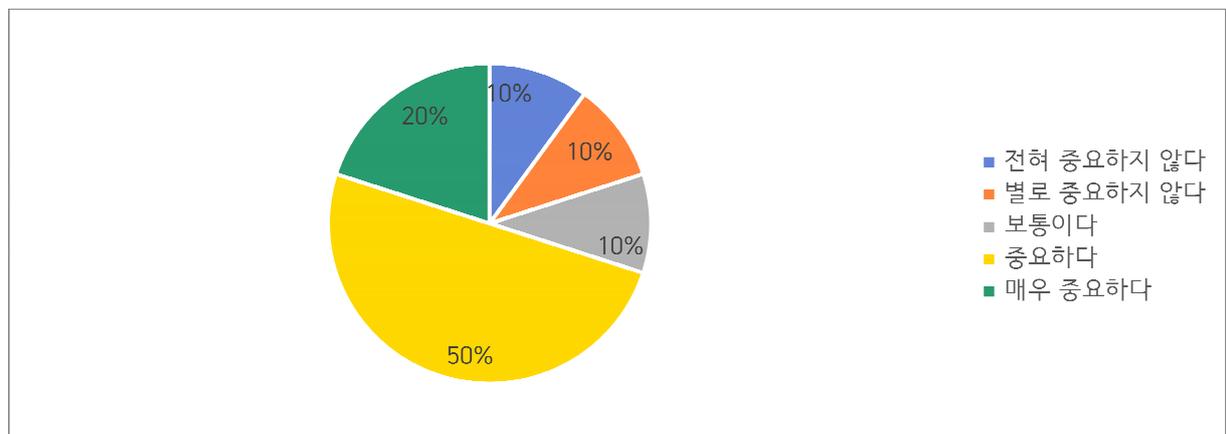
4)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인식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증가 유치원의 경우 학급운영비 차등지원이 ‘중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가장 많았다. ‘매우 중요하다’ 는 20%,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는 각각 10%였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유치원 재정 지원 중지 및 환수가 ‘매우 중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60%로 가장 많았다. ‘중요하다’ 는 20%,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는 각각 10%였다. 공공성 강화 조건 준수 유치원에 재정을 지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60%로 가장 많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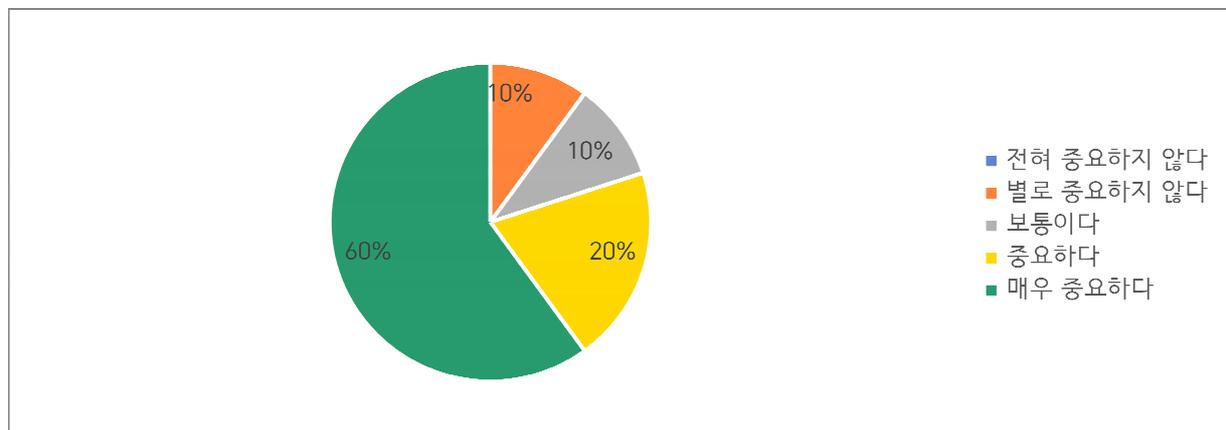
다. ‘보통이다’와 ‘중요하다’는 각각 20%를 차지하였다. 공영형 유치원 재약정 추진에 대해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0%였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였다.

<표 III-18>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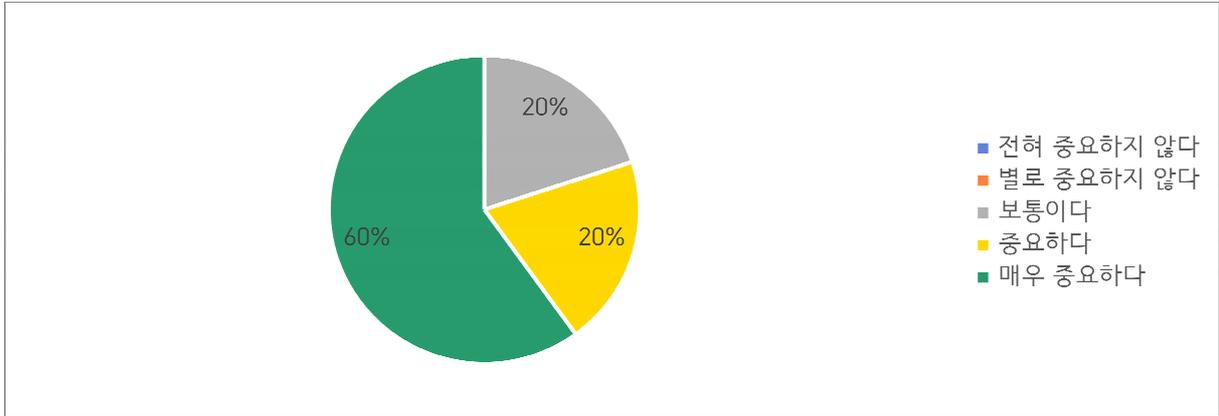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평균	표준편차
1.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증가 유치원의 경우 학급운영비 차등지원	1(10)	1(10)	1(10)	5(50)	2(20)	3.6	1.27
2. 공공재정 부정청구 유치원 재정지원 중지 및 환수	0(0)	1(10)	1(10)	2(20)	6(60)	4.3	1.06
3. 공공성 강화 조건(원비인상률 상한제 준수, 에듀파인, 처음학교로 사용) 준수 유치원에 재정지원	0(0)	0(0)	2(20)	2(20)	6(60)	4.4	0.84
4. 공영형 유치원 재약정 추진	1(10)	0(0)	3(30)	3(30)	3(30)	3.7	1.25
전체						4.0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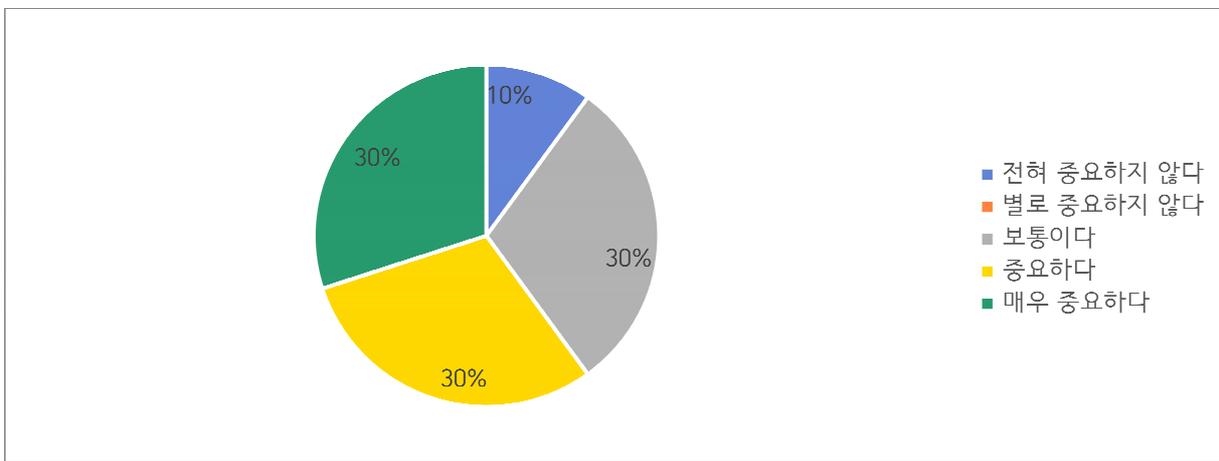
[그림 III-18]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증가 유치원의 경우 학급운영비 차등지원



[그림 III-19] 공공재정 부정청구 유치원 재정지원 중지 및 환수



[그림 III-20] 공공성 강화 조건 준수 유치원에 재정지원



[그림 III-21] 공영형 유치원 재약정 추진

원비인상률 상한제 운영 개선과 관련한 추가 및 기타 의견으로는 ‘유치원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원아의 급감으로 인해 유치원운영이 어려울때도 전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도 순세계잉여금은 필요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유치원설비, 교직원인건비, 유아들의 학습권 강화에 필요한 사립유치원의 재원인 것입니다.’, ‘다양한 재정 지원이 확충된다면 공공성 강화 조건을 당연히 충족하여야 함’, ‘사립유치원 재정과 관련해서 공립처럼 대규모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받고 있지않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학교법인유치원들은 스프링클러나 석면 공사를 해야할 경우 재정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시설비를 지원 해주지 못한다면 대규모 시설개선비를 마련하기위한 재정보호의 방법은 열어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공공성확보를 위해 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는 과정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유치원 유지 보수에 매우 중요하다. 명확한 사유(건물 유지 보수등)가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일시적으로 적립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을 투명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세요.’, ‘. 현재 차등 지

원 안이 시행되었음. 2. 공공재정 부정청구또한 환수 되고 있음. 3. 현재 3가지 모두 준수 되고 있음. 4. 공영형 유치원의 존재 이유를 이해 할 수 없음. 표준교육비 정상화 되고 지원금 정리가 되면 모든 유치원이 공영형과 같은 형태로 운영 가능함', '유치원 운영에 있어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지원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이 있었다.

3.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가. 응답자 특성

총 323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조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Ⅲ-19>와 같다. 응답자 자녀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 3세는 9.9%, 만 4세는 45.8%였으며, 만 5세는 44.3%였다. 부의 연령은 40대가 5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0대(45.2%), 50대(3.4%), 20대(0.6%) 순이었다. 모의 연령은 30대가 6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40대(33.7%), 20대(1.5%), 60대 이상(0.6%), 50대(3.4%) 순이었다.

<표 Ⅲ-19> 응답자 특성(학부모)

단위: 명(%)

특성		빈도(비율)
전체		323(100)
자녀 연령	만 3세	32(9.9)
	만 4세	148(45.8)
	만 5세	143(44.3)
부 연령	20대	2(0.6)
	30대	146(45.2)
	40대	162(50.2)
	50대	11(3.4)
	60대 이상	0(0)
	미응답	2(0.6)
모 연령	20대	5(1.5)
	30대	203(62.8)
	40대	109(33.7)
	50대	1(0.3)
	60대 이상	2(0.6)
	미응답	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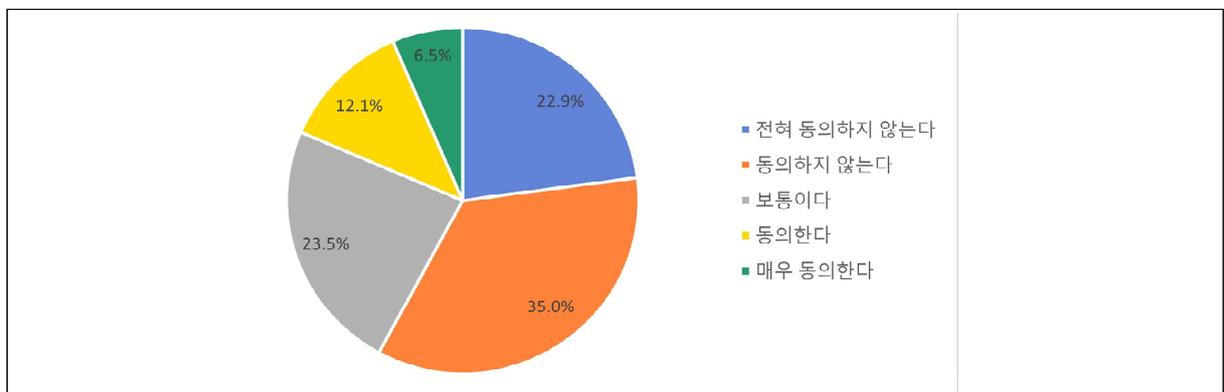
나. 서울 유아교육비에 대한 의견

1) 학부모 부담 경감 체감

누리과정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된다고 체감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가장 많은 35.0%가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보통이다’ 는 23.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는 22.9%, ‘동의한다’ 는 12.1%, ‘매우 동의한다’ 는 6.5%였다.

<표 III-20> 학부모 부담 경감 체감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평균	표준편차
학부모 부담 경감 체감	74(22.9)	113(35.0)	76(23.5)	39(12.1)	21(6.5)	2.44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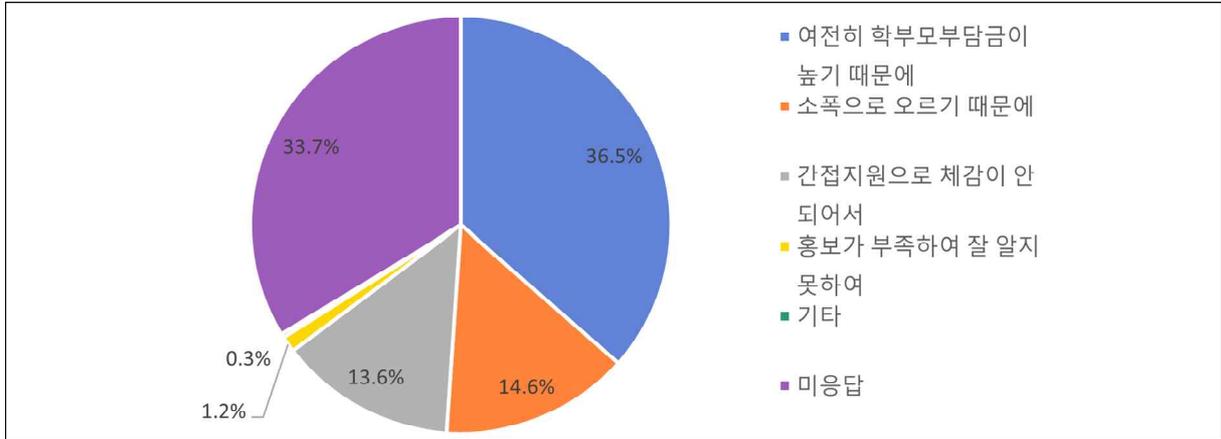
[그림 III-22] 부모 부담 경감 체감

누리과정비 지원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214명 중 118명이 ‘여전히 학부모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라고 응답하였다. ‘소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는 47명, ‘간접지원으로 체감이 안 되어서’ 는 44명, ‘홍보가 부족하여 잘 알지 못하여’ 는 4명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매년 인상률이 있어서 결국 학부모 부담 비용은 증가’ 가 있었다.

<표 III-21>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문항	여전히 학부모 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소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간접지원으로 체감이 안 되어서	홍보가 부족하여 잘 알지 못하여	기타	미응답	평균	표준편차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118(36.5)	47(14.6)	44(13.6)	4(1.2)	1(0.3)	109(33.8)	1.69	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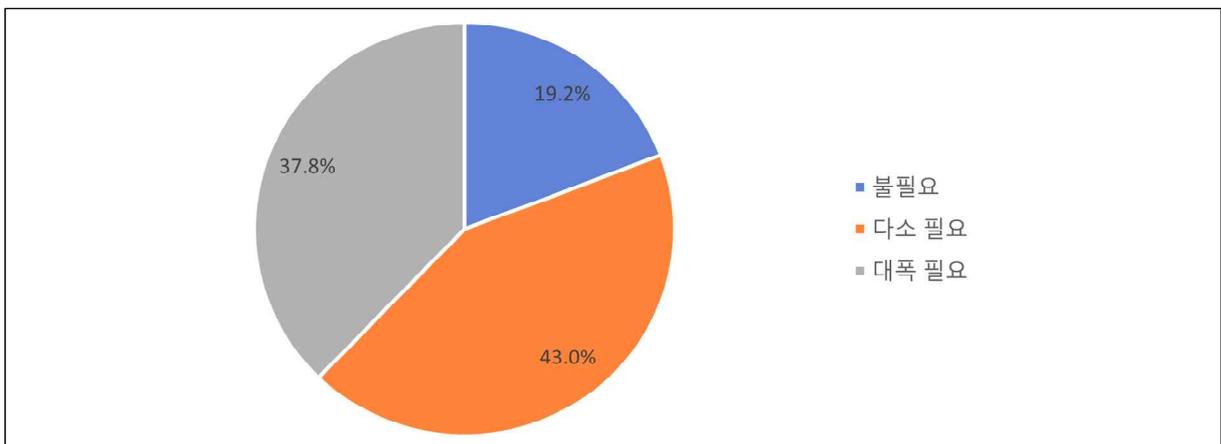
[그림 III-23]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2) 누리과정비 인상에 대한 인식

누리과정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43.0%는 ‘다소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7.8%는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9.2%는 ‘인상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2> 누리과정비 인상에 대한 인식

문항	불필요	다소 필요	대폭 필요	평균	표준편차
누리과정비 인상에 대한 인식	62(19.2)	139(43.0)	122(37.8)	2.19	0.73



[그림 III-24] 누리과정비 인상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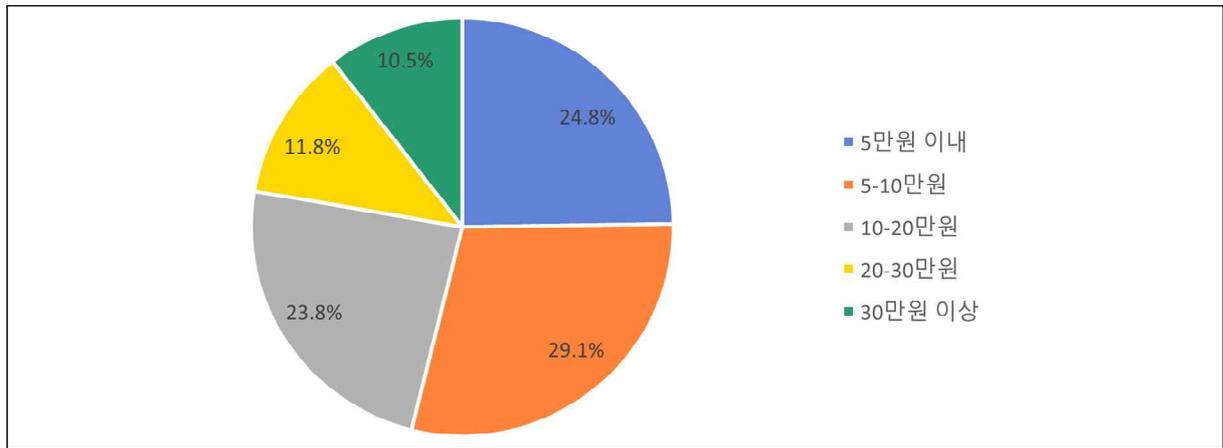
3) 적정 인상 범위

적정 인상 범위를 묻는 문항에 대해 29.1%가 5-10만원이라고 응답하였고, ‘5만원 이

내’ 라고 응답한 비율이 24.8%, ‘10-20만원’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8%였다. ‘20-30만원’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8%, ‘30만원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5%였다.

<표 III-23> 적정 인상 범위

문항	5만원 이내	5-10만원	10-20만원	20-30만원	30만원 이상	평균	표준 편차
적정 인상 범위	80(24.8)	94(29.1)	77(23.8)	38(11.8)	34(10.5)	2.54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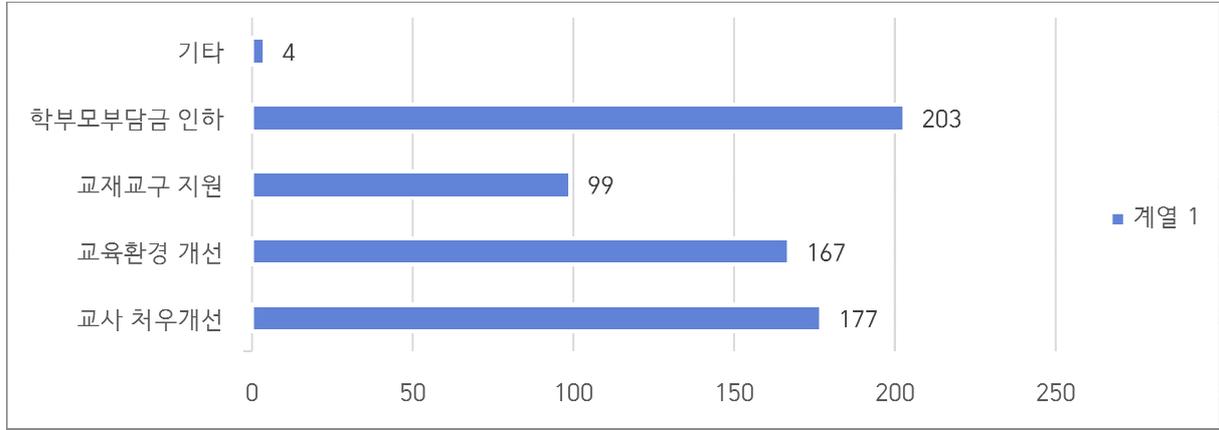
[그림 III-25] 적정 인상 범위

4) 누리과정비 인상 시 우선 개선 분야

누리과정비 인상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묻는 복수응답 문항에 대해 ‘학부모부담금 인하’가 203명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교사 처우개선’을 177명, ‘교육환경 개선’를 167명, ‘교재교구 지원’을 99명이 선택하였다. 기타 의견에는 ‘추가적인 유치원 비용’,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관을 통한 지원이 문제라고 생각됨’, ‘현재 만족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아이들이 보다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유치원도 초중고처럼 국가적인 지원(지원금 인상, 무상교육, 교사교육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립 구분없이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가 있었다.

<표 III-24> 누리과정비 인상 시 우선 개선 분야

문항	교사 처우개선	교육환경 개선	교재교구 지원	학부모 부담금 인하	기타
누리과정비 인상 시 우선 개선 분야	177	167	99	203	4



[그림 III-26] 누리과정비 인상 시 우선 개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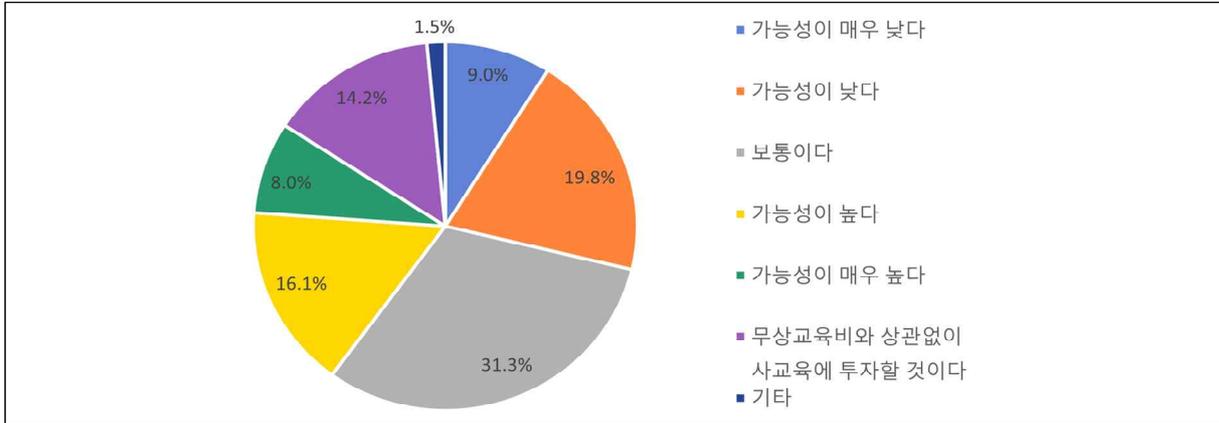
5) 학부모부담비 경감 시 사교육비 투자 가능성

누리과정비가 인상되어 학부모부담비가 경감되면, 경감된 비용만큼 학부모들은 자녀의 사교육비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31.3%는 ‘보통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가능성이 낮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9.8%였으며, ‘가능성이 높다’ 는 16.1%, ‘무상교육비와 상관없이 사교육에 투자할 것이다’ 는 14.2%였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는 9.0%, ‘가능성이 매우 높다’ 는 8.0%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타 의견에는 ‘완전히 무상교육이 되어야 사교육비도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사교육비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비를 학부모가 내지 않는 방향 또는 방과후수업을 하는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비용을 받는 것을 원한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경감된 비용만큼 더 많이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고 경험하게 할 것이다.’, ‘부모들 마다 경제적인 부분과 교육관이 달라 이 부분은 편차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유치원 교육에서 하지 못하거나 내 아이가 원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발레 수영 피아노 등 전문가적인 부분) 그게 사교육을 통해서라면 할 것 같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지루하게 운영되어 학원에 간다.’ 가 있었다.

<표 III-25> 학부모부담비 경감 시 사교육비 투자 가능성

문항	가능성이 매우 낮다	가능성이 낮다	보통이다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상교육비와 상관없이 사교육에 투자	기타	평균	표준편차
학부모부담비 경감 시 사교육비 투자 가능성	29(9.0)	64(19.8)	101(31.3)	52(16.1)	26(8.0)	46(14.2)	5(1.5)	3.3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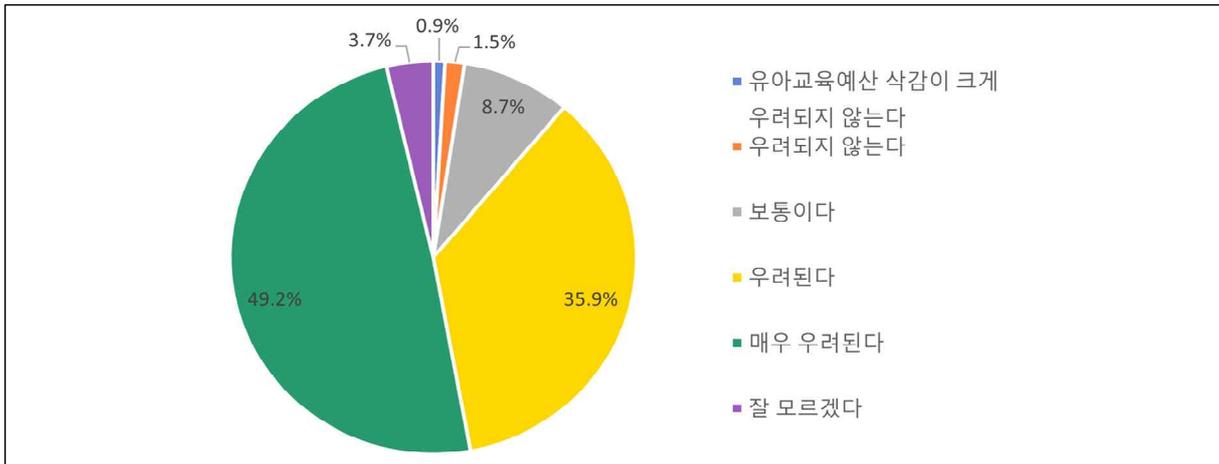
[그림 III-27] 학부모부담비 경감 시 사교육비 투자 가능성

6)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생각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49.2%가 ‘유아교육예산 삭감이 매우 우려된다’고 응답하였으며, 35.9%가 ‘유아교육예산 삭감이 우려된다’고 응답하였다. ‘보통이다’는 8.7%, ‘잘 모르겠다’는 3.7%였으며, ‘우려되지 않는다’는 1.5%,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는 0.9%였다.

<표 III-26>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생각

문항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	우려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우려된다	매우 우려된다	잘 모르겠다	평균	표준 편차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생각	3(0.9)	5(1.5)	28(8.7)	116(35.9)	159(49.2)	12(3.7)	4.42	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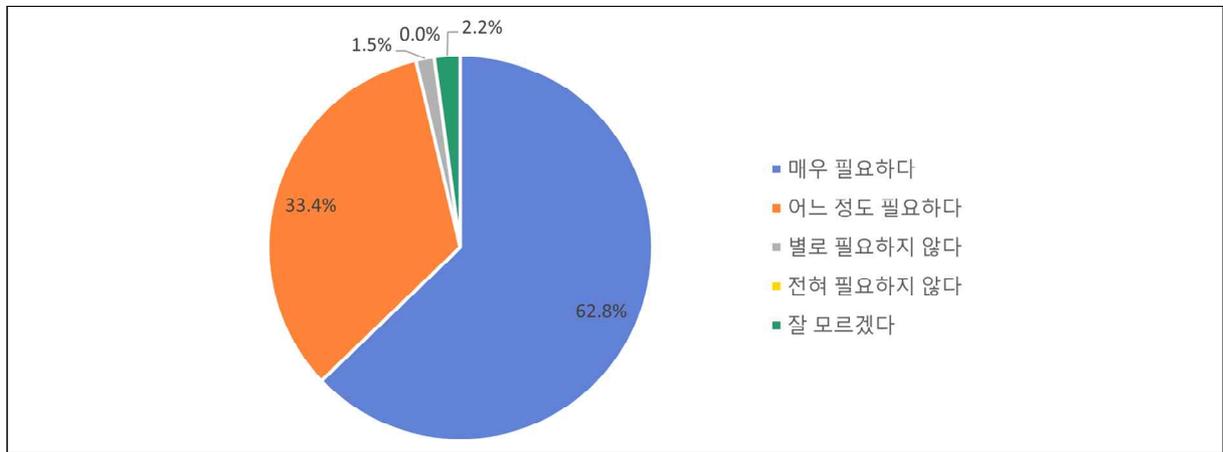
[그림 III-28]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생각

7)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응답에 대해 62.8%가 ‘매우 필요하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33.4%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라고 응답하였다. ‘잘 모르겠다’ 고 응답한 비율은 2.2%, ‘별로 필요하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은 1.5%였다.

<표 III-27>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

문항	매우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평균	표준 편차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	203(62.8)	108(33.4)	5(1.5)	0(0.0)	7(2.2)	1.45	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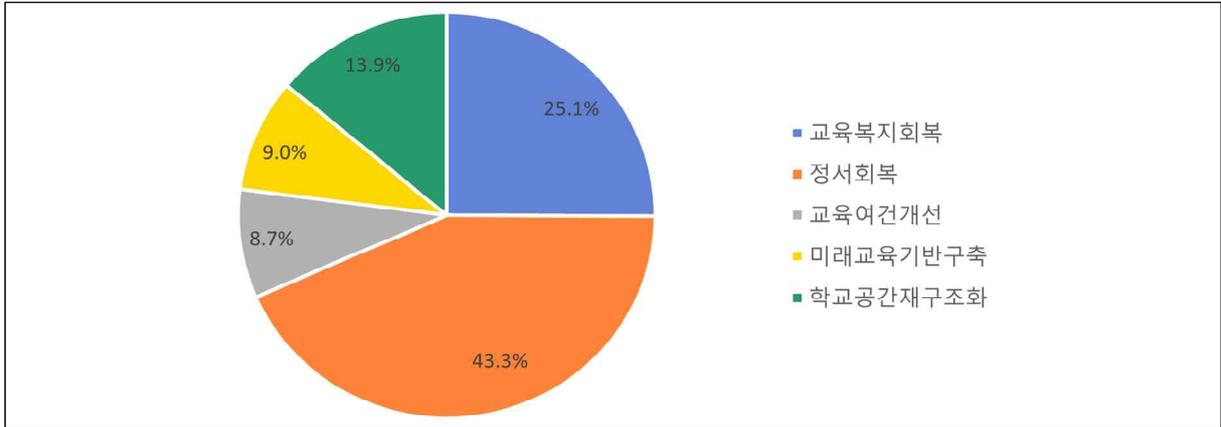
[그림 III-29]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우선 투자 분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우선 투자해야 할 곳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응답에 대해 43.3%가 ‘정서회복’ 이라고 응답하였다. ‘교육복지 회복’ 은 25.1%, ‘학교 공간 재구조화’ 는 13.9%, ‘미래 교육 기반 구축’ 은 9.0%였다. ‘교육여건개선’ 은 8.7%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III-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우선 투자 분야

문항	교육복지회복	정서회복	교육여건개선	미래교육기반 구축	학교공간 재구조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우선 투자 분야	81(25.1)	140(43.3)	28(8.7)	29(9.0)	45(13.9)



[그림 III-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우선 투자 분야

8) 기타 의견(부록 참조)

이 외에도 자유롭게 기타 의견을 작성하는 문항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을 해도 체감없는 원비 제도에 대한 지적, 교사대 아동비율 감소, 유치원 교사 지원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

IV. 서울 유아교육비 부담경감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1. 정책 방향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정책 및 교육감 3기 공약인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추진에 앞서 본 연구를 통해 재정 투입 전에 선행되어야 할 예상 문제점, 보완 필요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정책 실효성 확보하는 것이다.

서울의 여건을 살펴보면 전국 최고 수준의 학부모부담금과 높은 사립유치원 비율, 지역별 편차 등이 존재하고, 재정지원이 증액이 되어도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체감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수도 늘고 있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유치원 수는 공립이 296개원, 사립이 473개원임에도 서울 내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283개원으로 공립유치원 개수만큼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2021~2023년 최근 3년간 학부모부담금 감소하고 있으나, 2023년 시도별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시도는 국공립 경기 28,194원, 사립 서울 289,683원이었다. 서울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서울의 물가, 사립유치원 재정구조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 원비 정책은 재정지원을 대폭 증액해도 유아교육법 25조에 따라 유치원 추가 원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원비인상률 상한제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내재해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제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공약집에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첫 단계로 국공립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여 시설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준, 교사처우수준, 부모부담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였고, 유아교육중장기방안에서도 학부모 체감을 줄이기 위한 대폭 재정지원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은 작년에 이어 동결로 28만원 지원이고, 대신 교육부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부칙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누리과정비)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바로 만 5세 5만원 지원(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정책을 펴고자 하고 있다.

현재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유초중등 교육활동이 축소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유보통합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내국세 연동 교부금 제도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토론했고 있다. 세수 핑크

57조로 역대 최대 세수 감소와 정부의 감세 정책 추진, 합계출산율 0.6대 이하 급하락에 이어, 유보통합과 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정부에 의해 강하게 밀어 붙여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 교육감 3기 공약인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추진을 위한 무상교육제도 등도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완전 무상교육과 함께 의무교육까지 바라보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교부금 확보의 문제와 유보통합이라는 난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의 계획대로 재정을 대폭 투자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정부의 정책은 대폭 지원 조차도 교부금을 통한 5만원 지원 정도이고 아직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재정지원의 실효성 확보 자체라는 목표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초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현재 서울 유아교육비 지원 현황과 학부모, 전문가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추후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연구의 방향을 재설정해 보았다.

앞서 서울 유아교육비 지원 현황과 맥락을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유아교육비인 55만 7천원 기준으로 원비가 이미 높은 유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무상교육 정책을 바로 실시하기 어렵고, 이미 원비가 높은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원비를 낮추도록 원하는 것도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므로 무상교육 정책을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울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대안은 제안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큰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서울 유아교육비 정책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그러나 거시적 변화에 대한 대안 모색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단기 정책으로는 학부모 체감을 높이며 준 무상교육정책에 가까운 재정지원과 이에 걸맞은 규제 제도를 함께 추진하며 점진적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현재는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하게 제시된 후, 서울 유아교육비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정책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우선 본 연구에서 학부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면담 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 [누리과정비 지원, 학부모부담경감 체감정도]

- 학부모의 경우 누리과정비 지원으로 학부모부담금 경감에 대한 체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57.9%였고, 이유는 여전히 학부모 부담금이 높기 때문이라고 응답, 반면 전문가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 경감에 대한 체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70%가 동의함.

2) [누리과정 인상에 대한 요구]

- 학부모의 경우 누리과정 인상에 대해서 필요에 대한 의견이 80.8%, 전문가의 경우, 100% 인상이 필요하다

고 보았는데, 대폭 인상이 60%였음.

3) [적정인상범위]

- 적절 인상 범위에 대해 학부모들은 5-10만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문가의 경우 20-30만원 수준이 가장 높았음.

4) [누리과정 인상시 우선 개선분야]

- 누리과정을 인상시 우선 개선 분야에 대해 학부모는 학부모부담금 인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문가들은 교사처우개선과 교육환경개선이 더 높았음.

5) [학부모부담비 경감시 사교육비 투자 가능성]

- 학부모부담비 경감시 사교육비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보통이다'가 31.3%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전문가들은 '투자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50%였음.

6) [재정확대시 투명성 확보 필요]

- 전문가들은 재정확대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확보 방안은 에듀파인, 교육청 회계관리, 회계전담 인력 지원 등을 제안함.

7)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 우려]

-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학부모 동의 의견 85.1%, 전문가 동의 의견은 80%였음.

8) [교부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재정지원]

- 교부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에 대한 인식의 필요에 대해 학부모들은 96.2%, 전문가들은 100% 필요성 동의, 이 중 '매우 필요하다'가 80%.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을 일방적으로 급히 추진하기보다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우선투자 분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우선투자분야의 경우, '정서회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복지회복', '학교공간 재구조화' 순이었음.

<학부모, 현장 및 재정 전문가 면담 조사 결과>

1) 공립유치원 기관장의 경우 현재 재정 지원을 하며 이에 대한 반작용을 정부에서 전혀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 경감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고 있었으며, 원비 인상률 상한제 또한 사립의 거부감이 있으므로 중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와 같은 자율형 유치원을 활용하여 열어주는 방향이 더 낫다고제안하기도 하였음.

-> 정책보완사항 1)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정하여 현실성 있게 지원할 것, 2)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가 병행될 것, 3)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전환을 지속할 것, 4) 회계 투명성 정책과 감사제도를 강화할 것, 5) 임직원의 급여 상한액을 설정

2) 사립 사인 유치원 기관장의 경우, 현재 재정 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해 사립유치원이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인건비까지 모두 지원되는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이 차별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인상률 상한제와 같은 정책 때문에 기관 간 여건 차이도 발생한다고 주장..정책과는 상관없이 특성화의 개수를 제한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음.. 재정 지원에 따라 기관 자율성의 침해와 책임 및 업무가 증가하는 부담함을 겪고 있으며, 재정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을 우려함.

-> 정책보완사항 1) 공립처럼 인건비를 전액 지원할 것, 2) 재정 지원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완화할 것, 3) 유아 1인당 재정이 지원되므로 유아 수가 줄면 어렵기 때문에 학급당 유아 수를 감축하거나 상한선을 법제화하지 말 것, 4) 표준유아교육비 이외의 수익자 부담금을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다른 시도처럼 표준유아교육비만큼 지원하지 말고 누리과정비 지원을 상향할

것 등을 제안

3) 사립 법인 유치원 기관장 및 교사의 경우, 학급운영비 인상, 특별사업비 등 지원의 순기능을 인식하고, 기관 운영 시 재정이 유아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투명한 운영을 중시, 누리과정비 현실화, 인건비, 시설비, 학급운영비 등의 지원은 원하였지만,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가 지원 반드시 필요.

-> 정책보완사항 1) 관리감독 강화와 특성화 활동비에 대한 제한, 원장(설립자)의 인건비 상한액 제한 2) 사립학교처럼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독 제도를 선행할 것, 3) 열악한 유치원의 환경 개선을 우선할 것, 4) 기관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사업비 형식으로 재정을 지원할 것, 5)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지속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것

4) 공립 학부모의 경우 원비 부담이 없거나 적은 것에 만족하였으나 특성화 활동이 적어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활동이 빈약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 사립 법인유치원 학부모의 경우, 기관에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음, 이에 원비 자부담 금액이 있음에도 원비가 부담된다고 느끼지 않았으며, 재원 중인 유아들의 경우, 양질의 방과후 운영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가 낮았음. 반면 사립 학부모의 경우 원비 부담은 있으나 방과후에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에 만족, 공립에 비해 재정 지원이 부족하여 학부모 부담이 발생한다고 느끼고 있었음.

공립 학부모 모두 공통적으로 유치원 교육 및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이외의 사교육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정책보완사항 1) 공교육 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2)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질을 제고할 것으로 재정 부담과 별개로 공교육에 대한 정비가 필요 3) 사립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금을 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담 경감이 필요.

5) 재정전문가의 경우, 기관이 아닌 학부모 직접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원비 인상을 상한제도 필요하다고 인식

-> 정책보완사항 1) 국가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것, 2) 급지 개념 적용에 대한 제안, 3) 유치원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득별 차등 지원에 대해 논의할 것, 4) 연령이 중첩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에 대한 지원을 함께 고려할 것, 5)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할 것, 6) 인건비와 급식비 등 보편 항목을 지원할 것, 7) 재정 지원에 따라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비롯한 공공성 강화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것, 8)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사립유치원의 퇴로를 마련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것, 9) 저출생에 따라 기관의 적정 규모화 연구를 선행할 것

서울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통적으로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었으나, 원하는 방향이 모두 달랐다. 재정전문가의 경우, 기관이 아닌 학부모에 대한 직접 지원이 부담 경감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관 지원을 통해 교사의 처우와 유아교육 환경이 개선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유아교육비가 인상되어도 학부모가 체감하는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무조건적인 학부모 직접 지원보다는 기관 지원을 위해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정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은 기관별 편차도

심하고 원비 자체가 높은 곳이 많아 누리과정을 지원해도 학부모가 체감하거나 정책의 실효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①표준유아교육비를 인건비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산정하여 지원하고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해줄지, ②표준유아교육비 지원 방식이 아니라 현재처럼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되 누리과정비 지원 향상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공교육에 대한 투자와 질 제고가 필요하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불신하지는 않았지만, 기관과 교사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교육뿐만 아니라 시설 환경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원과 재정전문가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시설환경 등 전반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시도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해소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 특성화 활동에 대한 경계를 잘 알지 못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공교육 내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사교육에 대한 욕구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기관 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사교육(비)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기관 내에서 운영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발달과 흥미에 적절한지도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지점이 있기에 연구와 면담 등을 통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유아기부터 조기에 사교육이 성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나라의 입시 및 경쟁 교육체제에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유아 사교육 시장을 제지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입시 및 경쟁 교육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교서열화, 자율형 사립고 제도 등의 폐지를 전 교육 현장에 걸쳐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재정 지원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한다. 재정 지원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립 기관장을 제외하고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지점이다. 학부모는 외부인이며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기에 “적절한 비용으로 문제없이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투명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나, 내부에서 살펴보는 전문가는 지나치게 높은 원비, 비용 유용, 부적합한 활용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모든 지원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기에 법인 전환, 회계 투명성 정책 방안 마련, 감사제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규제 감독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 외에 후속 연구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기관의 적정 규모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현재 지역 여건에 따른 기관의 적정 규모화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기관의 적정 규모화를 먼저 연구해야 뒤따르는 재정 지원의 규모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기관 적정 규모화 방안을 연구하고, 시도교육청에 모든 재정 부담을 떠맡기지 않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서울 유아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학부모의 경우 높은 원비로 인해 누리과정비가 조금씩 높아져도 체감도가 떨어지고,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이외의 교육적 요구를 사교육에서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맥락이라고 판단된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법인화 기관일수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당장은 어렵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법인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법인 유치원에 초중등과 마찬가지로 최소 교원 인건비 수준의 재정지원을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렵더라도 법인유치원을 바로 세워주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불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법제화하여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교육 재원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특히 유아의 정서 지원,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노후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한 미래 유아교육 환경 개선 등을 사업화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비 제도는 특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학부모의 경우 누리과정비 지원으로 학부모부담금 경감에 대한 체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57.9%였고, 이유는 여전히 학부모 부담금이 높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학부모의 경우 누리과정 인상에 대해서 필요에 대한 의견이 80.8%였다. 약 5만원~10만원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우선 애초 약속했던 누리과정비 30만원 수준의 재정지원과 국가의 재정투자를 통해 학부모부담금을 최대한 낮추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공사립 기관의 차이에 상관없이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유아무상교육비 제도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및 연구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재정투자가 늘어난 만큼의 관리감독 체제의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보통합을 앞두고 논란이 되는 바우처 부모 직접지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요구 또는 일부 교육청 등의 요구 등에 대해서도 ‘기관지원+바우처 간접지원’의 혼합설계 형식으로 완전 무상에 근접하도록 재구조화가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으로 볼 때 사립유치원의 경우, 장기적으로 기존의 지원양식을 모두 통합하여, 교사인건비 지원 + 유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지원 방식으로 개선하는 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통해 기관 안정성 유지(인건비 60-70%) 및 유아모집 원아 수에 따른 유치원 지원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바우처 제도로 인해 애초 교육비 제도 자체로 학부모부담 경감 하에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표 자체를 개선하고, 교육비 재정지원은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가 종속변수가 되도록 방향을 바꾸며, 학부모 부담경감 및 소득과 관련된 문제는 아동수당, 부모보험 등의 복지제도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방식에 대한 전면 재구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지원 및 전달체계,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재구조화할 필요성도 제기되며, 부모 현금성 지원은 소득과

연결하여 지원(차등지원)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예컨대 싱가포르의 경우, 부모 현금지원 정책으로 베이비보너스, 특별저축계좌, 육아휴직제도, 영유아교육기관 학비지원제도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박창현·김명선, 2022).

2. 정책 과제

가. 재정지원 관련

▶ 유아교육비 관련 제도는 정부정책의 우선 개선이 필요하므로, 정부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 누리과정비 30만원 수준 인상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지자체 지원금 매칭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 사립 지원액 총액 산출 및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을 통한 학부모부담 체감을 유도해야 한다.

2. [정부] 학부모 부담금 경감을 위한 추가 5만원 지원에 대한 국고증액이 필요하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을 통한 5만원 지원금의 교부금 지원 아닌 국고증액 지원 계획 마련, 정부, 지자체 협력 구조하에 지원금 마련이 필요하다.

3.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화 정책을 제도화 하여야 한다.

- 교부금 감소 완충장치 ‘교부율 보정’ 제도 개선 등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4. [정부] 수익자부담금 적정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 서울시교육청에서 수익자부담금 적정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아교육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교육부) 관련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격상하여 자문기구를 심의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잔액 반환 및 집행내역 공개에 대한 의무 조항을 추가하여 수익자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 서울시교육청의 '19년 감사에 따른 사립 □□유치원에 대한 특성화교육비 잉여금 학부모에게의 반환 명령은 법적근거 미비, 지도·감독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특성화

교육비 반환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 환송(' 23.3.16.)된 바 있다.

- (법적근거 미비) 사립학교 회계운영 법령에 수익자부담 경비 공개 및 반환 관련 규정 부존재로 적정 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 어려우므로(「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 부존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 사립유치원 수익자부담금 적정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 예시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 |
|--------------------------|---|
| 1.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 3의 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

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 수익자부담경비 잔액 반환 및 집행내역 공개 의무 조항 추가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교육부) 개정 필요하다.

개정 예시

제00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및 사업 추진내역 공개)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당해 사업의 종료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추진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59조(준용) 제12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1항제1호·제3호, 제24조제1항, 제00조,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8조제2항은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회"는 각각 "사립학교경영자"로, "감사"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본다.

5. [정부] 원비 산정 방식 변경 및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아교육법」,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개정 건의를 이미 한바 있다. 현실에 맞는 원비 산정방식 변경으로 합리적인 원비 운영, 교육청에 보고한 원비 준수하도록 이행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 시행이 필요하다.
- (교육부 고시) 고시에 따른 원비 산정방식이 현장 상황 및 다른 법령과 상충되어 실제 적용 불가능한 상황이다.
 - 매 학년도 유치원 원비를 해당 회계연도(매년 3.1.) 개시 이후에 확정할 수 있어 법률 위반 및 학부모의 알권리 침해 소지 발생,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비를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개시일 10일 전까지 공고(보고)해야 하는 조항 준수가 불가하다(매년 10월 말~11월 초에 다음 학년도 유아모집을 위한 원서접수 개시).

유치원비 산정방식 비교

교육부 고시	시·도 교육청 처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유아 대상 징수 금액(단가) 기준으로 당해연도 원비 결정 = 학년도(3. 1. ~ 다음해 2월 말) 기간 중 실제 징수한 총 금액 ÷ 12개월 ÷ 월 평균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참여 원아수 • 산출된 원비에 인상 상한율을 곱하여 다음 학년도에 인상 가능 원비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에서 공고(보고)한 금액(단가) 기준으로 당해연도 원비 결정 = 유치원에서 징수할 예정이라고 공고(보고)한 원비 • 산출된 원비에 인상 상한율을 곱하여 다음 학년도에 인상 가능 원비 도출

- (법령 및 판례) 원비 인상 상한율 초과 유치원 적발 시 유아교육 법령에 따라 유치원비 반환 조치 명령 또는 유아 정원 감축 처분을 해야하나, 현행 법령 체계로는 인상률 상한 위반으로 인한 학부모 피해 회복이 어렵다.
- 유치원비 반환 명령 처분 행정소송 (OO교육청 최종패소, ' 22.4.)에서 유치원 운영자와 학부모 간의 원비계약을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유치원 운영자와 학부모 사이에 체결된 유치원 원비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인상률을 위반하더라도, 학부모를 기망하여 그 원비를 받았거나 징수한 돈을 명목에 맞게 지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 이에 합리적인 원비 운영을 위한 유치원비 산정방식 관련 고시 변경을 하여 기존의 유치원 실제 징수금액 기준을 유치원에서 공고(보고)한 금액기준으로 하고, 원비인상률 상한제 위반시 원비 반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 예시

개정 전 (현행)	개정 후 (변경 제안)
제25조(유치원 원비)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유치원 원비)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징수한 경우 납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교육청 단위의 중장기 정책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장기 과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유보통합, 서울 여건을 고려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고려한 무상교육제도 모형 구상이 필요하다.

-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유보통합, 서울 여건,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고려한 무상교육제도 모형을 구상해야 한다.
-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현실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 등, 현실성 있는 표준유아교육비 상정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

2) [단기 과제] 타 시도 및 지자체 유치원 지원비를 고려한 추가 재정지원비 고려해야 한다.

- 현재 타 시도 및 지자체에서 유치원비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전북 13만 5천원, 울산 21만 5천원, 대전 13만원 등), 이를 고려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건강한 사립유아학교에 재정 우선지원 추진

유치원이 유아학교,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높이지 못하게 될수록 사교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여 공교육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며, 재정지원이 늘어날수록 감사제도 강화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 [중장기] 공영형 유치원 재약정 유지 및 법인 유치원 우선 지원(사립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

공영형 유치원 정책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17년부터

공영형사립유치원 4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4학년도로 약정 만료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2개원 재약정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한양제일유치원, 대유유치원).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23년 본예산 심의 시 사업 예산 전액 삭감되었던 바 있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정책 지속 가능성 확보 필요하다.

- 서울 공영형 유치원의 정책 성과를 살펴보면, 특히 교육비 부담 경감,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학부모, 교직원 만족도가 매우 높다(참고: 서울시교육청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 관련 설문조사 ('23.8.)에 따르면, (만족도)의 경우, 학부모 93.6%, 교직원 91.4%, 원장 100%, (재지정 희망)의 경우, 학부모 97.4%, 교직원 100%, 원장 100% 였음).

□ (제안)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면서도 국공립유치원의 장점을 살린 서울시교육청의 대표적인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모델이다. 그러나 공영형유치원이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는 법인화 정책에 있다. 새로 확대가 어렵다면 **기존 법인 유치원들을 공영형 유치원 제도와 함께 묶어 사립 법인화 활성화 정책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

- 공영형 유치원 외 학교법인 사립유치원,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의 선도 유치원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법인 유치원을 유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립법인유치원 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건강한 사립유아학교에 재정 우선지원 정책** 추진하는 방안이다.

2. [단기] 공공성 강화 조건 충족 유치원 대상 재정 지원 정책 유지

□ 법인유치원 지원 정책과 함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건인(원비 인상률 상한제 준수, K-에듀과인 사용, 처음학교로 사용 등) 조건준수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부적정 운영 유치원에는 재정지원 중지·환수·배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23 상반기)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치원: 456개원 중 453개원임).

- 원비 인상률 상한제 준수, 'K-에듀과인' 및 '처음학교로' 사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학급운영비, 교원기본급보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감사거부로 유아모집 정지처분 중인 유치원에서 모집 강행하는 등 법적 근거 미비로 행정처분 효과 확보 어려우므로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중앙일보' 모집정지 '에도 신입생 모집...사립유치원의 ' 배짱영업 ('23.3.29.) 노원구 OO유치원은 감사 거부로 유아모집 정지 처분 되었음에도 새 학기 27명의 신규 원생을 모집한 바 있음).

- 재정지원을 충분히 하되, 부정청구 등 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 중지, 환수 정책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 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 등을 실시해야 한다.

3. [단기/중장기]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 및 사교육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 대상 실태조사, 유치원 이용 유아의 방과후과정 외 사교육 이용실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맞지 않는 교육을 실시하는 사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 유아의 발달과 학습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 기준을 높여야 한다. 서울 국공립유치원만큼의 비율로 성행 중인 서울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교육내용과 방법, 관리운영에 대한 철저한 파악을 통해 3-5세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 제고 노력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

4. [중장기과제] 인구정책 및 교육 공공성 기반, 유아학교 활성화 및 단계적 통폐합을 위한 중장기방안 설계가 필요하다(향후 5년, 10년 계획 마련 필요).

- 유아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방안을 다시 논해야 한다. 특히 노후화된 유치원들을 개선하고 미래 유아학교 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공교육 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선택권을 높이고, 사교육 수요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 추후 유아교육비 논의를 할 때, 인건비와 급식비 등 보편 항목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유치원 지원을 위한 기관 적정규모 기준 확립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위해 사립유치원 퇴로를 확실히 열어주고, 건강한 공사립 유아학교 제도를 확립하여 학교제도를 안착시킬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 고영미(2008).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바우처의 발전 방안.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2(2), 167-187.
- 관계부처 합동(2023. 4.).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1. 5. 2).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 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9. 12.).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 마련 : 5개 정책분야, 25개 핵심과제 선정·추진.
- 교육복지정책국(유아교육정책과)(2018). 제2차(2018~2022)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 교육부(2023a). 유아대상 영어학원 추이.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3b).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 김경희(2022). 전문가들, “만 5세 입학보다 완전 무상교육 먼저”. SBS 뉴스 (2022년 8월 3일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4755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023. 4. 1. 인출).
- 김근진·문무경·조혜주(2018). 육아정책 재정조달 거버넌스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사현·홍경준(2014). 출산율 및 여성노동참여율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 정책균형관점에서 본 OECD 21개국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41(2), 213-238.
- 김상정(2023). 시도교육감협의회, ‘초중등교육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를 것’. 교육희망 (2023년 10월 26일자). <https://news.eduhope.net/25675> (2023. 6. 1. 인출)
- 김연명·김송이(2009). 보육바우처의 도입과 한국 보육정책의 딜레마. 한국영유아보육학 (59), 1-27.
- 김영옥(2013).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 정책연구. 교육과학기술부, 광주광역시교육청.
- 김은설·박진아·이동하(2014). 통합 재무회계규칙 운영을 위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Ⅱ-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만선옥·배지희(201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자녀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 아동교육, 23(4), 263-285.
- 박유영(2023). [포커스M] 아이 줄고 유치원 줄폐업에도...’나 홀로 고공행진’ 영어유치원. MBN 뉴스 (2023년 3월 27일자).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323926>, 2023. 4. 1. 인출)
- 박은정·이정원·윤지연·김난주(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육

- 아정책연구소.
- 박창현·김근진·윤지연(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박창현·김근진·이재희·조혜주·김진석(2019).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 도입방안 연구. 교육부, 충청남도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 박창현·이덕난(2021). 서울 더블어키움 (공영형) 유치원의 성과와 추후 과제: 학부모 만족도와 정책요구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5(2), 27-48.
- 백학영·안서연(2012).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 한국사회정책, 19(3), 9-47.
- 보건복지부(2023a). 2022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23b).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3. 10. 11.). 서울 유아대상영어학원 329개, 전년대비 무려 18곳 늘어나고, 고액비용문제 심각해...에서 2023. 11. 1. 인출.
- 서문희·양미선(2012). 유아 사교육비 추정. 육아정책연구소.
- 서울교육통계(2023). 2023년 간단한 서울교육통계(핸드북).
- 서울특별시교육청(2023a). 2023년도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계획(안).
- 서울특별시교육청(2023b). 2023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2023c). 2023학년도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계획.
- 서울시특별교육청 보도자료(2023. 6.). 서울시교육청,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실시.
- 송기창(2011). 유아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유아교육연구, 31(1), 43-59.
- 양미선(2013).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 사교육비 지출규모 변화.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김길숙·손창균·김정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II. 육아정책연구소.
- 양성욱(2016).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공공 가치 실현의 실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3), 177-208.
- 우명숙(20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 교육행정학연구, 24(1), 247-266.
- 유치원 알리미(건물현황)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에서 인출.
- 유치원 알리미(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현황)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에서 인출.
- 유치원 알리미(급식실시 현황)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에서 인출.
- 유치원 알리미(방과후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에서 인출.

- 유치원 알리미(수업일수 현황)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에서 인출.
- 유한욱(2005). 바우처제도 사례 및 추가도입방안. KDI 용역보고서.
- 유희정(2008). 보육시설 및 유치원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육아정책포럼*, 10, 11-16.
- 유희정 · 이정원 · 안재진 · 최진(2019).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과 정책 과제.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래혁 · 남재현(2020).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9(3), 27-56.
- 이성규 · 고재욱(2019).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쟁점 고찰.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3(1), 93-118.
- 이윤진 · 김지현 · 이민경(2016).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 · 이규립 · 조아라(2015).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 · 이정원 · 김문정(2013). 5세 누리과정 도입 후 교육·보육 지출비용 변화 분석: 2011-2012년 동일기관 이용 가구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7(2), 166-189.
-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2023). 2022~2023년 시·도별 유치원 학부모부담금.
- 이진화 · 박진아 · 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 이진화 · 박창현 · 윤지연(2015). 「3-5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실태와 정책 효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이채정(2018). 무상보육정책의 영유아 연령별 자녀양육비용 경감 효과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7(2), 109-132.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2022. 2).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계획.
- 임혜성 · 김윤희(2022).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활용한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정책유형화 기초연구. *유아교육연구*, 42(3), 105-133.
- 정수지 · 박윤현 · 송지나 · 김대웅 · 이순형(2016). 보육비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소득계층별 유아 보육비 및 사교육비 변화: 무상보육정책 시행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7(2), 27-42.
- 최성은 · 최석준(2007). 바우처 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은영 · 김나영 · 최윤경 · 엄문영(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 · 박은정 · 차선자 · 권혜진 · 박유경(2022). 양육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양육지원법 제정 기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 · 염혜경(2017). 해외 주요국의 유치원 재정지원 관리체계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강은진·조미라·조숙인·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박은정·김태우·우석진(2019).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성과 분석 연구. 육아정책

연구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2022).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계획(표준 유아교육비 차액지원).

하연섭·유영미(2017).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정책의 분석-제도주의적 해석-. 한국정책학회 보, 26(4), 227~253.

한국교육개발원(2012).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e-나라지표(2023).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및 예산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6 에서 2023. 11. 1. 인출.

Early Childhood and School Education Funding - Eurydice (2022.12.23.).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norway/early-childhood-and-school-education-funding> 에서 2023.05.03. 인출.

Early Childhood and School Education Funding - Eurydice (2022.12.23.).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denmark/early-childhood-and-school-education-funding> 에서 2023.05.03. 인출.

Early Childhood and School Education Funding - Eurydice (2022.12.23.).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sweden/early-childhood-and-school-education-funding> 에서 2023.05.03. 인출.

Early years and childcare in England: Public spending, private costs, and the challenges ahead https://ifs.org.uk/articles/early-years-and-childcare-england-public-spending-private-costs-and-challenges-ahead#footnote1_urrmfk8 에서 2023.05.08. 인출

Friedman-Krauss, A. H., Barnett, W. S., Garver, K. A., Hodges, K. S., Weisenfeld, G. G., Gardiner, B. A., & Jost, T. M. (2022). The State of Preschool 2021: State Preschool Yearbook.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OECD(2015). *Starting Strong 4*. Paris: OECD.

OECD(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참고 사이트]

교육부. 유아교육. <https://www.moe.go.kr/main.do?s=moe>.의 각 학년도별 유아학비 지원계획.

[부록 1] 면담 질문지

서울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면담자료

* 연구의 목적과 방향

- 정부 정책 및 교육감 3기 공약인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추진에 앞서 본 연구를 통해 재정 투입 전에 선행되어야 할 예상 문제점, 보완 필요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정책 실효성 확보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유보통합 추진방안 및 제 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추진 예정, 정부 재정지원 확대 될 경우 정책의 적합성, 예상 문제점, 보완사항 등이 있다면? 이러한 지원 방식에 동의하나?
(* 서울여건: 전국최고수준 학부모부담금, 높은 사립유치원 비율, 지역적 편차 등이 존재함)
- 재정지원 대폭 증액되어도 유아교육법 25조에 따라 유치원에서 추가 원비를 정하여 학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음, 학부모교육비 부담경감 효과가 있는가?
- 사립에 재정지원 강화를 해도 직접적인 교육과 돌봄 여건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대안은?
- 재정지원을 늘릴 경우,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이 필요한가? 대안은?

<질문내용>

- 1) 앞으로 정부 재정지원 확대될 경우, 정책의 적합성, 예상 문제점, 보완사항, 사립 공성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요청이 늘어날 수 있음. 이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입장은?
- 2) 원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나? 원비 인상률 상한제, 표준유아교육비 제도 개선 등
- 3) 기타의견

[부록 2] 전문가 의견 조사 참여 전문가 명단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위	전공
1	이○○	중앙대학교 교수	유아교육
2	안○○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유아교육
3	이○○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유아교육
4	이○○	배화여자대학교 교수	유아교육
5	엄○○	서울대학교 교수	교육행정
6	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조사관	교육행정
7	전○○	상명대학교 부속 유치원 원장	유아교육
8	강○○	선화유치원 원장	유아교육
9	김○○	경희유치원 원장	유아교육
10	김○○	햇빛유치원 원장	유아교육

[부록 3] 전문가 의견조사지

서울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서울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유아교육과 유치원 정책 마련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바쁘시겠지만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적 사항이나 설문내용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조사자의 의무)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3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본 조사의 응답 결과가 연구 보고서에 활용될 것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 연구책임 : 박 창 현(미래교육연구팀, 연구위원) subi0407@hanmail.net



유아교육비 및 교부금에 대한 질문

현재 3-5세 대상 누리과정비는 국가가 무상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부분 무상으로 누리과정비 28만원, 방과후과정을 7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유아학비+학부모부담금)

1. 그간 누리과정비(무상교육비)는 2-3만원 폭으로 조금씩 올랐습니다. 누리과정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된다고 체감하시는지요?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2. 현행 월 28만원 수준의 누리과정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인상이 불필요하다 ② 다소 인상이 필요하다 ③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3. 누리과정비의 적정 인상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5만원 이내 ② 5-10만원 ③ 10-20만원 ④ 20~30만원 ⑤ 30만원 이상

9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⑥ 기타의견()

9-1. 그밖의 해결방안이 있다면 써주세요

()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우선 투자해야 할 곳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유초중등교육에 들어가는 재원임)

- ① 교육복지회복(맞춤형 교육복지, 특수교육지원, 다문화교육, 급식지원 등)
② 정서회복(유아 건강 증진 지원, 심리안정 등)
③ 교육여건개선(학급당학생수 감축, 학교신증설, 과밀학교 해소, 공교육확대 등)
④ 미래교육기반구축(인공지능, 생태전환교육 등)
⑤ 학교공간재구조화(노후시설 개선, 놀이터개선 인권친화적 공간 조성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

다음은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및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현재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중요도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에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원비 인상률 상한제 운영 개선

정책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원비인상률 상한제 운영에서 유치원비 산정방식 고시 변경 필요 (유치원 실제 징수금액 기준과, 유치원에서 보고한 금액 기준의 차이가 존재)	①	②	③	④	⑤
2. 원비인상률 상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위반시 원비 반환 의무 규정 마련	①	②	③	④	⑤

3. 추가 및 기타의견

2) 무상교육 추진

정책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표준유아교육비(현재 55만 7천원) 수준의 완전 무상교육 실시	①	②	③	④	⑤
2. 교사 인건비 지원 + 표준유아교육비 지원(현재 55만 7천원)	①	②	③	④	⑤

3. 추가 및 기타의견

3) 수익자부담금 관리 제도 개선

정책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법제도 개정 건의)	①	②	③	④	⑤
2. 수익자부담금 관련 잔액 반환 및 집행내역 공개 의무조항 추가	①	②	③	④	⑤

3. 추가 및 기타의견

4) 공공성 강화

정책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증가 유치원의 경우 학급운영비 차등지원	①	②	③	④	⑤
2. 공공재정 부정청구 유치원 재정지원 중지 및 환수	①	②	③	④	⑤
3. 공공성 강화 조건(원비인상률 상한제 준수, 에듀파인, 처음학교로 사용) 준수 유치원에 재정지원	①	②	③	④	⑤
4. 공영형 유치원 재약정 추진	①	②	③	④	⑤

5) 기타 제안 의견

추가 및 기타의견

< 귀하의 개인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소속기관:

___ ① 대학 ___ ② 연구기관 ___ ③ 유치원 ___ ④ 기타()

2. 귀하의 연령대는?

___ ① 30대 ___ ② 40대 ___ ③ 50대 ___ ④ 60대 이상

3. 귀하의 성별은?

___ ① 남자 ___ ② 여자

4. 귀하의 학력은?

___ ① 학사 ___ ② 석사 ___ ③ 박사

5. 관련 분야 근무 기간은? (대학, 연구기관,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무 기간 포함)

___ ① 5년 이하 ___ ② 6~10년 이하 ___ ③ 10~15년 이하 ___ ④ 16년 이상

[부록 4] 학부모 의견조사지

서울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을 위한 학부모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서울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를 위한 학부모 대상 조사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유아교육과 유치원 정책 마련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바쁘시겠지만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적 사항이나 설문내용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조사자의 의무)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 연구책임 : 박 창 현(미래교육연구팀, 연구위원, 02-398-7789,) subi0407@hanmail.net

2023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본 조사의 응답 결과가 연구 보고서에 활용될 것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1. 응답자 현황

본 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며 현재 서울 시내의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치원에 2명 이상 자녀가 다니고 있다면 나이가 더 많은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자녀의 연령은 몇 살입니까? (만 세)
2. 부모님의 연령은 몇 세이십니까? (부: 만 세, 모: 만 세)

2. 서울 유아교육비에 대한 의견

현재 3-5세 대상 누리과정비는 국가가 무상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부분무상으로 누리과정비 28만원, 방과후과정을 7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비=유아학비+학부모 부담금)

3. 그간 누리과정비(무상교육비)는 2-3만원 폭으로 조금씩 올랐습니다. 누리과정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된다고 체감하시는지요?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3-1. (①, ② 를 선택한 경우)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

- ① 누리과정비 지원단가가 올라가도 여전히 학부모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 ②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너무 소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 ③ 누리과정 지원금이 간접지원으로 체감이 안되어서(간접지원은 기관을 통한 지원)
- ④ 홍보가 부족하여 잘 알지 못하여
- ⑤ 기타()

4. 현행 월 28만원 수준의 누리과정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인상이 불필요하다 ② 다소 인상이 필요하다 ③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5. 누리과정비의 적정 인상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5만원 이내 ② 5-10만원 ③ 10-20만원 ④ 20~30만원 ⑤ 30만원 이상

6. 만약 누리과정비가 인상된다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야는 보기중 무엇
입니까?(2개 선택)

- ① 교사 처우개선 ② 교육환경 개선 ③ 교재교구 지원 ④ 학부모부담금 인하
- ⑤ 기타()

7. 누리과정비가 인상되어 학부모부담비가 경감되면, 경감된 비용 만큼 아이의 사교육비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 ① 가능성이 매우 낮다 ② 가능성이 낮다 ③ 보통이다 ④ 가능성이 높다
- ⑤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⑥ 무상교육비와 상관없이 사교육에 투자할 것이다
- ⑦ 기타()

8. 세수결손(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것)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올해 세수가 적게 거치어 유치원 지원비용 및 초중고등학교 지원비용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11조 삭감, 내년 6조 삭감, 교육청 예산 전체 30% 삭감

- ① 유아교육예산 삭감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 ② 유아교육예산 삭감이 우려되지 않는다.
- ③ 보통이다 ④ 유아교육예산 삭감이 우려된다. ⑤ 유아교육예산 삭감이 매우 우려된다.
- ⑥ 잘 모르겠다.

9.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우선 투자해야할 곳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유초중등교육에 들어가는 재원임

- ① 교육복지회복(맞춤형 교육복지, 특수교육지원, 다문화교육, 급식지원 등)
- ② 정서회복(유아 건강 증진 지원, 심리안정 등)
- ③ 교육여건개선(학급당학생수 감축, 학교신증설, 과밀학교 해소, 공교육확대 등)
- ④ 미래교육기반구축(인공지능, 생태전환교육 등)
- ⑤ 학교공간재구조화(노후시설 개선, 놀이터개선 인권친화적 공간 조성 등)

11. 기타 의견이 있으시다면 작성해주세요

■ 설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부록 5] 학부모 의견조사 기타의견

이 외에도 자유롭게 기타 의견을 작성하는 문항에 대해 ‘애들 수가 너무 많아요.’, ‘자녀가 많아도 피부로 와닿는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자녀에 맞벌이로 일하는데 교육보육 관련 비용(유치원,어린이집,돌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폭 지원을 해도 부모가 추가로 납부하는 비용은 줄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줬으면 합니다.’, ‘6시 이후 돌봄교실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요즘..아이 둘을 보낼 경우 비용이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누리과정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도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받아 가는 교육비가 비싸기때문에 부담이 경감된다는 체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이걸 정부 탓만은 아닌 것 같다 강남 사립유치원도 여기만큼은 안 낸다 말이 안 되는 금액.. 것도 매년 교육비를 짹 짹 채워 인상이라니..’, ‘학부모와 아이의 교육 환경 및 안정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교사의 처우가 높아져야 하고 이는 교육기관 운영자가 아닌 보육교사 개인에게 바우처가 별도 지급 혹은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이 안정 되어야 그 뒤를 따라가는 다른 정책들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사들의 업무량이 줄어야 학생들에게 집중교육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사 복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원 원비가 다 다르기때문에 비용 오르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숲 체험 같은 게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은 북유럽처럼 완전 무상으로 가야 합니다. 현재 방과후활동 특별활동 등의 교육비 역시 교과과정 내 편입하여 무상으로 지원해야 유아교육의 질이 향상될거라 생각합니다.’, ‘맞벌이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적 차원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조금 더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싱글대디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 월급 기준으로 나라에서 도움과 미 도움을 나누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측정한 월급 금액보다 더 벌더라도 한부모가정은 다 같이 힘듭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꼭 필요합니다.’, ‘유치원 교사 지원해 주세요. 아이들이 정말 샘들의 사랑 덕분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어느 정도 하는 학부모입니다. 현 유치원의 교육시스템이 마음에 드나 유치원 측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싶어도 학부모 부담과 줄어드는 교육비지원으로 인해 중간에서 많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누리과정비 지원을 통해 교구지원과 교사처우 개선이 된다면 유치원 특성화나 교육활동 시간에 거는 기대가 커져 사교육보다 유치원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비 자체가 너무 비싸요 다른 지자체는 원비 안 내는 곳도 있다는데 유치원비부담을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누리과정비도 중요하지만 유치

원에서 하는 특별활동비가 비싸네요ㅠ’, ‘지원보다 중요한 건 잘 쓰이고 있는지가 문제라고 생각함’, ‘사교육을 떠나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모든 교육비용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 또한 아이들의 정서의 케어가 약하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많은 것이다. 교육뿐만 아닌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과 학부모부담 0원 나라지원 100프로와 교사처우를 똑바로 해준다면 더 좋은 교육환경이 될 것이다.’,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실질적인 부모교육을 필수로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는 너무 많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부 맘에 드는 정보만 기억하여 아이에게 양육하는 부모들 너무 많습니다. 교사랑 기관만 변한다고 교육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영향력이 제일 큼니다. 부모도 변해야 합니다.’, ‘학부모부담 경감해 주세요.’, ‘심각한 저출산으로 미래가 불안한 사회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치원의 경우는 학생 수의 비해 교실 공간이 무척 협소합니다. 과밀학교 해소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예산 없애고, 학생과 교사를 위한 예산만 증액하면 좋겠습니다.’, ‘출산절벽 운운하지 마시고 유치원도 무상교육 가야 하지 않나요? 초 중 고 다 되는데 유치원은 왜 안되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세수결손으로 지원금삭감이 초소화되길 바라며, 현재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만족하나 선생님들은 처우개선으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질적으로 향상되길 바랍니다.’, ‘나라에서 국공립을 많이 늘렸다고 하지만, 부모는 국공립에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나, 방학기간 등 사립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데, 사립은 시설이 조금 노후화 되어 있어 그 부분이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을 교육기관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 운영 유지될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를 보낼 때 경제적 부담이 줄도록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아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그 방법이 무상교육일지 의무교육일지 국가에서 지원금이 확대되는 것인지를 고민해 주시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잘 지낼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에게 열심히 교육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유치원에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니 보낼 곳이 없습니다 부모가 보내고 싶은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이 되도록 국가에서 도와주세요.’, ‘지원도 높여야 하고 부모가 낼 수 있도록 바꾸는게 좋겠습니다. 애 하나 보내도 방과후 40만원돈이 매달 나가고 둘이 다니면 80인건데 둘 보낼 내 후년이 너무 무섭습니다TT’, ‘다 자녀는 원비 부담이 크니 혜택을 늘려주세요.’, ‘공교육만으로도 교육비가 상당히 부담됩니다 정부 지원 확대를 기원합니다.’, ‘어린이집처럼 유치원도 무상교육이 필시 이루어져서 형평성을 맞추고 저출산 시대가 지속되는 만큼 질 좋은 교육환경을 형성하고 믿고 맡길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인데 예산 삭감이 말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정책으로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바람직. 아이 돌볼 시간이 없음.’,
‘인천 경기지역은 전액무상으로 교육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서울은 도대체 언제 실시
하나요? 내년도 만 6세 시범 실시 무산된 건가요?’ 등이 있었다.

서울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인쇄일 : 2023년 12월 22일

발행일 : 2023년 12월 22일

발행처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인쇄처 : (주)승림디앤씨 인쇄소(TEL : 02-2271-2581)